



www.uniedu.go.kr

북한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
북한이해 2008

북한이해

2008

○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1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 007
- 제2절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 • 011
- 제3절 북한의 생존전략과 변화 전망 • 016

2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 제1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 025
 -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의 진화 • 025
 - 2. 주체사상의 실효성과 한계 • 029
 - 3. 선군정치와 부상 • 030
- 제2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033
 - 1. 조선노동당 • 035
 - 2. 중앙기관 • 041

제3절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엘리트	• 046
1. 김정일 체제의 성립	• 046
2. 김정일 체제의 특성	• 047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 050

3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

제1절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 057
제2절 북한의 대외정책	• 059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 059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 061
제3절 북한의 외교실태	• 063
1. 북한과 미국 관계	• 063
2. 북한과 일본 관계	• 071
3. 북한과 중국 관계	• 076
4. 북한과 러시아 관계	• 080
5. 북한과 EU 관계	• 084
제4절 대남관계의 변화	• 087

4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 095
1. 북한군의 성격	• 095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 096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 099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 099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 101
	3. 계급구조 및 당 조직	• 105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 108
	1. 군사전략	• 108
	2. 상비전력 및 장비	• 110
	3. 예비전력	• 114
	4. 전략무기	• 115
제4절	최근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 119

5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제1절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	• 127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 127
	2. 군사·경제 병진 노선	• 129
	3.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 130
	4. 실리사회주의 노선	• 131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 133
	1. 거시경제 현황	• 133
	2. 부문별 현황과 과제	• 140
제3절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	• 149
	1.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 149

2.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전략	• 150
3.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	• 151
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전략	• 152
제4절 북한의 경제개혁 · 개방 추진내용과 과제	• 155
1. 7.1 조치의 성격과 방향	• 155
2. 북한의 경제개혁 · 개방 추진내용	• 156
3.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과제	• 165

6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제1절 북한의 교육	• 173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 173
2. 교육과정과 방법	• 182
3. 학교생활	• 188
제2절 문학과 예술	• 192
1. 문예정책	• 192
2. 분야별 실태	• 197

7 북한 주민의 생활

제1절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211
1. 북한 주민의 하루생활	• 211
2. 생애과정	• 213
3. 조직생활	• 215

제2절 북한 주민의 여가와 명절	• 221
1. 여가	• 221
2. 북한의 명절	• 223
제3절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 227
1. 식생활	• 227
2. 의생활	• 230
3. 주생활	• 231
제4절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 234
1. 종교관	• 234
2. 종교생활	• 236
제5절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	• 239

표 Tables

표 4-1	군 간부양성 과정	• 102
표 4-2	북한군 평일 내무생활	• 104
표 4-3	북한 지상군의 정기훈련 및 활동	• 104
표 4-4	북한군 원수·차수 및 장령 진급 현황	• 107
표 4-5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 109
표 4-6	남북한 군사력 비교	• 111
표 4-7	남북한 군사용어 비교	• 122
표 5-1	남한과 비교한 북한의 국민소득 및 성장률 추이	• 133
표 5-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 136
표 5-3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 137
표 5-4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 142
표 5-5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 144
표 5-6	북한의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 146
표 5-7	북한의 외채규모 추이	• 148
표 5-8	7.1 조치에서의 가격현실화	• 159
표 6-1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 183
표 6-2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 184

그림 2-1	북한의 권력체계	• 034
그림 2-2	조선노동당 조직체계	• 038
그림 2-3	북한의 행정체계	• 042
그림 3-1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 062
그림 4-1	북한의 군사 지휘체계	• 100
그림 5-1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 138
그림 5-2	북한의 주요 생필품 가격 추이	• 166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 175
그림 6-2	북한의 학제	• 177
그림 6-3	조선문화예술총동맹의 조직	• 196

북한이해 2008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 제2절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
제3절 북한의 생존전략과 변화 전망



양재성 | 통일교육원 교수

Key Point

Point

1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Point

2 북한은 당과 국가체제 위에 있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력갱생 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Point

3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신사고를 주창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변화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7. 1) 이후 성과급 제도의 인정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Point

4 북한은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 속에서 경제를 회생시킬 내부자원의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반목과 질시의 세월을 보냈으며, 세계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남과 북의 대결의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교류협력의 증대와 함께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 그리고 냉전의 흑백 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화해와 협력, 탈냉전의 새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등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가 함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가 사는 곳이며, 공존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의 북한은 경계대상이자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서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동포애를 증진시킴으로써 북한을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이라는 존재의 이러한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모색

하는 것이야말로 탈냉전 이후 화해협력시대에 요청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공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차원의 연구방법론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되어 왔다. 그 하나는 외재적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이다.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객관적·외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인식의 방법론을 말한다. 이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한다.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외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 인식의 틀로서, 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북한사회의 각종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방법론이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이 각각 북한이해의 방법론으로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관점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를 알리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내재적 접근법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채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양태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이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국민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때로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우리의 통일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북한의 당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등 신문, 당이론잡지 ‘근로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 등인데, 이들은 북한체제의 선전 도구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체제대립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대상은 객관적 관점보다는 당위성·주관적 인식 등에 따라 분석·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는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 감정에서 벗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에 우리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집단 혹은 경쟁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공존공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못하였지만, 화해협력을 통해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남북한 간 군사적 대결구도로 볼 때 북한은 분명 우리의 경제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가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낭만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현실적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게 한 '북한적 요소'는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서 북한사회 내부를 구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제2절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기초한 수령의 유일적 독재체제이며, 혁명의 전위대인 노동당 1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만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의 당규약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논리는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 체계이며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 순결체로,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¹⁾

이와 같이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사회에서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①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pp. 43~45 ;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10. 2), 『월간 북한동향, 1995. 10, pp. 173~174. 그러나 북한은 1997년 10월 10일 노동신문 기념사설을 통해 종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라고 지칭하던 것을 ‘김정일의 당’으로 호칭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모습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²⁾

북한에서 수령은 현재까지 김일성 개인에만 한정된 호칭이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어 '수령'이라는 호칭 자체를 김정일이 공식 계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³⁾ 그러나 북한이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수령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김정일이 수령으로서의 역할을 계승·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일은 이미 북한의 당과 군과 정권의 유일 중심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국가의 공식기구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제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⁴⁾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⁵⁾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

2) 김정일 논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 10. 17) 참조.

3)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서도 간혹 수령이라는 호칭을 붙인 바 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지속적으로 쓰이지는 않았고, 김일성의 경우와 같이 '위대한 수령'과 같은 용례로는 쓰인 바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이 수령 호칭을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백과전서』(제3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530.

5) 『경제사전』(제2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0, p. 118.

제체제' 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 작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7.1 조치) 이후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체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300여 개 이상의 종합시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농업부문에서 분조⁶⁾ 규모를 축소하고 분조원 개인에게 토지 200~400평을 배분하는 개인경작제 등 가족영농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2005년 6월에는 대남경협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7월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협법령을 정비하였으며, 2006년 4월에는 부동산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7.1 조치 이후 점차 법제와 조직의 정비를 통한 '관리되는 개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도, 7.1 조치 이후 '3실(實)', 즉 실리·실적·실력을 강조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당·정 인력들을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하였으며,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경제제도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대외개방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이다.

6 10~25명이 분조를 이뤄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받는 제도로, 1996년 분조규모를 8~17명으로 축소하였다.

북한에서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 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 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불만은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당·수령·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간부와 하급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3절

북한의 생존전략과 변화 전망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강성대국 건설을 앞세우며 경제 회복과 체제보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02년 7.1 조치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각을 대폭 개편하고 일꾼들을 젊은 전문가들로 교체하는가 하면, 핵문제에 대해서는 강온전략을 구사하며 미국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에는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10월에는 급기야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 및 북·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에서 다행히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및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특히 경제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새로운 세기에 맞는 신사고를 갖자”고 강조했고, 김정일은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를 시찰하면서 “천지가 개벽했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적지 않은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을 더 이상 방치했다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북한만이 변하지 않고 기존의 낡고 폐쇄적인 정책만을 고집하

다가는 경제난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낙오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체제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체제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금강산관광, 경의선 개통과 개성공단 추진, 투자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발효 등은 북한 변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교면에서도 과거의 진영외교에서 전방위외교로 전환하여 대결보다는 관계개선을 선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2002년 들어 북한은 7.1 조치를 취한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9. 12), 북·일정상회담 개최(9. 17),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10. 13), ‘개성공업지구법’ 제정(11. 20) 등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교조적이고 완고하기만 하던 과거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생존을 위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일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로서는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 2001년 들어 김정일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자”는 이른바 ‘신사고론’을 제창한 것이나, 상하이를 방문하고 중국의 변화상을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한 것 등에서 이러한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소비재의 절대적 부족과 외화난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 환경적 측면에서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외교적·정치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즉 남한이나 서방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탈냉전과 개방화라는 주변환경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도 북한체제 내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대외개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외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북한이 개혁·개방과정의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신선한 공기’(외국자본·기술)는 필요하지만 ‘모기장’을 쳐서 ‘모기’(자본주의 풍조)는 막겠다는 태도이다.

셋째, 개혁·개방에 따른 개인주의·물질주의 등 외래문화의 침투로 인한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 사상의 이완현상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1년 초 김정일의 ‘신사고’ 주장 이후 중국 상하이 방문(2001. 1)과 중국 심천경제특구 방문(2005. 1), 그리고 최근 북한의 보도 매체들이 “최단 시간 내에 강력한 국가 경제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경제 강국대열에 들어서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외자유치와 개방을 통한 경제 재건을 모색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3가지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

첫째, 북·미 적대관계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북·미 간 ‘교전관계’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미국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붕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북한의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시범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으로 북·미·일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중단된 바 있다. 또한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2007. 2. 13)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에 합의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합의한 2007년 말까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전망이다.

둘째,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그동안 수 차례의 남북 간 접촉과 2000년 6월, 2007년 10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덜기는 했지만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한 공존을 제도화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김일성-김정일 부자승계 체제라는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경험에 의하면, 지도자의 교체기 때 새로운 지도부가 전임지도자에 대한 비판,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재평가, 새로운 정책노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일 정권이 부자승계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사상해방'이 필요하며, 그 '사상해방'의 핵심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양립이 가능하다는 논리수정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하지 않고는 북한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전망을 살펴보자. 북한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식의 체제유지 방식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체제유지는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의 체제변화의 계기는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이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의 심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련될 수 있다. 비록 현재로서는 억제요인의 힘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촉발요인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체제의 상징인 김일성이 사망했고,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개방과 개혁은 집권층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서히 사회세력이나 비공식부문, 그리고 개혁성향을 가진 기술관료집단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평화공존의 관계로 정착되고 미국, 일본 등과 관계가 정상화되면 사회통제의 명분 또한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한적인 개혁·개방이다. 다른 말로는 ‘방충망식’ 또는 ‘땀질식’ 개혁·개방이라고도 한다. 이는 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정책 수준의 변화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적 수준의 개혁·개방 시도는 국가의 통제 약화 또는 사회의 국가에 대한 저항능력 강화 등으로 급격한 개혁·개방의 단계로 전변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급진적 개혁을 들 수 있다. 급진적 개혁·개방은 정책적 변화의 수준을 초월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과감히 수정하거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규모 정치변동에 의해 수반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일시적 개혁·개방 후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이다. 이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채택하겠지만,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고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할 만큼의 수위에 도달하면 권위주의로 회귀하여 정권과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개혁·개방의 관성적 힘을 억제할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경북대학교 출판부, 『새로운 북한이해』, 2003.
-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연구』, 1999.
- 김경오,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2000.
- 김구섭, 『향후 북한의 변화전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0.
- 김동규,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2000.
-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5.
- 방완주, 『조선개관』, 백과사전출판사(북한), 1988.
-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건국대 출판부, 2005.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2002』, 2002. 5.
- 백학순 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9.
- 소치형 외, 『북한의 이해』, 건국대출판부, 2005.
- 세종연구소, 『세계화와 남북한 사회·경제구조 변화』, 아르케, 2004.
- 신동천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이태건 외, 『21세기 북한학 특강』, 인간사랑, 2003.
-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연구』, 신지서원, 1999.
- 정민수, 『북한의 이해』, 시그마프레스(주), 2004.
-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선인, 2005.
- 정현수 외, 『해외자료로 본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06.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08 봄호.
-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2007.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 _____, 『통일백서』, 2008.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2006~2007』, 2006.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2007~2008』, 2007.

북한이해 2008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제1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 제2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제3절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엘리트

2

장익관 | 통일교육원 교수

Key Point

Point

1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적 토대 위에 민족주의, 유교사상, 인민의 주체성을 강조한 유심론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북한의 통치이념이다. 주체사상은 시대환경과 요구에 따라 내용적 변화를 피하며 북한식의 혁명적 사회 건설을 주도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Point

2 북한은 당이 국가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를 운영한다. 외형상으로는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내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총리, 그리고 국방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3인에게 국가권한이 배분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당과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다.

Point

3 심각한 경제난과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며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한편, 선군정치의 결과로 국방위원회 위원 등 군부 인사들이 주석단 서열의 상위를 점하는 등 북한체제 내 권력의 핵심부를 구성하고 있다.

● 제1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의 진화

주체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 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면서 주체사상은 그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라는 명칭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에 접어들면서이며,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조선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떨쳐내고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초기 북한정권의 이념적 강령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부분적 이탈을 의미한다. 사회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시각을 수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상부구조의 주요 구성체인 인간 의식이 사회변화와 역사전이의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

행한다고 강조한다. 즉, 주체사상은 경제적 생산관계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견해를 수정하면서,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해 경제구조와 사회와 역사가 변화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본질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토대 위에 일국사회주의와 일인독재 지배체제를 용해시킨 스탈린주의적 특성이 현저하게 부각된다. 주체사상의 귀결점은 북한 주민들의 주체의식을 주도하는 수령의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 행사의 양태는 스탈린식 독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단지, 스탈린식 일국사회주의가 다민족국가인 소련을 배경으로 구성된 반면, 북한식 사회주의는 단일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주체사상에 민족주의적 유산이 깊게 투영된 요인으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계에 대한 공포와 반감, 그리고 소련과 중국 등 거대 우방국과의 비대칭적인 협력관계의 불편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요인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기능하면서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제적 혹은 잠재적 적국들에게 둘러싸여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이른바 ‘포위 피해의식’(siege mentality)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반작용이 바로 주체사상에서 민족주의 강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족주의와 더불어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이탈시키는 또 다른 결정적 변수는 유교적 사상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래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유교적 전통은 강력한 절대권력의 통치자에 의한 후원주의적(paternalistic) 통치체제가 북한에 정립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유교적 전통은 스탈린주의의 특성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절대권력의 일인통치를 지원하는 주체사상의 문화적 하부구조를 북한사회에 생성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차별화시키는 추가적 요인으로는 유기체론적 사회 및 국가구성을 강조하는 유기체적 전체주의와 인간 의식이 사회와 역사를 주도한다는 유심론의 도입이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기체적 전체주의는 유교적 사상의 전통과 더불어 북한의 가부장적 일인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적 토대로 기능한다. 또한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유심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결국 주체사상은 다양한 사상들의 지속적 혼합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변형시키는 복합적 사고틀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논리적 일체

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여 북한주민의 대외적 주체 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구소련 및 중국 내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일인독재 지배체제 비판을 촉발함에 따라, 이같은 비판의 유입을 대내적으로 절연시키며 북한의 독재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한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교조주의자 대 수정주의자의 이념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전략적 대응이 정치이념적으로 표출된 측면도 있다.

1960대 이후 북한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에 치중하며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이론적 변환작업을 시도하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의 소년시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이라는 우상화 논리가 전개되었다.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인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른바 ‘수령론’은



○ 평양 시내의 주체사상 선전물

김일성 개인우상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수령론’의 내용은 인민대중들이 개별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상호 극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수령의 올바른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에는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세습수령에 대한 지속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더해진다. 주체의 위업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대를 이어가며 주체의 위업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유례가 없는 부자세습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습 전제왕조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시각까지도 바꿔놓은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연속적으로 붕괴함에 따라 북한은 체제 존속에 위협을 느끼고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건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한 동구권 사회주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래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로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1996년 이래 간행되고 있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 이론’ 시리즈는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 작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난제에 직면하면서 북한사회는 실리적 사고의 확대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념적 지배력을 수행하는 주체사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주체사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는 더욱 위축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선군정치 기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사회적 구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고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의 이념적 지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고사(枯死)의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끊임없이 재구성해 온 주체사상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변화를 도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주체사상의 실효성과 한계

북한의 주민들은 학습과 교화 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일상화하는 삶을 영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적 사회건설의 기초를 이루 며, 주체사상의 일상화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의 승리를 가져올 토대라고 주창한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 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며 무오류의 사상으로서 그 현실적 실천성을 확 보한 사상”임을 강조한다.

주체사상이 지닌 북한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실로 절대적이고도 전범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사상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 난 속에서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언급의 빈도가 축소되고 있다. 김정일 의 권력승계 이후 ‘붉은기 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강성대국론)’, ‘선군정 치론’ 등 경제난국에 대처하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적 성격의 슬로건 들이 주체사상을 대신하여 정치적 기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이 유일한 최고지도 이념이라는 공식적 위상과는 별도로 실질적 정책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도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극심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간혹 사회주의 국가의 생필품 수급체계에서 사실 상 소외된 개인들이 나름대로 자기생존의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한 자기정당화 논리로 주체의 의미를 활용하는 풍조도 북한사회 내에 나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체의 기치가 내실없는 외형적 슬로건으로만 지속되는 상황 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대두는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가 북한의 붕괴 우려에 대한 효율적 대응기제로 작동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 것은 명백하다.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 에서 볼 때, 인간의지의 절대성과 유물론적 경제결정주의가 공존하는 이론 구성에 서 과연 논리적 일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간의 불명확한 상호 연계성도 추가적 논란을 구성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

연대주의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간의 논리적 상충 여부 등 주체사상을 둘러싼 여러 이론적 질문들은 체계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민족주의, 유교사상, 유기체적 전체주의, 인간 중심의 유심론 등 상충될 수 있는 이념들의 난삽한 집산체로 구성된 주체사상에 대해 명쾌한 논리적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기치가 사실상 개인의 권력 독점 및 이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이상화라는 왜곡된 용도로 차용되면서 주체사상은 그 진실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수령론’의 근거에서 인민대중은 주체가 상징하는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자세습화를 추구하면서 주체사상은 주인 잃은 의식과 행동의 강령으로 표류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초법적 통치이념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신격화된 김일성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서 그간 북한체제의 존립 자체를 대변하는 이념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체사상이 내적 논리상의 오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내외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켜가는 국가이념 체계로서의 주체사상의 한계는 너무도 명백하다.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원적 해법은 북한사회에 내재하는 총체적 경직성의 탈피일 것이다. 그 같은 경직성 탈피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과제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주체사상의 해체뿐이다.

3 선군정치의 부상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 준비되던 1995년 초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북한의 핵심적 통치 기치로 정착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며 북한사회의 발전적 추동력을 제공하는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군의 영향력을 정치 및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투영시키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당을 제치고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 기구로의 위상 제고를 피하게 되었다. 군 인사의 정치참여를 공식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등 군을 정치의 전면으로 대두시키는 선군정치는 북한식 군국주의 정치의 대두를 주도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후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당이 인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인민은 정권에 대한 지지 및 정통성을 부여해 왔던 사회주의적 후원주의 체제를 와해시켰다. 선군정치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고 또한 당의 역할까지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의 내적 정통성을 제공하는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북한식 군국주의를 통해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는 군의 확대된 역할을 통해 군을 인민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군에 대한 인민의 의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가 아닌 군이 사회 내의 방대한 연결 고리를 토대로 다각적 사회통제를 시도하는 당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군과 인민의 일원화를 추구한다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는 지도자와 인민 사이에 사회 외부적 조직인 거대한 군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통해 인민 우위를 정립시키는 정통 사회주의의 통치 방식을 포기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식 군국주의로 이행한다는 비판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악화되는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대외적 안보위협에 대한 북한의 증대된 불안이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왔고, 최근 수년 동안 부시 행정부와 대결적 구도는 자위적 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제고시켜 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와 북한사회에 내재된 군국주의 성향 등은 선군정치의 발현을 후원하는 국내적 요인들이다. 이미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보존하고 있는 군사부문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 또한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배경 요인이다.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직면하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기존립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는 김정일 정권에게 선군정치는 정권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선군정치는 산적한 대내외적 문제들 속에서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김정일 정권이 체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난국과 외교 고립의 두 핵심 난제가 해소되어 체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선군정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선군정치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여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부상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군정치사상은 주체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체계라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는 정치 슬로건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선군정치사상이 독자성을 확보하는 통치이념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구성과 내용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진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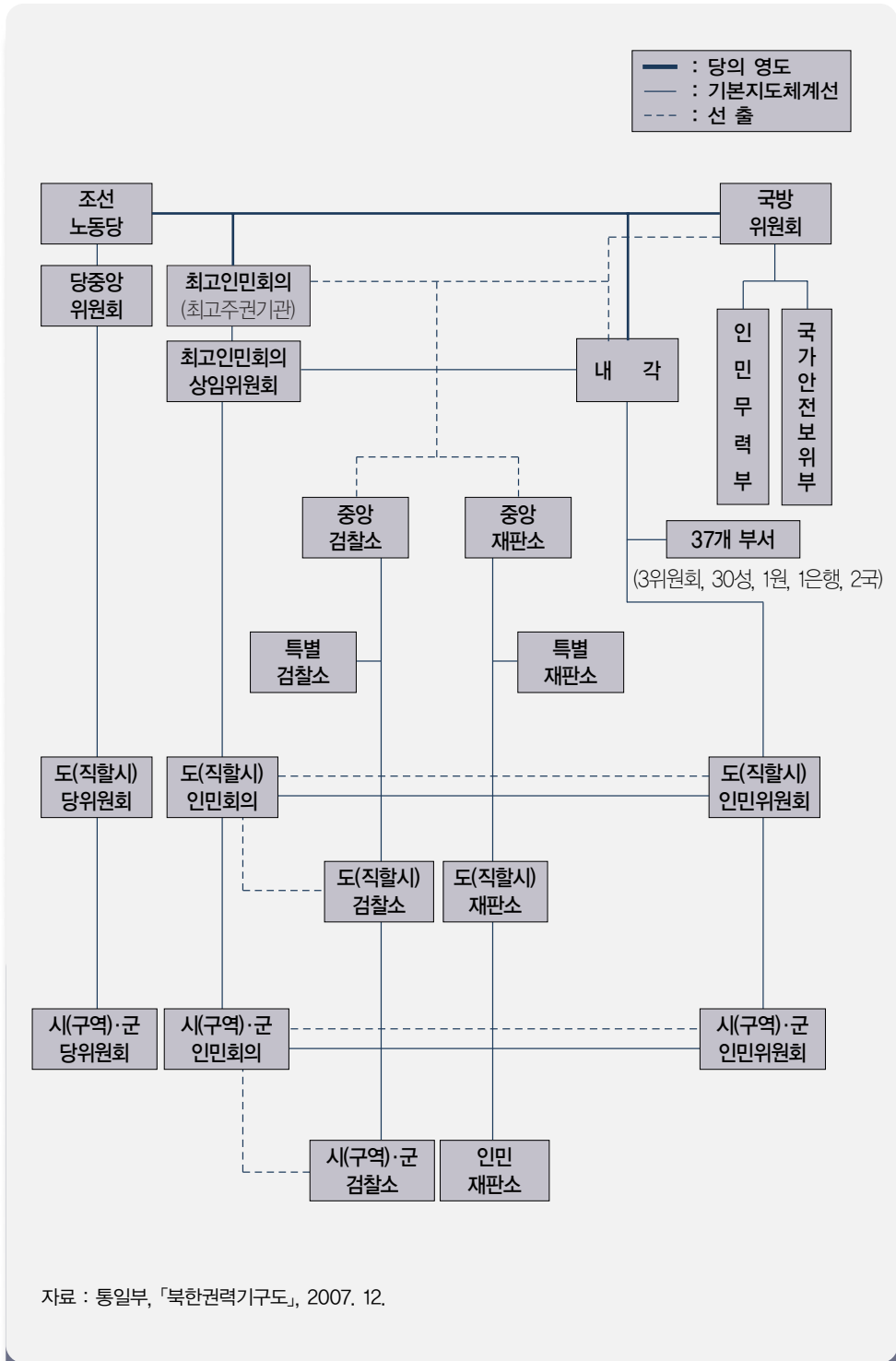
● 제2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의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선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의 원천으로 타 국가기관이나 단체 및 군부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물론 최근 들어 선군정치라는 기치가 강조되면서 당의 주도권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군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현재 자신의 정치체제를 ‘군 중시의 당·국가체제’로 규정하고 선군정치란 당의 지도 하에 군사선행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당이 국가정책 결정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재판기관은 국가정책과 관계된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삼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사회 내 부분 이익들을 대변하는 파당들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한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가 극도의 사회유기체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사회와는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1998년의 헌법개정은 김일성 시대의 독점적 일인권력지배를 상징하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대신 국방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내각총리 3인에게 국가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의 대표권을 분리하여 공식적 국가수반의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맡기고,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은 내각총리에게 부여하는 한편, 국방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형식상의 기능분립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위



자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7. 12.

○ 그림 2-1, 북한의 권력체계

원장이 사실상의 국정을 주도하면서 공식적 국가수반과 실질적 권력자 사이의 괴리가 일어나는 변칙적 형태의 정부구조가 과도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은 현재 당 비서국 총비서 및 정치국 단일 상무위원의 지위를 겸임하면서 북한 인민군을 통수하는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장의 자격으로 북한 통치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은 3개의 거대한 관료조직을 보유하고, 이들을 통한 국가주의적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300여만 명의 조선노동당 조직과 117여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민군 조직, 그리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정부조직은 북한 국가체계의 명실상부한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1 조선노동당

[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개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의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조선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킨다. 조선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3부 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유일수령의 영도체제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당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되는 셈이다.

결국 조선노동당은 개괄적 수준에서는 북한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의 수령중심체제 하에서 조선노동당은 계급정당이지만 동시에 수령의 당으로서 일인지배를 후원하는 사당(私黨)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은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그 핵심 업무로 관장하게 된다.

조선노동당의 의사결정구조와 집행체계는 레닌이 고안한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적 중앙집권제란 하부조직 대표가 상급 당조직을 구성해 나가면서 일반 당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열린 논의를 통해 수령, 조정하여 점증적으로 상부로 올리는 일련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당원이 이에 절대적으로 구속되며 어떠한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레닌이 자신의 독재적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반대자들을 ‘인민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숙청하는 데 활용한 제도로서 높은 악명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당내에 확보하여 당의 일시불란한 획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령의 일인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틀로서 기능한다. 결국 하의상달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흔적을 감추고 상의하달의 중앙 집중주의 원칙만 남은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인독재에 호응하는 제도로 전락한다.

[2] 당 조직체계와 기능

조선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이다. 당규약은 당대회가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는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인민을 교육시키고 당의 업적이나 과업을 널리 선전하며 당

에 대한 지지를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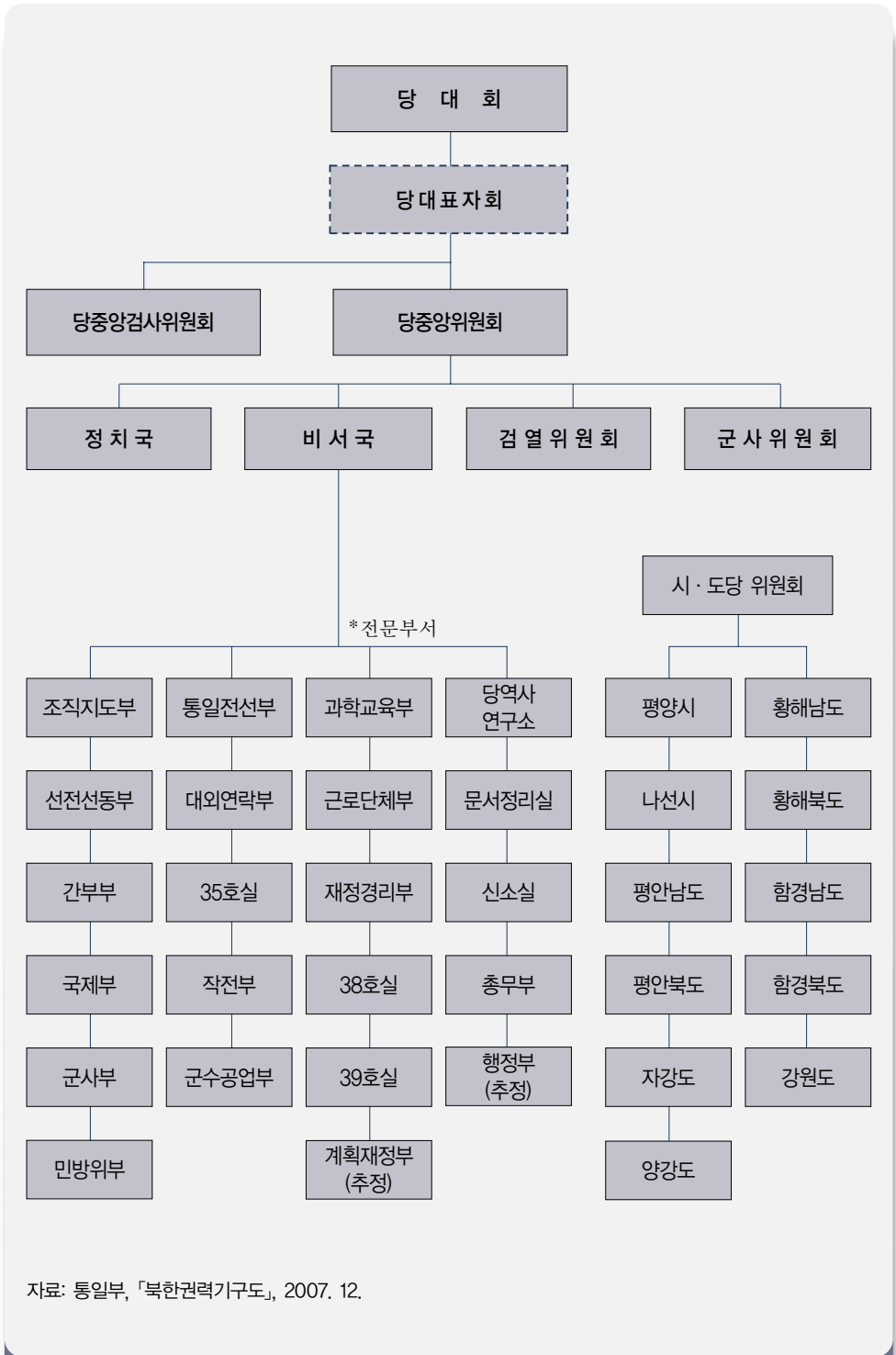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권한은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위원·후보위원·준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 또한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모든 의사결정은 당연히 당 정치국과 그 핵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결되지만,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체제로 남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 비서국은 당 인사 및 당면과제 등을 토의·결정·집행하는 당내 핵심부서로서, 비서국의 수장인 총비서는 김정일이 맡고 있다.

정치국 위원과 비서국 비서가 중복 임명되는 상황에서 정치국과 비서국의 위상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정치국은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등 원로급 인사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비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서국은 22개로 추정되는 산하 전문부서를 이끌며 당 업무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하 전문부서 중에는 김정일 총비서가 부장직을 겸임하는 조직지도부의 기능이 두드러지며,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최측근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모든 당무를 관리한다.

조선노동당의 지방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 위원회는 상하 당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같은 중첩적 위계구조는 당의 조직력 강화에 효율성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대신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약점을 수반한다. 만약 상명하달의 정점 혹은 중간 매듭에서 독단이 야기되는 경우 이러한 위계구조가 초래하는 역기능은 현저할 수밖에 없다.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자료: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7. 12.

○ 그림 2-2, 조선노동당 조직체계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 그리고 최하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위원회의 책임비서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당비서보다는 행정책임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특히 북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주민들에 대한 당의 생계지원 기능이 위축되거나 상실되면서 당의 사회장악력이 약화되고, 더불어 당비서의 권한도 제약되는 현상이 엿보이고 있다.

[3] 행정, 군 및 여타 단체와의 관계

북한의 권력구조는 집중적 권력을 지닌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 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당내 기구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며, 추진된 정책은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도록 요구받는다.

군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비서국은 군전력 및 군수산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군부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 혹은 정치지도원을 파견한다. 조선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한편, 당 지도부의 실질적 관할 하에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군내에 조직되어 당의 군부 통제기능을 보강한다.

이러한 당-군 관계는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의 개정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어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규약에 국방위원회 등에 회부되는 모든 국방사안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전토의 및 의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김정일의 핵심 참모들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비서국을 이끌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평가는 반박되기도 한다. 당과 군부의 관계 변화는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조선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조선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준국가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조선천도교청우당도 유명무실한 단체로서 기껏해야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사실상의 준국가단체로서 조선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제한적 범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 : 2직할시(평양·나선), 9도, 25시, 147군, 267노동자구(2007년 12월 현재)

- 노동자구는 광산, 임·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일종의 취락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별도로 설치된 행정구역

2 중앙기관

[1] 최고인민회의

공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두 차례의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정수는 매 대의원 선거시 인구증가율에 따라 결정하며, 통상 인구 3만 명당 대의원 1명의 비율을 유지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고,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소수의 원로인사급 명예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



○ 북한의 만수대 의사당



자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7. 12.

○ 그림 2-3, 북한의 행정체계

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과 폐지,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대사권 및 특사권 행사 등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대사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2] 국방위원회

1992년 7차 헌법에 의해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하여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개정헌법에 이르러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복수의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방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핵심 국방정책과 국방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과 해임을 담당하며, 국가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방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국방위원회는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두고 군과 정보라는 국가안보의 양대 요소를 관할한다.

[3] 내 각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3위원회, 30성, 1원, 1은행, 2국 등 37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내각의 수장은 내각총리로서,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 밖에 내각 성원의 임면에 관한 제의권을 갖는다. 현재의 내각총리는 김영일이며, 일정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내각의 지도 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장악·지도·관리·추진한다.

[4] 사법기관

1)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재판은 3급심제를 원칙으로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하부 기관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도재판소는 도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4년이다. 도재판소는 관할지역 내 인민재판소의 재판을 감독하며,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재판한다. 인민재판소는 최하급 재판기관으로 시·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 개의 시·군을 모은 단위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인민재판소는 일반범죄사건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며, 중재·법령해설·자료해석·법률상담 등 군중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북한의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나 종업원회의에서 선임한다. 군사재판소는 군 및 사회안전기관 소속 인사의 범죄를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 및 철도운수사업 관련 범죄를 취급한다. 특별재판소는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는다.

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

회주의 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와 더불어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동일하게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시·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중앙검찰소는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급 검찰소가 상급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일체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중앙검찰소가 담당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 제3절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엘리트

1 김정일 체제의 성립

독점적 단일지배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자신의 차기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선택하여 부자세습을 단행하였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후 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와 내각 등에서 업무경험을 쌓고 31세의 나이에 막강한 당 조직지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1980년의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당 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과 군 양자를 주도하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핵심적 대외이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정책영역에서 김일성의 공식적 후계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980년대 김정일은 북한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이 포함된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91년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김정일의 주도적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은 군사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듬해 1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후, 1993년의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여 북한의 군통수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위상으로

자신의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다. 3년여의 체제 정비작업 이후 1997년 말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9월 개정헌법을 통과시키면서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올라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출범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최근까지 심각한 경제난과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비교적 안정된 권력기반을 구축하며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통치의 자신감을 확보한 김정일은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문호를 일부 개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초래될 북한 체제의 이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 김정일 체제의 특성

북한의 김정일 통치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여러 특성들을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이들과 차별화된 특성들을 보유한다. 김정일 체제의 첫 번째 특성은 독특한 일인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일인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념체제가 주체사상이다. 혁명적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김정일 체제의 두 번째 특징은 군사 우선주의이다. 통상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 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도모한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한다. ‘선군후로(先軍後勞)’, ‘총대가정론’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는 북한의 대표적 슬로건들이다.

나아가서, ‘선군정치론’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을 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로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아끼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

꾼들과 정치일꾼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지도 아래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군정배합’ 등의 슬로건도 선군정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의 기치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군부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확장하며 그 영향력을 사회 내에 증대시키고 있다. 군부는 주요 건설사업에도 자체 병력을 투입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은 군 주도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 일면 침체된 북한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훈련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피폐해진 경제 하에서 노동의욕을 상실해 버린 북한주민들을 산업현장에 재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의 선도적 모범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군정치 역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국가 자주성의 수호는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국가지도방식이라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북한 핵 위기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어조가 대내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의 기치가 북한사회를 이끌면서 군부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세 번째 특성은 위기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끊임없는 정치적 슬로건의 생산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실리사회주의 체제의 구현 노력이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결속을 새로이 다지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 ‘강성대국론’이다.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체제의 위기시대를 넘기면서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일성 사망 직후 3년여의 자연재해와 피폐해진 경제로 인해 최악의 국난 시기를 경험하는 동안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내세운 바 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주민의 결속과 재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강성대국론’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실현하는 것으로, 북한 스스로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강국의 건설만이 미

결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김정일 체제가 주도하는 개혁과 개방의 수준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이 반영된 반작용적 슬로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 기풍을 요구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올바른 사상적 기초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종자론’을 내세우는 것도 개혁과 개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양면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특별행정구 추진,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관광지구 확대,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등 일부 개혁과 개방의 조치들도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체제 생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2006년 말 이래 북·미 간의 관계도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등, 그간의 악화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다소 완화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자력으로만 극복하기는 힘들며 외부의 광범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외교적 환경의 개선은 반드시 풀어야만 할 숙제이며, 북한이 향후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국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선군혁명 총진군대회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장기간의 일인지배 체제 하에서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은 정점의 권력자에 대한 무제한적 충성심이 출세의 일차적 요건임을 체득하여 왔다. 절대적 권력자를 향한 권력엘리트 간의 치열한 경쟁구도는 권력엘리트 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반면 동일인을 지향하는 충성심의 공유는 권력엘리트 간의 내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권력공유의 자기이익적 인센티브가 가미되면 내적 결속력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권력엘리트들 간의 회피할 수 없는 경쟁과 협조의 이원적 구도는 북한의 일인지배 체제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은 당 주도의 국가체제의 특성에 맞추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 및 당 비서국, 그리고 최근 위상이 제고된 국방위원회에 몰려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내각의 경우 정책적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주요 소속각료들이 새로운 권력엘리트로 부상하고 있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통상 노년의 항일 빨치산 세대, 장년의 혁명2세대(3대혁명소조 지도세대), 청년의 혁명3세대(3대혁명소조 참가 학생세대)로 나뉜다. 현재 70~80대의 혁명1세대는 권력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고, 40~50대의 혁명3세대들이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심 권력엘리트는 김정일의 친위세력으로서 김정일과 젊은 시절부터 친분을 갖는 대학 동기나 당 조직지도부 동료들을 다수 포함하는 혁명2세대로, 50대 후반에서 60대의 연령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1960년대 후반 이래 김정일을 보좌해 온 측근들로 당 정치국과 비서국 및 국방위원회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일이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경제, 외교, 기술, 행정 등의 영역에서 구소련의 해외유학과 등이 정책요직에 충원되면서 북한 권력엘리트의 색채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시작하게 된다. 같은 해 7월에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687명 대의원 중 64%가 젊은층으로 교체되고, 내각의 경우도 젊은 실무형 간부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2003년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선거에서도 전체 대의원 중 50%의 대의원이 교체되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김광린, 한성

룡, 박남기 등 경제 전문가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남사업 관련 인사인 정운업, 최승철, 김영성 등이 새 대의원 그룹에 진입하였다. 군부인사의 경우 제10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무려 100여 명이 제11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는 주석단의 서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3~4년간 북한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주석단 서열을 분석해 보면 군부인사의 상위권 진출이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일 내각총리를 제외하면 주석단의 최상위권 서열은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김격식, 김일철 등 국방위원회 및 군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한편, 원로인 박성철과 김영주는 2004년 이후 주석단 서열에서 제외되어 북한 엘리트의 세대교체가 완료되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조선노동당 간부들의 서열은 박성철과 김영주의 이탈로 인해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당 정치국 정위원인 김영남과 전병호 이외에도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등 후보위원들이 현재 주석단의 10위권 안팎의 서열을 차지하며 당 정치국의 위상을 나름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예전과 비교할 때 위상이 다소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1993년 이래 당 정치국의 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위상 약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김정일 체제에 접어들면서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지위 상승이 당 정치국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위권 밖의 서열은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등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곽범기, 노두철 등 내각 부총리들이 잇고 있다.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 ●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출판사, 2004.
- 김인옥, 『김정일 장군: 선군정치이론』, 평양출판사, 2003.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출판사, 2000.
- 이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1 :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2 :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 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4.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 연합뉴스, 『2004년 북한연감』,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2008』, 2008.
- _____, 『2007 북한의 주요인물』, 2007.
- _____, 『2007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7.
- 통일연구원, 『김정일 정권 10년 : 변화와 전망』, 2004.
- Ahn, Chan-il, "North Korea's Ruling Ideology : The Substance and Falsehood of Juche Ideology," *East Asian Review*, Vol. 9, No. 4 (Winter 1997).
- Bermudez, Joseph S.,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 : Allen & Unwin, 2001).
- Breen, Michael, *Kim Jong-il : North Korea's Dear Leader* (New York : Hon Wiley & Sons, 2004).
- Kim, Samuel S. ed.,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 (New York : Palgrave, 2001).
- Lankov, Andrei, "The Natural Death of North Korean Stalinism," *Asia Policy*, No. 1 (January 2006).
- Mansourov, Alexandre Y., "Disaster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DPRK: Trends in the Songun Era," *KEI Academic Paper Series*, Vol. 2, No. 9 (September 2007).
- Oh, Kongdan & Ralph C. Hassig,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Washington, D.C. : Brookings, 2000).

Park, Han S, *North Korea :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 “Military–First Politics: Understanding Kim Jon–il’s North Korea,” *KEI Academic Paper Series*, Vol. 2, No. 7 (September 2007).

Quinones, C. Kenneth & Joseph Tragert,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Understanding North Korea* (Indianapolis : Alpha, 2003).

Suh, Dae–sook, “Military–First Politics of Kim Jong Il,” in Byung Chul Koh, ed.,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Seoul : IFES, 2002).

Yang, Sung Chul, *The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 Hollym, 1999).

북한이해 2008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

제1절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 제2절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제3절 북한의 외교실태 | 제4절 대남관계의 변화


3

양재성 | 통일교육원 교수

Key Point


Point

1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각국들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Point

2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서방국과의 수교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160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Point

3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결과 협상을 반복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Point

4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2007년 2월 13일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하였으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제1절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북한은 기본적으로 체제의 유지·발전과 한반도 적화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외교활동의 목표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생존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원조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공산권의 소멸과 동서 냉전의 종식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의 제1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던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소멸과 그에 따른 공산권과 북한 간의 각종 교류협력관계의 중단은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공산권의 붕괴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추진하였고, 남한과는 1991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8년 9월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변화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외교활동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체제안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하에 핵·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브라이트 미

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회담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양측 관계는 후퇴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던 북한은 2000년 수교회담을 재개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제3차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나섰다. 이어 2002년 4월 북·일 적십자회담과 국장급 회담을 거쳐 같은 해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어 ‘평양선언’을 채택하였고, 2004년 5월 22일에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수교협상 등 북·일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인해 북·일 관계 개선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전방위 외교활동은 대 EU 관계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12월과 1999년 11월 유럽연합과 2차례에 걸친 정치대화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9월에는 제5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백남순 외무상이 유럽국가 등 20여개국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무대를 활용하여 경제지원 확보 등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전방위 외교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 EU 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27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등을 제외한 25개국과 수교하였으며,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획득 및 경험추진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러시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과는 김정일의 네 차례에 걸친 방중(2000. 5, 2001. 1, 2004. 4, 2006. 1) 및 장쩌민 주석의 방북(2001. 9, 2005. 10)과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2005. 10, 2006. 1)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회복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응하면서 다방면적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와도 정상 간 상호방문(2000. 7. 푸틴 대통령 방북, 2001. 7~8, 2002. 8. 김정일 방러)을 통해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2002년 8월 김정일의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 시에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및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도 하였다.

● 제2절

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된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¹⁾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²⁾ 또한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³⁾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의 단결”이라는 기본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로 수정하여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

과거 북한의 외교활동은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라는 구조와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요인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⁴⁾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비동맹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 수교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냉전의 종식에 따른 구소련 해체와 동구권 몰

①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 131.

② 1980. 10. 제6차 당대회총화보고와 1997. 6. 김정일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도 자주·평화·친선을 외교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1998년 개정헌법 제 17조.

④ 통일부, 같은 책, p. 131.

락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종래 사회주의권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진영외교 및 비동맹에 주력하던 외교활동은 변화를 맞고 있다.

경직된 통치이데올로기와 계획경제의 한계 및 내부자원 고갈에 의해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사라진 현실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확대를 시도하여 왔다.

이런 맥락 하에 오늘날 북한의 지역별, 대상별 외교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⁵⁾
- ② 중국, 러시아 등과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 동지적 유대가 약화된 상황에서 전통적 우호·친선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
- ③ 전반적으로 비동맹외교의 퇴조 속에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
- ④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과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유대 강화를 도모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은 이념·정치 위주에서 실리 및 경제를 강조하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다. 구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성 강화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경제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5) 이러한 노선은 이미 1970년대에 표명된 바 있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1972. 12. 10)에서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대해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표방하였다.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북한에서 대외정책은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 우위 체제 특성상 실제로 외교정책은 노동당의 지도에 따른다.

노동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이를 심의·결정하며 그 중심 역할은 대외 문제를 관장하는 비서국의 국제부가 담당하고, 여기서 결정된 문제가 최고인민회의에 통고·추인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그 집행은 형식상 당과 정권기관인 내각이 분담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요 책임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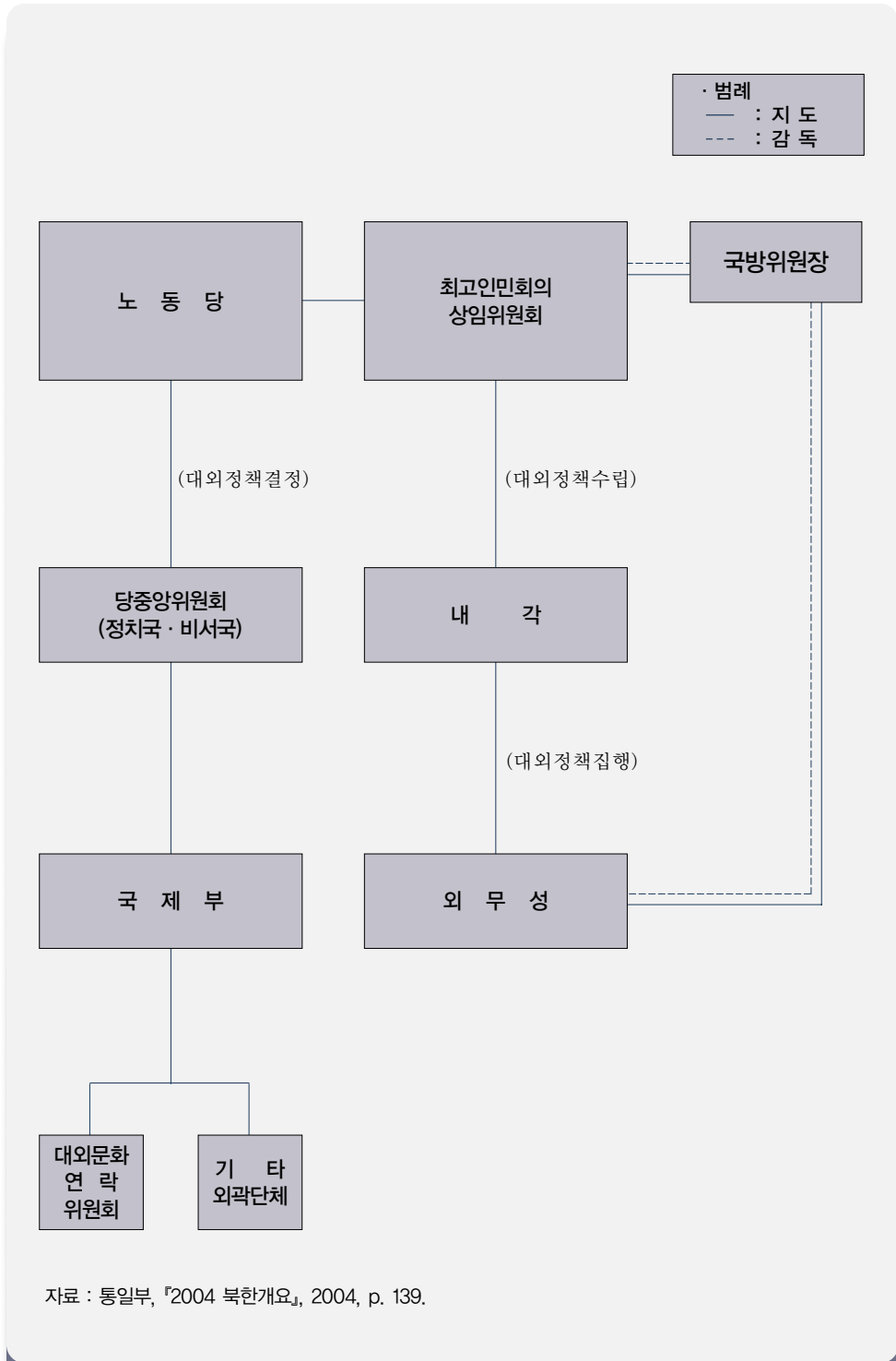
과거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외교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대폭 이관되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발표한다.

정부 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정당외교는 당 국제부가, 의회외교는 최고인민회의가, 민간외교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맡고 있다. 내각의 외무성은 과거 정무원 외교부에 비해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상과 다수의 부상들이 30여 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업무는 당과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 의해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간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에 대한 대외 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 그림 3-1,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 제3절

북한의 외교실태

1 북한과 미국 관계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구소련 및 동구권 붕괴로 외교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 온 구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자,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 왔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 ‘벼랑 끝 외교(brinksmanship policy)’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여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양국 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의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대해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들을 유지해 왔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1998년 8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평북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 핵 의혹시설에 관한 협상을 4차례 개최, 1999년 3월 북한이 미국 측의 복수 현장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60만 톤의 식량을 제공받았고, 1999년 5월과 2000년 5월 미국의 현장방문단이 금창리 터널을 2차례 조사함으로써 지하 핵 의혹시설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9년 9월 ‘북·미 베를린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

고,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본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여 한국·일본과의 공조 하에 향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협상에 가속도를 붙였다. 2000년 10월 조명록의 미국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방문으로 외교대표부 설치, 실종 미군 신원확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 북·미 간의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실천을 보지 못했다.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1년 2월 말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양국 간 합의사항 준수를 미국에 촉구하는 한편,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미국의 대북 강경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같은 해 6월 6일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공식 선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이어서 같은 달 13일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와 잭 프리처드 미국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 간의 뉴욕 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화재개 제의를 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하였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테러와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대외정책의 기초를 반테러 협력에 둘 것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 및 지원 확보에 치중하였다. 9.11 테러 이후 북한은 테러와 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부당한 무력행사로 비판함으로써 북·미 관계는 여전히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로 규정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는 등 크게 반발하였다. 더욱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IAEA의 감시 하에 있던 핵 관련 시설의 동결을 해제

(2002. 12)하고, 사찰관을 추방하는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왔다.⁶⁾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이 ‘북·미 제네바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쌍무적 약속뿐 아니라 NPT, IAEA 핵안전협정 등 국제사회와의 합의 위반 행위이고, 북한의 핵 포기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핵문제가 WMD를 생산·확산시키려는 ‘불량국가’의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평화를 수호하려는 국가들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며, 다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다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정권교체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오직 미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미 간 직접협상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중재노력 또한 강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5월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선(先) 북·미 회담, 후(後) 다자회담’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비확산안보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갔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이 북·미 간 회담을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

6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p. 146~148.

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등 관련 국가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가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회담 개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미국을 압박하였다.⁷⁾

북한은 제1차 6자회담 종료일인 8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1차 6자회담 참여국의 기조 발언문 요지를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자신들의 '총적 목표'이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위협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필요한 조치들을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이징 3자회담에서 제시하였던 단계별 해결방식을 재차 제시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담보 및 정치·경제적 혜택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책과 상호 조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첫째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셋째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제1차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대표단 단장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의장 요약문 형식으로 회담 참여국들이 대화지속을 통한 이견

7) 북한은 8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의지에 대한 명백한 확인을 요구하고 ② 동시행동 원칙에 의한 핵문제 해결방식 수용을 촉구하며 ③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전 조기사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율,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차기 회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 항에 의견을 같이했다고⁸⁾ 설명하였다.

2004년 2월 25~28일 제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 핵폐기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핵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서 한국·중국·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군사용 핵만 동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핵 동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한국은 제2차 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 동결에 상응해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보다 신축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 6월 23~26일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보다 융통성 있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이를 전제로 핵개발을 동결하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임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2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체제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미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여 경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며, '핵동결 대 보상 방안'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200만 KW 상당의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수용하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찰방식은 6자회담 참가국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⁸⁾ 『조선중앙통신』, 2003년 8월 29일자.

제4차 6자회담에서는 연이어 개최된 1단계 회의(2005. 7. 26~8. 7)와 2단계 회의(2005. 9. 13~16)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 발표에 성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조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혹은 재래무기로 공격·침공 의사 불보유
- 남한 내 핵무기 부재 확인
-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2조 : 관계정상화

- 미·북은 상호 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조치
-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

3조 : 대북 국제적 지원

-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 증진
-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 한국은 200만 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4조 :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 직접 당사국들 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5조 : 이행원칙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9.19 공동성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북·미 간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성명 채택 2개월 뒤 열린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2005. 11. 9~11)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일관하다가 결렬되었다. 이후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겪던 중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고조시킨 데 이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10월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으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3개월만에 재개된 이 회담에서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문제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베를린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6자회담 재개방안 및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을 지향하는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2.13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5차 6자회담 폐막회의에 참석한 6개국 수석대표들(2007. 2. 13)

• 초기단계 이행계획 : 60일 이내

-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 북·일 관계정상화 대화 개시
- 중유 5만 톤 상당 에너지 지원

• 5개 실무그룹 구성 :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 다음단계 이행계획 :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6자 장관급회담 개최 :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한반도 평화체제 : 직접 관련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 협상

• 차기회담 개최 : 2007. 3. 19.

‘2.13 합의’에 따라 2007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어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 5개 실무그룹 보고를 청취하고 초기조치 이행 및 다음 단계 행동계획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그동안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BDA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자,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IAEA 관계자들을 초청하였고, 영변 5MW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 동결을 시작하였다.

이어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어 10

월 3일 합의문이 공식 채택되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른 비핵화 제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이란 제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와 핵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12월 31일 이전에 불능화해야 하며 핵 물질이나 핵 기술, 핵 지식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0.3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
-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추진
-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노력
- 중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 지원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목표시한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는 등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2 북한과 일본 관계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부터 쌍방 간에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 간의 데탕트와 특히 미국과 중국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남북대화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개선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수교문제는 1980년대까지 잠재화되어 있었다.

1991년 11월에 평양에서 북·일 간 수교 교섭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제8차 회

담까지 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합방조약의 효력과 한·일 기본조약의 적법성 문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 북한의 핵사찰 문제,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와 북송 일본인 처의 본국 왕래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서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1992년 6월에 일본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수교교섭의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1993년 11월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교섭을 중단시켰다.

1994년 10월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채택된 이후 1995년 3월 30일 북한과 일본은 수교교섭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일본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북한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교교섭이 재개되지 못하다가 1997년 8월에 베이징에서 교섭이 재개되었다.

1998년 8월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일 관계는 한때 급격히 경색되었으나 1999년 들어 경색국면이 다소 완화되었다. 일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적극적인 경제원조와 외교관계 개선을 약속한 페리의 정책권고안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하고 북한 역시 미사일발사 유예를 선언한 데 편승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취했던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식량지원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도 1999년 8월 정부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1992년 이후 중단됐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의 재개로 이어졌다. 무라야마 도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한 일본 초당파 의원대표단이 1999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년 4월, 7년 반 만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제9차 본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했으며 제10차 본회담은 같은 해 8월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제11차 본회담도 2000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지만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과거청산 요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11차 북·일 수교회담 이후 일본경찰의 조총련계 은행 수색, 괴선박 사건 등으로 북·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차기회담 개최가 지연되다가 아세안지역 안보포럼(2002. 7. 31~8. 1)을 계기로 북·일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은 양국 관계 정상화 조기 실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북·일 국장급회담(2002. 8. 25~26, 평양)에서 미해결 현안 협의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을 방

문하여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4개항의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⁹⁾

이후 북·일 양국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년 만에 수교회담을 개최(2002. 10. 29~30, 쿠알라룸푸르)하였으나, 일본의 핵개발 포기요구 및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등으로 차기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한편 북한이 같은 해 10월 15일 납치 생존자 5명에 대해 일시 고향방문을 허용하여 이들의 일본방문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월 24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고 일본에 영주 귀국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도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고 일본의 대북여론 악화 등으로 대북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월에는 만경봉-92호 등 일본에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사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만경봉-92호의 운항 일정이 조정되기도 하였다.¹⁰⁾

북한은 일본 당국의 선박 검사활동 강화와 2003년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유사시법제 등을 ‘대북제재’, ‘조선에 대한 재침야욕’이라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북·일 관계는 2003년에는 진전을 볼 수 없었다.

2004년 5월 22일 김정일과 고이즈미 전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납치생존자 8명 중 5명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고 미군 탈영병 가족인 젠킨스씨 가족은 나중에 제3국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일본이 납득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 대신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북한이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제재법안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제2차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고이즈미 전 총리도 점차 국내 정치적 부담이 되어가고 있던 납치문제는 생존자를 귀향시킴으로써 일단

9) 4개 항의 평양선언은
① 2002년 10월 중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② 과거 청산 문제 관련 일본은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수교과정에서 경험문제를 협의 ③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사과 ④ 핵·미사일 문제 등 안보문제 관련, 북한이 협력하겠다는 의향 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 만경봉-92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인항을 취하한 이후, 7개월여 만인 2003년 8월 25일 니카타항에 입항하였다.

락 짓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은 수교협상 과정에서 논한다는 자세로 전환하였다. 김정일도 생존자를 귀환시킴으로써 국제적 이미지의 악화를 막아보려 하는 한편, 핵문제 중심의 협상전략을 복원하고, 일본 내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 분위기에 제동을 걸어 보고자 하였다. 즉, 북한과 일본 모두 수교에 걸림돌이 되는 최대의 이슈에 대한 부담을 일단 완화시키고 향후의 정세변화에 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일 관계는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미,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3~4일 베이징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1년 만에 재개되었고, 일본인 납치 생존자의 귀국문제와 가짜 유골 의혹 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일 정부는 상호 입장의 차이만을 드러내었다. 일본 측이 가짜 유골 의혹과 일본인 납치 생존자의 귀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데 비하여, 북한 측은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다. 아울러, 북한 측은 과거사 청산 등도 요구하였다. 즉, 북·일 양측은 협의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팽팽한 입장의 대립을 나타냈다. 북·일 양측은 대화와 협상의 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국교정상화를 향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2005년 11월 베이징회담에서 일본 측이 ① 납치문제 ② 과거사 청산문제 ③ 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한 것은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며, 북·일 양국은 12월 24~25일까지 실무회담을 통해 3개 분과위원회 설치 등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2006년에 들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2006. 2. 4~8)이 다시 열렸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되었으며, 회담 결렬 이후 북·일 간에는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상호 비난을 강화하는 등 대립국면이 지속되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잇따라 취하였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일본의 대북제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조치

- 6개월간 만경봉-92호 입항금지, 북·일 간 전세기 일본 착륙금지
- 북한 당국 직원 및 승무원 입국금지
-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수출 엄격관리 등 9개 항목

• 9월 유엔 안보리 성명에 따른 조치

- 대량살상무기 관련 의혹이 강한 15개 단체 및 1개인 자금거래 차단
- 금융기관 거래의 본인확인 철저 요청
- 해외송금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의 시설 특별조사

• 10월 11일 추가 제재조치

- 북한의 모든 선박 입항금지
- 농수산물 포함 모든 북한상품 수입금지
- 북한 국적자 원칙적 입국금지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에 합의함으로써 북·일 관계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합의서 제2조 4항은 북·일 양자회담 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해결되지 않은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갈 것을 목표로 양자 대화를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3 합의'에 따라 북한과 일본은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제1차 실무그룹 회의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07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회의를 몽골 울란 바토르에서 같은해 5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하였다. 두 차례 회의에서 양측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납치문제, 과거사문제 등 주요쟁점 관련 상호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북·일 관계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의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정치권과 언론의 대북한 강경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 북·일 관계가 순탄하게만 진전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3 북한과 중국 관계

북한정권 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때로는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唇齒), 혈맹으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적 토대 위에서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중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세계사적인 탈냉전의 상황에서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커다란 곡절을 겪게 된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 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속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대신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1992년 8월 남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적잖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2000년 5월 김정일의 비공식 중국방문이 있기까지 8년여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로 이 기간 북·중 관계의 실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2000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일이 장쩌민 주석의 초청 형식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의 관계와 개혁·개방 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을 논의하였으며, 여기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양국 간 친선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했다”면서 북한에 식량과 원유, 석탄 등 물자를 추가로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2001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김정일이 장쩌민 주석의 초청 형식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양국 간의 상호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일은 상하이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한 다음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천지개벽’,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등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북한이 2001년 1

월 4일 노동신문 정론에서 주장한 ‘신사고’ 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두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행해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공식 친선방문(2001. 9. 3~5)은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 국가주석과 김정일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우호관계 강화에 합의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쌀·석유·비료 등 지원과 대북협력을 약속하고, 북한에게 남북한 대화와 남·북, 북·미, 북·유럽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권유하였으며, 양국은 당적 유대 강화를 통한 정치적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

2003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라는 대북 16자 방침을 천명하였다. 2004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정일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정일은 중국 혁명 4세대인 현 지도부와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중국 권력서열 10위권에 드는 인물들이 모두 김정일을 면담하는 등 중국 측은 김정일을 이례적으로 환대하였다.

200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소원해진 양국 관계의 외형적 복원에서 실질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10월 28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북·중 관계 발전의 4원칙을 천명하였다. 4원칙은 고위층 상호방문 전통 지속, 협력적 내용이 담긴 교류영역 확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이다.

이 가운데 ‘협력적 내용이 담긴 교류영역 확대’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은 경제적 측면에 치중한 제안이라고 베이징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 투자 활성화, 북한 광물자원 개발 참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이 10월 28일 만찬사의 상당 부분을 중국 경제의 발전상에 할애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북·중 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과 중국은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각자의 국가이익에 맞춰 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주변 4국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변 정세의 안정을 통해 경제건설을 촉진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배경과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산당 1당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간에는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둘째, 북한은 현재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¹¹⁾

셋째, 중국은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효과적인 외교적 지지·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넷째, 미·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불신과 공동 안보의식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유지가 안보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현실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초 하에 북한에 대해 변방외교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지원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이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는 한편, 실리외교 차원에서 남한과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실리외교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와도 연관이 많다. 즉, 1차 북핵 위기 때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지를 유도해 내기보다는, 북한 편향적인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며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주장함으로써 가시

11 중국의 대외경제원조 총액의 1/30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

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북핵 위기에 대하여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¹²⁾

즉 중국은 NPT 규범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규범 준수를 통한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대국’의 면모를 구현해 내고 있다.¹³⁾ 이는 북·중 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물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강화된 북·중 관계의 모습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의 방북과 2006년 1월 김정일의 중국 비공식 방문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경제적으로 친밀해진 북·중 관계가 다른 차원을 보이는 듯했다.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을 궁지에 몰고 갈 수 있는 전면적인 대북 경제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탕자쉬엔 대북 특사를 미·러 및 북한에 파견하는 등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활발한 중재노력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향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불안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물론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건설적인 중재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동북아에서의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 참가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는 북·미 양자 틀을 통한 제네바 합의와 달리 6개국이 합의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안보구조 변화의 토대를 확보하

12) 탕자쉬엔은 일본 외무상과의 대화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은 미·북·중 3자회담을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출발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함으로써, 1차 위기 때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때와는 달리 변화된 의지를 보여 주었다(연합뉴스, 2003. 2. 28. 5. 23).

13)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제10권 4호), 2004 겨울.

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2007. 9. 27~ 9. 30)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북한은 핵 불능화와 신고를 완료하며, 북한에 중유 45만 톤을 제공하고, 50만 톤 상당의 발전설비 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중국은 한국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북·중 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예전과 같은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중국은 그들의 핵심적 국가전략인 지속적인 경제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남한과의 관계강화를 꾀하는 등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일정하게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북한과 러시아 관계

북한은 1991년 12월 구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함으로써 구 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했다.

1995년 9월 7일 러시아가 “러·북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은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양국은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외무·대외경제·농업·철도·경공업·임업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 이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또 이 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제공, 금속공업 제품교환 등을 통한 양국 간 무역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적 관계도 차츰 회복되어 갔다. 1997년 1월 21일부터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그레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1998년 12월까지 평

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4차례의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지하고 고려연방제 지지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했다.

새 조약 체결을 통해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재정립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재조정 은 1996년 11월 ‘투자 장려 및 호상보호협정’ 체결, 1997년 4월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및 11월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등과 함께 농업·어업·과학기술 협조에서 나타나듯이 경제협력 강화추세로 이어지게 되었다.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2000. 2. 9) 체결에 이어 구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우선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이 양국 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 상호 신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와 국제무대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염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이어 양국이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향을 표명했으며, 특히 “각자 양국에 침략 위협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는 한·소 수교 이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 8. 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 미국에 대한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합의가 담겨 있다.¹⁴⁾

김정일은 2002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00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2004년에 가장 주목받는 북·러 관계는 7월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이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울 방문 후,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한과 동시 외교를 전개하였다. 2002년에도 이바노프 전 외무장관은 남북을 연속해서 방문한 바 있다. 쌍방은 2000년에 체결된 우호협력조약에 따른 관계발전에 합의하였으며, 김정일은 용천철도 사고 시 러시아 측이 3만 5천 톤의 식량 등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고 한다.¹⁴⁾

북·러 양국은 2005년에도 정상 간 친서전달이나 특사파견, 고위인사교류 등을 통해 기존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였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 제공이나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 간 경험의 장애요인이었던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8.15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는 김정일의 친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김정일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푸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와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평양을 각각 방문하여 김정일 등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 극동 간의 무역 및 경험 확대, 6자회담,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안보·군사 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는 한편,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최선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고르 로가체프 주중 러시아대사는 러시아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및 북한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한 6자회담의 향후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존 관계 회복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는 무기체계·자원·기술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14)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553호), 2001. 8. 18~8. 24.

15) 『국제문제』, 2004. 12월호 p. 23.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적극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배경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안보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무기 수출을 비롯한 상품시장으로서 북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의 부진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기존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국 간 관계가 군사동맹관계로 되돌아갈 수 없음은 물론, 이전과 같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러시아와 북한은 이데올로기 및 대내외정책 기조에서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이익을 비롯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러 관계의 발전에는 한국을 포함한 3국 간의 협력이 주목된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 중단 철도의 연결, 극동·시베리아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달하는 가스파이프 라인의 건설계획 등이 3국 간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이다.

2006년에도 북·러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기존의 선린우호 관계를 지속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회복이 동북아 및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고 북·러 차관급 협의회도 10월에 4년만에 개최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방안들이 모색되었다.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러 간의 전통적 선린관계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는 미·일 경계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안보 후견국인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북한과 EU 관계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개선 속도를 높였다. 이어 북한은 2000년 1월 4일 EU 회원국이자 서방 선진 7개국(G-7)인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접근의 발판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EU 15개국 회원국 중 외교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했다.

EU도 한반도 내 영향력 증대를 위해 북한을 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독일·스페인 등이 대북 수교방침을 천명하면서 양자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제3차 ASEM회의 시 여러 EU 국가가 대북 수교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EU 의장이었던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 대표단이 방북, 서방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 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EU 개별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 1. 4), 영국(2000. 12. 12), 독일(2001. 3. 1) 등 2007년 말까지 프랑스,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EU 25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북한·EU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 11월 당시 EU 의장국이었던 덴마크의 뮐러 외무장관은 “북한이 즉각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03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면에서 EU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16)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 158.

추구하고 있다. 2002년 3월에 유럽순방에 나선 이광근 무역상을 포함한 경제대표단이 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영국 등 4개국을 방문,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찰 및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수시로 단기 연수생들을 EU 국가에 파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토대를 닦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대외 결제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EU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¹⁷⁾

EU의 대북 경제관계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EU가 2004년부터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워크숍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주한 EU 대표부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및 북한 외무성이 공동 주최하고 북한에서 EU를 대표하는 주북한 영국대사관이 지원하며 EU 회원국들이 경제 전문가와 외교관들을 참여시켜 이루어졌다. 제1차 워크숍은 2004년 8월에 개최되어 북한의 경제변천 과정을 개관하고 2002년 이후 변화를 논의하였다. 제2차 워크숍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어 경제운영에서 국가의 역할, 외국투자 유치전략, 국영 기업과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들을 다루었다. 북한 측에서는 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서 약 100여 명, EU 측에서는 8개 회원국의 경제 전문가, EU 외교관과 평양 주재 외국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¹⁸⁾

EU는 북한과 정치대화를 지속하고 인권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나 북한의 개선조치가 없자,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 3년 연속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EU는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11월 17일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EU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이유는 대

17)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2002년 12월 2일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공민들은 며칠 내로 달러 구좌를 이전시키고 현금을 다른 나라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북한 무역은행이 선포했다”고 하면서 “북한 내 모든 은행들은 달러 구좌를 유로 구좌로 이전시키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18) 박영호 외, 『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p. 245.

19) 박영호 외, 위의 책, p. 246.

략 다음과 같다.²⁰⁾

첫째, 경제적 측면의 동기가 두드러진다. 먼저 EU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약 3억 5천 4백만 유로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EU가 대북지원에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북한의 대 EU 관계개선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일은 부시 행정부가 새로 등장하여 장기간 대북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동안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만나 2003년까지 미사일 유예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속내를 드러내 보인 바 있다.

한편 EU의 대북접근 요인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보 필요성이다. 북한은 1995년 ‘큰 물피해대책위원회’ 명의로 EU를 비롯, 세계 여러 나라에 간곡히 식량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자력갱생을 표어로 살아온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EU측으로서는 그간 잊혀져 온 북한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이 EU로 하여금 북한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요인이 되었다. 즉 당초 EU는 대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인권 개선, 남북대화 진전 및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었으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정부의 설득으로 EU가 먼저 수교를 한 후 기타 현안을 처리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 EU의 ‘UN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약 15개월 간 북한과 EU 간의 정치대화가 단절되었으나, 2007년 3월 EU의 트로이카 대표단(EU집행위원회, EU이사회 사무국, 독일)의 방북과 같은 해 10월 제3차 북·EU 경제워크숍 평양 개최 등 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20) 김학성, 『북한과 독일 수교의 배경과 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2007, p. 6.

21) 최진욱, 『EU의 대북한 관계 역할 및 전망』, 통일연구원, 2002, p. 85.

● 제4절

대남관계의 변화

북한은 1999년부터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재정립 시도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추진해 왔다.

북한의 대남노선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남전략을 공산화혁명 전략의 틀 속에서 구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내부자원 고갈, 외교적 고립 심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부딪치면서 대남전략 면에서 과거와 같은 강경일변도의 군사전략적 성격은 유지될 수 없었다.

즉 북한의 대남전략은 군사적으로는 남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지원을 받는 이중적 접근을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하는 생존 전략적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전략을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구사하도록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이다. 북한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²²⁾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수용이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실리의

²²⁾ New York Times, June 15, 2000; Washington Post, June 15, 2000.

획득,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체제의 정당성 강화, 대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의 조성 등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북한은 모두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에는 상이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두 개의 상이한 체제와 정부가 상당기간 공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²³⁾ 특히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의 회복이 절실한 북한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난관을 경험하게 된 남한으로서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나 남북경협에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의 존재 양식을 대립과 갈등 중심으로부터 이해와 협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 주었다. 북한은 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나, 남한 측의 관심 사안들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도 나타났다. 북한의 일방적인 행위양식이 여전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남북 당국 간 회담과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관계변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남북관계의 접촉 형태와 관련하여 당국 간 관계의 제도화 및 쌍방 간 협상양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서울에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2007년 6월까지 양측 지역을 번갈아 가며 21차례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 연기에 따라 6개월 지체되어 열린 제5차 회담,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조성된 환경 변화를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후 2005년 6월 10개월 만에 개최된 제15차 회담 등 2000년 6월 이후 2007년 말까지 상반기까지 합의된 회담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경우도 20여 회에 달하는 등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 변화에 따라 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되거나 회

23) Robert G. Sutter, "Post Cold War Dynamics in East Asia,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p. 6.

담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북한 측의 약속 이행을 구속력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셋째,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었다. 서해 상공을 통한 남북한 직항로의 개설, 남북한 군 사이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 개성공단 건설과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및 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서해상 남북 해군 간 통신채널 개설 등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일부 초보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조치들이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당사자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정책을 일단 접고 남한과의 직접협상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의 경쟁도 가라앉게 되었다.²⁴⁾ 주변 4국도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진전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다섯째, ‘6.15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였으나, 남북은 여전히 상호 군사적 긴장관계의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상호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의 제거를 위한 신뢰와 평화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10.4 공동선언’은 남북 간 상호신뢰 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확대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하고 국민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북한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남북경협 4대원칙(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과 주변상황 및 국민정서를 고려한 대북지원 원칙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반통일적 선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북한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기존의 대남전략을 유지한 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행체제를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²⁴⁾ Robert G. Sutter, "Post Cold War Dynamics in East Asia,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p. 6.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 ● 김강녕, 『현대국제문제와 남북한』, 신지사원, 2002.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 김승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러 관계」, 『계간 외교』 (제54호), 2000.
- 박두복,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남북한 관계」, 『북한학보』 제20집,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1996.
- 박영호 외, 『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5.
- 방완주,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계간 외교』 (제54호), 2000.
-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건국대 출판부, 2005.
-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2004.
- 소치형 외, 『북한의 이해』, 건국대 출판부, 2005.
- 세종연구소,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
- 안진환 외 역, 『북한의 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
- 유동렬, 「북한의 통일전선론 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제31집, 북한연구소, 2006.
- 윤해수, 『북한국제외교론』, 한울아카데미, 2000.
- 이숙자, 『21세기 북한』, 나남, 2000.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외교통상부, 『2007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7.
- 정민수, 『북한의 이해』, 시그마프레스(주), 2004.
- 전정환, 「북한외교의 변화양상」, 『계간 외교』 (제54호), 2000.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9.
- 통일교육원, 『2007 통일교육지침서』, 2007.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 통일연구원,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2003.(기본연구)
_____,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 형성방안』, 2003.(기본연구)

통일연구원,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2003.(기본연구)
_____,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기본연구)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2003~2004』, 2003.(연례정세
분석)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2006~2007』, 2006.(연례정세
분석)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2007~2008』, 2007.(연례정세
분석)



북한이해 2008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 제4절 최근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4

박갑수 | 통일교육원 교수

Key Point

Point

1..... 북한에서 군사는 국방, 정치, 안보,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망라하는 국가 전 분야와 창조, 생산, 체제 유지에 관련되는 최대의 국사(國事)이다.

Point

2..... 선군정치는 군사조직이 통치·통솔에 보다 용이한 만큼 전시형 국가관리체제에 필요한 통치이념으로 활용되었고 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대내적으로는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기반이고, 대외적으로는 자위 및 혁명무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Point

3..... 최근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건설부대 등 군병력을 활용하여 건물·교량·도로건설·위탁경영 및 영농 관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보위사령부 등 주요 핵심부대 이외에는 거의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Point

4.....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항시 '동원된 상태'로서 인구 대비 세계 제1위의 병력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유사시 북한군은 초전부터 특수부대를 이용한 '배합전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동화부대를 중심(縱深) 깊숙이 고속 돌진시킨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 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자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해석된다.

2003년 10월 26일자 노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게 자체의 군사력이다. 군사력 마련에 돌려지는 부담을 덜어 새 생활 창조에 돌리면 경제도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도 좋아 질 수 있다... 그러나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기울여 자체의 튼튼한 군사력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군은 대외적으로는 이처럼 혁명임무 완수가 목표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혁명의 불패성과 미래는 선군에 있고 이제 핵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인민군대는 전군을 혁명의 수뇌부를 한 목숨 바쳐 결사 옹위하는 불사신의 총폭탄 대오,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군대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를 끊임없이 창조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강력한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의 상징이며 부강번영의 근본담보이다. 군사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는 우리당의 혁명적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 인민군대는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모든 군사사업을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최고통치자도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군대뿐이라고 생각하고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북한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선’을 구호로 하여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¹⁾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 기조는 4대 군사노선으로, 북한 개정헌법(1998. 9. 5)은 제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간부화와 현대화를 앞세운 것으로

1) ‘김일성 저작집’ 제7권, p. 447, “전쟁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정책의 연장입니다.”

보아 무장과 진지는 상당히 구비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군이 당·혁명·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이 있음은 앞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수령의 군대’로서 인민군의 성격은 군간부들의 군창견보고대회 보고나 각종 간행물 및 방송논설 등을 통해 계속 강조되고 있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시켰으며,²⁾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세 번째 추대하였다.

여기에서 일체의 무력이라 함은 정규군 117만여 명은 물론 교도대 62만여 명, 노동적위대 572만여 명, 붉은청년근위대 94만여 명,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준군사부대 42만여 명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예비병력 770만여 명을 총망라한 무력이며, 전반적 국방관리란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은 “군사력과 외교력의 관계는 현금과 수표와의 관계와 같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략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사력 확보를 담보로 한 대외관계 유지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군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시하고 군대식의 사업작풍을 보편화시키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함으로써 강군(強軍)을 통한 외교협상과 체제유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군의 특징을 요약하면 혁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일관된 공격형 전투서열 유지, 병력통제와 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정치사상 반복 교육, 간부들의 충성경쟁, 과도한 지하진지 건설 및 유지, 전쟁지도부의 독단적·비합리적 결정체계 등이다. 최근에는 경제건설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군병력을 노동력으로 활동하여 대형 건축물·문화회관·고속도로·발전소·수로공사·목장 및 양어장 등 각

2) ……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동 직책으로 재응립하는 추대사에서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해설하였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당총비서 등 3개의 직권으로 전군을 장악하고 있다.

종 경제건설 현장과 위탁영농, 검문 등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은 악순환되는 '경제의 군사화' (Militarization of Economy) 현상으로 국가경제의 군사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의 군사화 현상은 스탈린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난 공격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나,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경제개념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경제의 군사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비 충당을 위해 국민의 담세율이 증대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군사의존도 강화로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왜곡은 물론 민수자원 공급이 위축된다. 셋째, 저지할 수 없는 경제군사화 메커니즘 속에서 완성재와 원료의 대부분을 비생산적 군비에 할당하게 된다. 넷째, 민간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를 저해한다.

이러한 경제의 군사화 현상 탈피여부는 군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체제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북한군의 작업 모습

●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상무국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총참모부가 실제적인 북한 군사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룬다.

북한은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경비교도지도국과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통합군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에게 직접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단독 지휘축선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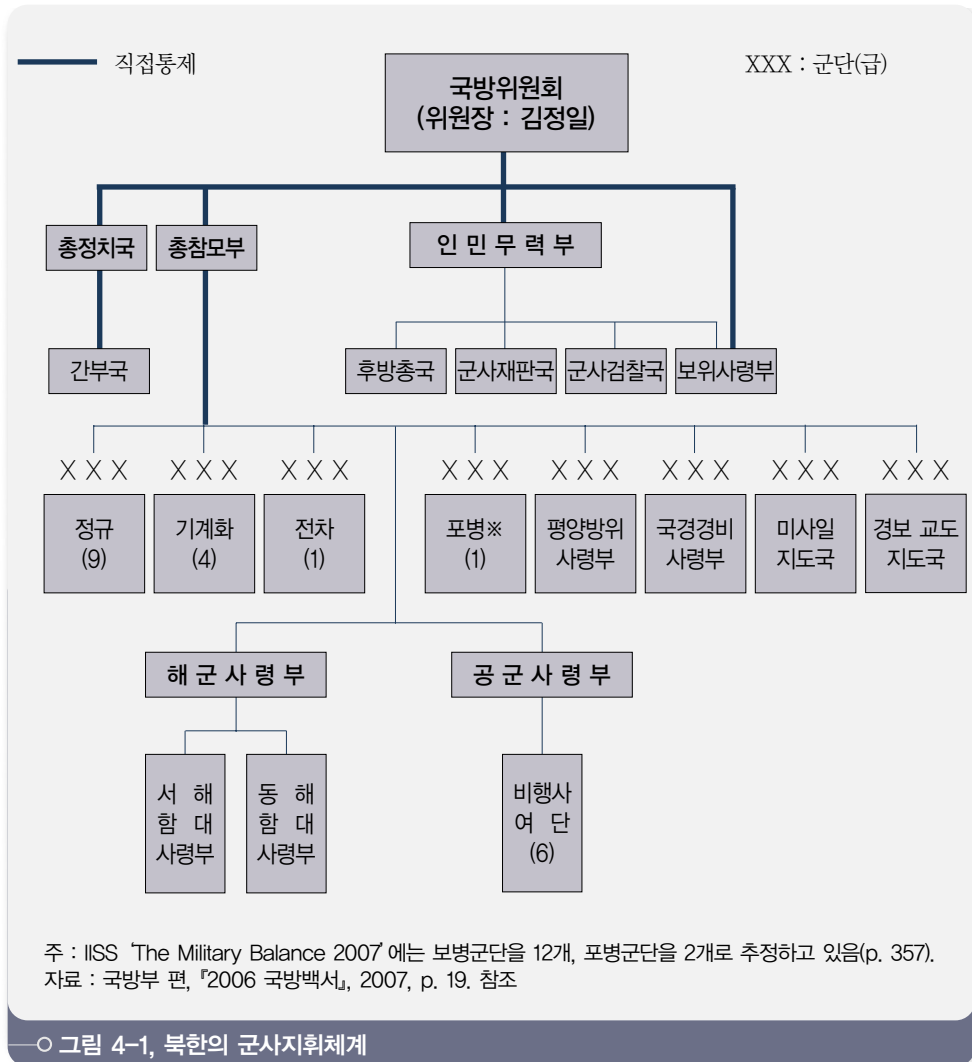
1992년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독립·확대하고 주석 대신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나아가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설치나 폐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다.

당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³⁾와 각급 지방당 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고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의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당규약 제27조).

3) 1982년 11월 이후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를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에 군사정책 결정 및 지도뿐만 아니라 군 지휘권까지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통일부, 『2004 북한개요』, p. 108).

이처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지방당 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전시동원 체제의 검토, 민병조직의 관리·운영 및 민병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민무력부는 군정권을, 총참모부는 군령권을, 총정치국은 정치·사상 지도권을 가지고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보위사령부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어 국경검문과 열차경비까지 담당할 정도로 군내의 정치·지도계통은 물론 다른 일반 공안 조직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⁴⁾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북한에서는 군 입대 여부를 각 행정구역별 군사동원부가 결정한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5세가 되면 군 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졸업하는 해에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검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으나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는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역시 졸업하는 해에 입대하고 졸업 후 공장·기업소에 취직한 자는 대개 근무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징집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복무자 등) 등은 물론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들은 정책적 배려를 이유로 입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전공자는 입대 후에도 전공을 활용하기 위해 조기 제대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⁵⁾

북한에서는 입대가 성인 생활에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어, 입시 이상의 경쟁을 치르게 된다. 특수부대, 통신, 정찰 병종으로 가게 되면 입당도 용이할 뿐 아니라 대학추천도 받을 수 있고, 제대 시에도 보다는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피하는 경우는 오랜 기간의 군생활 후 광산, 농장 또는 건설현장에 가야 하는 경우이다.⁶⁾

근무연한은 1958년 내각결정 148호에 의거,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7~10년씩 근무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10년 근무 연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4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1977년에 설치한 구소련의 국방위원회(전·평시 전쟁 대비 지도 및 조정기구)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5 미국 CIA, 『The world Factbook 2008』에서는 북한의 가용군사동원 대상을 17~49세 남 5,851,801명, 여 5,850,73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6 북한에서는 군 월급을 생활비라고 칭하며 계급별이 아닌 부대별로 상이하게 지급한다. 특수부대는 일반 부대보다 최고 7~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저격, 경보병 부대원은 7년 복무 경과 시 '공산대학' 졸업시험을 치르게 하고 제대 시에는 행정단위별 책임자로 임명한다. 박용환, 『남북한 군대 병영문화 비교』, 『북한』, 2007. 10. pp. 106~109. 새터민 증언 참조.



○ 북한 여군포병의 훈련장면

적지 않다.⁷⁾

2003년 3월에 개최된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군사복

〈표 4-1〉 군 간부양성 과정

계 급	과 정	비 고
징집대상	군사동원부 차출(특수부대 우선, 해·공군, 지상군 보병순)	특수부대, 특과 우선
훈련병	각부대 신병교육대(일반 3개월~특수부대 9개월)	신병교육기간은 경제난으로 다소 감축
병사 하사관	전사 → 초급병사 → 중급병사 → 상급병사 하사관학교(3개월) 하사 → 중사 → 상사 → 특수상사(사관장) *경보병, 민경, 저격병들은 우수병사(3~5년 근무) 추천을 통해 5년 이내 하사 진급	5~7년 경과 대개 10년 거쳐 중사로 제대
소위	군관학교 2년(지휘자반 : 최우등 시 중위 임명) 4년(대학반 : 중위)	군관학교에서 정치·군사 교육은 5:5 정도이나 군사 대학에서는 3:7 정도로 배분
중위	2-3년 경과 진급	
중대장	4-6년 경과 후 지휘관	
대대장	3-7년 경과 후 김일성군사대학(3년) 졸업	
연대장 이상	김일성군사대학 전술연구반(2년) 수료	장성은 명령만으로 진급

자료 : 유관기관 자료 종합

7)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로 정하였지만, 이 규정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으로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징집 연령층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조정했으나, 과거 병역기피자나 28세 미만의 병역미필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도록 하였다. 여군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위생병·통신병·초병으로 근무하거나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대를 운용한다.

군관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병 중 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자를 중·대대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여 최종 군단 당위원회 심사에서 확정한다. 임관 후 중위진급에는 4~6년이 걸리지만 장성은 최저복무기간 없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진급한다. 군관은 소대장 28세, 중대장 35세, 사단장 52세로 연령정년제를 두고 있다. 군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본과는 2~4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군관이나 하전사를 불문하고 군기사고자는 제대 후에 직장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와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 ④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 ⑤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비밀의 엄격한 유지
-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 ⑦ 군사정치 훈련에의 어김없는 참여
-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북한군 총정치국에서는 군 내 통솔과 단합을 위해 각종 경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대급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 중대 쟁취운동', 연대급으로는 '오중흡 제7연대 쟁취운동', 사/여단급으로는 '금성친위부대 쟁취운동'이 있다.

〈표 4-2〉 북한군 평일 내무생활

시 간	과 업 내 용	비 고
6:00 ~	기상	
7:00 ~	청소, 정돈, 조식(군복, 외모 검사)	독보회
9:00 ~ 12:00	정치상학(김부자 교시, 당노선, 사상, 보안) 등	
12:00 ~ 13:00	점심	
13:00 ~ 13:30	무기 소제	
14:00 ~ 18:00	군사상학(훈련 및 작업)	
19:00 ~ 20:00	저녁	
21:40 ~ 22:00	취침(인원, 무기 점검후)	계급교양
22:00 ~	필요시 해당자 체력, 전투기량 보완 연습	군중문화활동

자료 : 유관기관 자료 종합

판정결과가 양호하면 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군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시 10~15일 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적으로 정기 휴가는 없고 부모 사망 시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 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군 복무기간 중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는 약 2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군 병사들은 평균 군복무기간의 1/3 ~ 1/2 정도를 건설, 영농 등 비군사적인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표 4-3〉 북한 지상군의 정기훈련 및 활동

시 기	계 급
1월 ~ 2월	아외전술 훈련 준비, 병종별 기동훈련, 공병 정찰, 부서 전개훈련
3월 ~	연대/사단급 실탄사격 종합훈련
5월 ~	병영 보수, 도로작업, 부식 밭에 묘종
6월 중순 ~	하기 훈련 시작 집체훈련 : 정치상학, 대열훈련, 체육 아외훈련 : 병과별, 반토굴형 숙소
7월 하순 ~	장마철 도하훈련, 전투수영, 행군훈련, 습격/방어 훈련, 실탄사격
10월	월동준비 : 농산물 수확, 야채저장, 화목작업, 병영 보수
11월	동기훈련 준비 : 전투기자재 점검
12월	오전 : 실내사격 훈련 등 병영위주 훈련 오후 : 무장강행군, 체육, 대열훈련, 아외 사격 훈련

자료 : 유관기관 자료 종합

한편 부대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하거나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주둔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1일 세 끼 쌀밥에 야채, 절임 등 반찬 2~3가지가 기본이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단별로 임시보양소를 운영하였을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외부 지원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다소 나아졌으나 아직도 영양 보충을 위해 독립소대부터 사단 본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대들이 염소와 돼지 등을 직접 기르고 있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군의관 8~10명, 여군간호병 10여명)에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시에는 사단 군의소(군의관 20~25명, 여군간호병 50여명), 15일 이상 ~ 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술환자는 종합병원 성격의 군단 야전병원(군의관 60~70명, 여군간호원 포함 민간인 여성 간호사 130명 정도)으로 후송되거나 잠정 제대하게 된다. 입원 환자 중에는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이러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7. 1)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서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및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비군사적 업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수입이 많은 군 보위사령부 예하 국정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관계를 해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3 계급구조 및 당 조직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리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6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원수·차수, ② 장성급에 대장·상장·중장·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상좌·중좌·소좌, ④

8) 북한군에서도 1995년부터 집안사정이 어렵거나 부양자가 없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대(의가사제대)를 시키고 있다. 군의관 부족 시에는 일반병원의 의사를 징집할 수도 있다.

하급군관에 대위·상위·중위·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① 우리의 부하사관에 해당하는 특무상사·상사·중사·하사가 있고 만기 후 장기복무를 하는 초기복무하사, 중사, 상사가 있다. ② 일반병은 상등병·전사로 구분하되, 사기진작과 서열 중시를 위해 다시 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전사로 4등분하였다.

북한군 장성 계급서열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 등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여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현재 북한에는 대원수가 없는 상태이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20일 군 창건 기념 60돌에 즈음하여 '원수'로 전격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부터 매년 김일성 부자 생일, 당 창건일 또는 휴전협정 체결일 등을 기념하여 장성을 진급시키고 있는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2006년 4월에는 36명, 2007년 4월에는 55명을 진급시키는 등 북한 장성 1,400여 명 중 대다수(1,200여 명)를 진급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인민군대 내의 모든 각급 부대에는 군사체통의 참모부, 정치체통의 정치부, 보위체통의 보위부가 존재하고 있다.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이 구성되어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이 군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연대급 이상에 '당위원회', 중·소대 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당위원회와 별도로 군 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았는데,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이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 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정치조직과 별개로 당 비서국에서 직접 통제 및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견제장치 가운데 지휘관들의 업무와 생활을 평가하는 당 조직부의 권한이 가장 강하다.⁹⁾

인민군 일반 사병들은 약 20%가 당원이나 특수부대는 약 40%가 당원으로 추정

〈표 4-4〉 북한군 원수·차수 및 장령 진급 현황

일 자	계 기	장령 이상 진급 현황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계
'92. 4.20	인민군 창건 60돌	2	8	16	28	96	524	674
'93. 7.23	휴전 40돌	-	-	-	-	14	85	99
'95.10. 8	당 창건 50돌	2	3	3	5	4	2	19
'97. 2. 9	김정일 생일 55돌	-	-	4	-	2	-	6
'97. 4.13	김일성 생일 85돌	-	4	1	8	37	73	123
'98. 4.13	김일성 생일 86돌	-	-	-	1	1	20	22
'98. 9. 8	정권 창건 50돌	-	2	-	-	-	-	2
'99. 4.13	김일성 생일 87돌	-	-	-	1	2	76	79
'00.10. 8	당 창건 55돌	-	-	2	2	6	35	44
'01. 4.13	김일성 생일 89돌	-	-	-	1	3	15	19
'02. 4.13	김일성 생일 90돌	-	1	3	6	5	40	55
'03. 7.26	정전협정체결 50돌	-	-	-	6	10	8	24
'04. 4.14	김일성 생일 92돌	-	-	-	-	8	65	73
'05. 4.14	김일성 생일 93돌	-	-	-	-	3	31	34
'06. 4.14	김일성 생일 94돌	-	-	-	2	4	30	36
'07. 4.14	김일성 생일 95돌	-	-	-	-	10	45	55
계		4	18	28	60	205	1,049	1,364

자료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7. 4. 15~21)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복무 중 입당비율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 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비당원을 조선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군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官兵一致), 당사일치(黨社一致), 상하일치(上下一致)를 강조하고 있다.¹⁰⁾

인민군대 내에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의 성격이 전시 국가관리체제에서 영토 및 체제보전 임무를 넘어서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혁명목표 달성과 권력자 보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군대를 분리 통제하는 것이 권력 유지 및 지휘통솔에 유리한 배경도 있다.

9 중대정치지도원은 월 평균 20명 이상의 병사들과 면담함으로써 중대의 공식, 비공식적 상황을 숙지하게 된다.

10 관병일치(官兵一致)는 군관과 사병, 당사일치(黨社一致)는 노동당원과 비당원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구 사로청)과의 화합 강조를 의미한다.

●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1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장갑차·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중심(縱深)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 능력과 고속 중심공격 능력, 선제 기습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1980년대 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가 전진배치 등 3개월 이상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속전속결형 공세적 군사전략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로서의 비대칭 억지 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기습 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을 통하여 인구가 북한 전체 인구와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GNP의 수십 배가 되는 우리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1,000여 문을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80여 개의 비행기지(10여개 이상 지하격납고 시설, 고속도로 활주로 사용 가능)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장비의 집중 및 전진배치 동향 등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기습 전략을 여전히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킨드 미사일의 양산(量産)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기간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적·물적자원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한다는

〈표 4-5〉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구 분	과 업 내 용
목 적	목표물 습격 파괴, 후방 교란, 테러, 통신소, 미사일기지, 비행장 등 주요 전략·전술 거점 무력화
저격여단	주 전선돌파, 82mm 박격포, 방사포 보유 전략 목표물 타격, 국군위장 침투 교란, 조직 구축
해상저격여단	함선, 레이더 기지, 보급기지 기습, 유격전, 고속보트, 공기부양정 보유
공군저격여단	공군기지 장비, 시설 타격
항공육전여단	병참 시설 파괴, 증원차단, 거점 확보
군단정찰대대	밀로개척, 납치, 정찰, 폭파
경보병여단	핵심지역 장악, 지휘소 습격, 대부대 지원 6개 대대 × 6개 중대(120명) 60mm 박격포, 휴대용 미사일 보유

자료 : 유관기관 자료 종합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 두고, 후방에서는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1970년 말경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건설 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 대통로’(땅굴) 작업을 명령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월남전 사례처럼 땅굴 침투부대와 지하당 세력이 연계되도록 하여 불의의 기습으로 상대측의 응전을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는 광산갱도와 지하대피호를 포함해 8,200여 개소의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5차 당대회(1970. 11. 2)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¹¹⁾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적으로는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쟁은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전장환경, 병력의 교육수준, 무기의 질, 불확실성, 예측불가의 마찰, 우발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쟁지속 역량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공격력에서 오판 또는 자의로 도발할 수는 있으나 생존력에서 결코 뜻대로 종결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를 벗어난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실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2 상비전력 및 장비

2006년 12월 현재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7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총병력 67.4만 명의 1.7배 규모이다(〈표 4-6〉 참조).¹²⁾

11 1972. 9. 19, 노동신문 참조. 『인민군』, 평양 : 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 1987, pp. 43~47. 최근에 들어 북한은 구 소련군이 전차부대의 신속 기동으로 NATO군 방어진지 돌파를 위해 운용하려 하였던 작전 기동단(OMG) 개념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게 원용하여 발전시켰다. 그러나 개활지가 많은 서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상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1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7』에는 지상군 95만, 공군 11만, 해군 4만 6천, 특수부대 8만 8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pp. 357~358).

〈표 4-6〉 남북한 군사력 비교¹³⁾

(2006. 12. 현재)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평시)	계	67만 4천여 명	117만여 명		
	육 군	54만 1천여 명	100만여 명		
	해 군	6만 8천여 명	6만여 명		
	공 군	6만 5천여 명	11만여 명		
주 요 전 력	부 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9(포병군단,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포함)	
		사 단	50	75	
		기동여단	19	69(교도 10여 개 미포함)	
	군 장	전 차	2,300여 대	3,7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2,100여 대	
		야 포	5,100여 문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4,800여 문	
	비	지대지유도무기	20여 기(발사대)	80여 기(발사대)	
		수 상 함 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 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공	잠수함정	10여 척	60여 척	
군	전투기	500여 대	820여 대		
	특수기	8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지원기	190여 대	510여 대		
	헬 기	680여 대 (육·해·공군 헬기 통합)	310여 대		
예비전력(병력)		304만여 명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한국의 군사력에 제시된 해군병력은 해병대 25,000여 명을 포함, 지상군 부대(사단, 여단) 및 장비는 해병대 전력을 합산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

※ 질적 평가 표현은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양적 수준으로만 비교

자료 : 『국방백서 2006』, 2007, p. 224.

북한의 지상군은 총 19개의 군단급 부대로 총참모부 예하에 1개 포병군단과 4개 야전군급 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미사일지도국, 국경경비사령부,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지도국 등으로 편성된다. 주요 전투부대는 교도사단 포함 보병 75개 사단, 10

13) 북한은 한국에 비해 병력은 1.7배, 기계화군단 5배, 포병 2.8배, 잠수함 8.7배, 특수전 3.4배, 전술기 1.4배, 지대지 미사일 2.2배 등 양적으로도 압도적이나 질적인 무기체계의 성능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북한군의 강약점』, 『북한』, 2007. 7. pp. 122~127.

여 개의 전차여단, 30여 개의 포병여단, 25개의 특수전여단 등 총 170여 개의 사단 및 여단이 있다.

특히, 전방지역에 4개 군단, 1개의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1개의 포병군단 등 지상군 전력의 약 70%가 평양~원산선 이남의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강습돌파(強襲突破) 위주의 전격전 개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수도 서울이 근접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지상군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 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자주포 포병군단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해 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12만여 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는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 시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기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몇 배 규모의 위(僞)진지와 모의장비를 설치하고 공격 시 이용할 갱도 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 구축함으로써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군의 야포 M-46 130mm 훈련 모습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 전차(T-54/55/59 등) 2,800여 대가 주종을 이루며, 신형 T-62 및 경전차 760여 대, 일부 구형인 T-34 전차를 포함하여 총 3,7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전차 보유대수 2,300여 대의 약 1.5배 수준이다. 남한이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중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일단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10,000여 문(구경 76.2/100/122/132/170mm 등)의 곡사 및 평사포와 4,800여 문(구경 107/122/132/240mm)의 방사포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고사포 등 9,200여 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T-62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 등은 성능 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구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 가능한 천마호 전차(가/나/다급)를 생산하고 23mm 자주 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총 80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20여 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320여 척, 잠수함(정)은 60여 척이다.¹⁴⁾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악화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먼바다에서의 작전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보유와 전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함기습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40여 척의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STYX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정)으로 남한 전해역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

14) 앞의 책, 잠수함(정)을 63척으로 추정

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의 육상침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서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2개의 저격여단을 갖고 있고 공기부양정(고속 상륙정, 시속 50노트 이상) 130여 척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이 장비는 40~52노트 이상의 고속기동능력이 있어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50여 대, 주력기종인 MIG-17/19/21, IL-28, SU-7/25 등 820여 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510여 대 및 헬기 310여 대를 포함하여, 총 1,67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의 약 40%를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MIG-21/23/29 및 SU-7/25기는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5/17/19기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 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요격 및 대지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외 20여개의 작전기지, 예비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작전기지는 엄폐된 지하격납고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지하 활주로도 보유하고 있다.

3 예비전력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인민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5일~30일 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만약 교도대에 입대한 대학생이 훈련과정

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3학년의 방학기간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고 훈련시간도 연간 50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발발 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 병력은 약 62만여 명이다.

노농적위대는 17세 이상 60세까지의 동원 가능한 남자(여자 17~30세의 교도대 비편성자)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어를 기본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약 572만여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의 교내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 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실탄사격 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원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450시간(과거 27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94만 명으로 인원과 훈련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기타 준 군사부대로는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및 경비대, 군수물자를 지원·관리하는 군수동원총국,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약 42만 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이 있는데,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4 전략무기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구소련 최대의 핵연구소인 '뉘브나 핵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는 한편, 평성이과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하여 졸업생을 핵연구단지에 집중 배치해 왔다. 현재 북한에는 구소련과 중국 등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 핵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력이 약 3,000명으로, 그 중 고급인력은 약 200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⁵⁾

북한은 1960년대 중반 구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북·미 제네바 합의’(1994. 10. 21)를 통하여 대북 경수로 제공 및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수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KEDO와의 협상을 통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1995. 12. 15).

그러나 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1997. 2. 11)하고 유엔 연례 핵군축회의(1997. 2. 25)에도 불참하였다.

이어 북한은 9.11 테러 이후 북·미 간의 입장 차이와 미국의 압박 등을 이유로 들며,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시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에는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UN안보리에 상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은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의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부터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은밀히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2004년 1월 12일에는 역시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측에 동결과 보상의 동시추진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개최된 제3차 6자회담(2004. 6. 23~26)에서 미국과 북한은 한국이 제시한 절충안에 접근하여 북한은 미국이 단계별로 보상하고, 매년 200만 KW 전력지원,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15) 국방부,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p. 95.

이 보장된다면 재처리를 포함하는 핵시설 동결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으로써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북핵 폐기 및 이행원칙을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BDA 문제로 인해 6자회담이 표류하던 중 북한은 우리 및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10월 16일에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핵폐기와 금융 제재에 대한 북·미 간의 견해차로 성과없이 폐막되었다. 그 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미 베를린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가 합의되었다. 이 합의는 북·미 사이에 이루어진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였고, 5개국 간 균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조치로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북·미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연말 이전까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주요시설 세 곳(영변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공장)을 폐쇄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나 2007년 말까지의 2단계 신고 및 불능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이의 개발 및 생산에도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가려져 화생무기가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핵문제보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강계·용성 등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흥남·만포·아오지·청진 등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⁶⁾

화학무기의 종류로는 수포성·신경성·질식성·혈액성·최루성 등 유독가스 17종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고, 생물무기의 종류로는 세균무기인 콜레라·페스트·탄저균·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작용제가 있으며, 정주·문천 등에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의도를 갖고 미사일 기술 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 생산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왔으며, 1993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지대지미사일 노동1호를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1998년 8월 31일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였으며 사정거리 2,000km~6,700km의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다수를 시험발사하였고, 한국형 이지스함 진수식 당일인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 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 (KN-O2)을 시험발사하였다.¹⁷⁾

16 미국 「Popular Mechanics」는 2007년 2월호에서 북한은 화학제 5,000t 보유, 32개 지역에 생화학 공장 운영, 20개 지역에 생물무기시설, 12개 지역에 화학무기시설, 미사일, 아포의 30%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 야전교범 「NBC(생화학무기) 방어 작전의 의학적 전망에 대한 핸드북」에 따르면 전투원 1명 살상에 재래식 무기는 2,000달러, 핵무기는 800억 달러, 생물무기는 1달러가 소요된다고 지적하였다.

17 미국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CG) 대니얼 핑크스톤 수석연구원은 2008. 2. 3. 미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SSI)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거의 자급자족단계에 이르렀으나 고급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제4절

최근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북한은 1990년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군사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7년에는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훈련을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1998년 3월에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공개리에 전시동원령을 선포하는가 하면,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도상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浮舟)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대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의 전시 대비태세와 훈련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전자전 부대도 창설하여 군사전문 해커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일부 MIG기와 헬기를 재배치하였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전선 전역에 대남 비방방송이 중지된 반면, 부대 내의 정치사상교육은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훈련은 감소되었으나 특수부대와 통신부대의 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제일주의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군사관계는 해방 이후 중국과 구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스탈린과 김일성의 공모, 모택동의 지원 약속 하에 6.25 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 전후 한동안 북한은 피폐해진 산업복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 다시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7월 11일에는 북경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북·중 조약은 체결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북 핵실험 이후 조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북·소 조약의 경우 러시아는 구소련 소멸 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 조항인 제1조(피침 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동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으며, 1996년 9월 10일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대신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에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적 협조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북한의 군사대표단과 공군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8월 김정일 방러 시 러시아 극동군의 훈련센터에 들러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2001년 5월에는 북한 공군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항공단지를 시찰한 바 있으며, 이어 6월에는 고위대표단을 구성하고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위산업 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북한이 중동·아프리카·중미지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목적 뿐만 아니라 무기판매, 군사기술 지원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의 군사대표단을 상호 교환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하 오티엔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으며, 환영식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가하여 군 간부들만 참가하였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은 2003년 4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5월에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북·중 군사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핵 관련 입장을 교환하였다. 2006년 1월에는 김정일이 군 원로층을 대동하고 중국의 광저우 등 산업지역 시찰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북한의 당면문제를 논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4월에는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 일행이 방북하여 군사분야의 친선 협조 관계 발전에 합의하였다.

2007년 8월에도 중국군 친선참관단이 방북하였고, 12월에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장이 방북하여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담화하며, 6자회담 의장국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특히 동향으로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최고위 인사로 농 득 마잉 총비서가 방북(2007. 10. 16~18)한 사실이다. 북한은 베트남전에 200여 명의 조종사를 파견하였고 그 중 11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직접대화 형식의 접촉을 요구하고 있는 바, 판문점 대표부 이름으로 '유엔대표도 참가하는 군사회담'을 제의(2007. 7. 13)하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2008. 1. 22)하였다.

한편 남북 간에는 군사분야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대화 와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2004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이로써 쌍방 합정이 대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상대측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도 제거하였다.

그 후인 2005년 7월 20일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개소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5년 8월 13일부터 통신연락소가 설치되어 남북 군 당국 간 유·무선으로 긴급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상에서 남북 합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교신 및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에 합의한 바 있다.

2006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의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무역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측이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12. 12~14)에서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 통신,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분쟁, 에너지위기, 자원난 등으로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당면한 핵문제, 남북한의 군사대치 상태에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 요인에 의한 상호 오인, 오판의 결과는 크나큰 위기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남북한 군사당국 간의 분쟁방지 노력, 정확한 상황 판단,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표 4-7〉 남북한 군사용어 비교

한 국 군	북 한 군	한 국 군	북 한 군
개머리판	총탁판	배비변경	부대교방
공수부대	항공륙전부대	수색중대	정찰중대
기갑부대	기계화보병부대	자주포	자행포
다연장포	방사포	제식훈련	대렬훈련
대공미사일	반항공미사일	중화기	중무기
대전차무기	반땅크무기	암구호	군호
대포병레이다	반포전파탐지기	인사참모	대렬참모
독도법	방위판정법	초계함	경비함
방첩부대	보위부대	해병대	해상륙전부대
막사	병실	헬기강습부대	직승기공중기동부대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세계안보정세 종합분석(2005~2006)』 (상·하), 2006.
- _____, 『정보시대 전쟁의 이해』, 2004.
- _____, 『2007년도 안보정세 전망』, 2006.
- 국방부, 『국방백서』, 2004, 2006.
- _____,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 _____,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문제연구』, 2007. 겨울호.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 평양출판사, 2003.
-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김정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사상』,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1권 4호, 2005.
- 송대성, 『남북한 군사력 특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종연구소, 2002.
- 송봉선, 『북한은 왜 멸망하지 않는가?』, 학문사, 2007.
-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6, 2007, 2008.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해부』, 황금알, 2004.
- 이상현, 『신세계질서와 동북아안보』, 세종연구소, 2004.
- 이정연,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 플래닛미디어, 2007.
- 이중학, 『6.25 전쟁사 - 그 진실과 교훈을 찾아서』, 서라벌군사연구소, 2001.
- 임홍군, 『흔들리는 북한군』, 신서&생명의 숲, 2005.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 평양출판사, 2004.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 통일연구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007.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 균형 2006』, 2006.
- 홍현익 외,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 세종연구소, 2003.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 ● ● A Council Policy Iniciate, Future Visions for U.S Defense Policy, 2000.

CIA, 『The World Factbook』. 2008.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7.

<http://bemil.chosun.com>(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www.kodef.net>(한국국방안보포럼)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 · 개방

제1절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 | 제2절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 | 제3절 북한의 경제회복전략
제4절 북한의 경제 개혁 · 개방 추진내용과 과제

5

권영경 | 통일교육원 교수

Key Point

Point

1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체제유지와 더불어 경제회복도 도모하는 이중전략 하에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주요 경제정책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Point

2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9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Point

3 북한은 구조적인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2000년부터 나름대로 경제회복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를 통해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경제의 일부 기능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Point

4 북한이 6년째 추진하고 있는 7.1 조치를 통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경제 일부의 생산성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거시경제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빈부격차의 확대, 국민경제구조의 이중화라는 여러 경제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Point

5 북한의 경제난은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의 해결,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의 추가적 도입,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유리한 대외 경제환경의 조성, 선군경제건설노선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제1절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이후 경제건설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삼아 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다. 북한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¹⁾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발전 노선에 따라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는 보완적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은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자립적 경제발전 노선은 1960년대에 ‘대내 지향적·수입 대체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화한 발전전략으로, 북한경제를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closed economy)형으로 만들고, 국내산업구조도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된 산업구조로 고착시켰다. 즉 국내자원에만 의존한 산업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세계기술 발전 추세와 격차가 큰 경제구조가 조성되었으며, 북한경제가 기본적으로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이러한 한계들을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자립적 민족

¹⁾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평양, 1985, p. 208.

경제 건설노선을 일부 완화하고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에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을 매개로 한 선진기술도입을 시도하고, 1980년대에는 합영법의 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대외개방 정책은 어디까지나 전술적 변화에 그쳐 대외경제 부문은 여전히 보완적으로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북한경제를 국제분업 질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북한은 1991년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경부터는 체제경쟁 상대인 남한 자본의 제한적 투자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외형상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표방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완결적 자력갱생’ 으로부터 국제분업 질서를 인정하는 ‘개방형 자력갱생’ 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가 단행된 이후에는 ‘국제분업의 이익’ 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일부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은 7.1 조치를 발표한 직후인 2002년 9월에 신의주행정특구, 10월 개성공업지구, 11월 금강산관광특구 등으로 대외개방지역을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신의주 행정특구 설치의 중국의 비협조로 2004년 8월 폐지되었지만,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금강산 특구는 남한 단독 자본투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베트남, 중국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 세제 등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평양·남포 지역에까지 외국인 투자지역을 일부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인 기존 공장설비의 현대화를 위해 국영기업들과 외국자본의 합영·합작도 권장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던 일부 광산들도 외국자본에 개방하고 있다. 김정일은 2006년에 경제일꾼들과의 대화자리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잘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자체로 만들려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사다 써서 노력과 자재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며 국제분업을 강조하는 유무상통의 원리를 강조하였다고 한다.²⁾ 북한의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은 7.1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이 여전히 부진한 현실에 따른 수동적 지구책 마련으로 볼 수 있다. 2001년도에는 “조선속에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007년 10월 30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세계속에 조선이 있다”고

하였으며, 2008년에 들어와서도 '21세기형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 군사·경제 병진 노선

구소련·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경쟁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남한과 체제경쟁을 해야 했던 북한도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건설 노선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대 중반 사회주의 진영 내 이념분쟁 및 중·소 분쟁이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창하며,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196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노선이 채택된 이후 북한 총예산에서 군사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66년까지만 해도 북한 총예산에서 군사비의 비중은 약 10% 정도였지만, 1967년~1971년 사이에 30% 이상으로 증가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총예산에서 군사비 비중을 14~17% 사이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 연구기관들은 북한의 실제적인 군사비 지출이 총 예산의 30~50%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경부터 추진된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이다. 즉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군수산업은 민수산업을 관리하는 '제1경제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리됨으로써, 북한경제 구조는 제1경제(민간경제)와 제2경제(군수경제)로 이원화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

2 김일성대학보 2006년 가을호

장이 제약되고 소비생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경제 병진노선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세력과의 정면대결전을 위해서는 선군정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7.1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국방공업에의 선차적 역량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수립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제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도 실현할 수 있다”³⁾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주의를 자립적 민족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2002년 7.1 조치의 단행과 더불어 2002년 9월 이후부터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표방하면서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 따르면,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이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 노선으로 규정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친 후 대내적으로는 북한경제를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유지하면서 체제의 안위도 보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존 경제건설 노선은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군사를 선행의 원칙으로 삼는 선군(先軍)을 전제로 하고 국방공업과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공업은 북한체제를 보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생산 보장해 주고 경공업·농업은 인민대중의 물질적 수요를 생산 보장해 주는데, 전자가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만 후자의 수요도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평양, 1985, pp. 715~716.

그러면서 국방공업 우선 건설노선은 중공업 우선 건설전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는 국방공업과 민수생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방공업에 선차적 힘을 넣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에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 노선에 의해 국방공업·중공업이 북한 산업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고, 경제회복을 위해 기존의 경제적 토대들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방공업의 발전은 첨단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경제부문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이러한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논리는 계획경제의 분권화·화폐화·시장화를 의도하는 7.1 조치와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킨다고 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앞서 나가는 국방공업에 적극 따라세우고자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계획지표 선정에서 군수생산 지표와 민수생산 지표를 구분하고, 군수생산 지표를 우선 중시하는 계획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민수생산부문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⁵⁾ 한정된 재원으로 군수공업 부문과 민수생산 부문의 경제회복 및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없으므로, 군수생산부문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민수생산부문의 경우 일부 시장경제 기능의 도입을 통한 실리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은 60년대 이후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계승하는 경제정책이면서도, 7.1 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회복도 도모하고자 하는 이중전략적 차원의 경제정책노선으로 평가된다.

4 실리사회주의 노선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 경제회복을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인 ‘수령절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실리사

4) 박명혁,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년 제3호, 평양, pp. 7~9.

5) 김재서,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년 제1호, pp. 13~14.

회주의 노선'이다. 북한에 따르면, 실리사회주의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활동의 성과에 있어서 최대의 실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기업소·협동농장 등 각 경제단위들은 집단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개별 단위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경제활동의 목표로 삼으라는 의미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현상적으로 보기에 기존의 집단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계획경제적 논리의 재표방인 것 같지만,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으로서 경제개혁·개방의 성격을 일정부분 담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목표로 더 이상 ‘최대생산량’이 아닌 ‘최대수익’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조절 도구로서 시장의 기능을 일부 도입·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기업소 등 경제단위들이 수익성 위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리체계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공간도 경제활동공간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북한은 21세기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여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관리되는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작동시키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리사회주의 노선은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노선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초급사회주의단계론’⁶⁾이라는 이론에 의해 기존 경제정책의 기초를 대체하고 정치이념도 수정한 반면, 북한은 기존의 경제정책 기초의 기본 틀을 견지하면서 정치이념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초급단계의 사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이론으로,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을 뒷받침하던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가 1980년대 초 제기한 것이다. 자오 전 총서기는 “중국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했기 때문에 당분간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과정, 즉 생산력 발전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거시경제 현황

[1] 국민소득 및 거시경제 총량지표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민총생산에 관한 총량 경제지표로서 ‘사회적 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자본주의적 방식에 따라 북한의 총 GNI(Gross National Income)와 1인당 GNI를 추계하고 있는데, 그 추이는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남한과 비교한 북한의 국민소득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명목 GNI														
북한(A)	232	211	212	214	177	126	158	168	157	170	184	208	242	256
남한(B)	2,635	3,293	4,223	5,553	5,136	3,404	4,400	5,096	4,811	5,475	6,086	6,824	7,901	8,873
(B)/(A)	11.4	15.6	19.9	25.9	29.1	27.1	27.9	30.4	30.6	32.1	33.1	32.8	32.6	34.7
1인당 GNI														
북한(A)	1,142	1,013	992	989	811	573	714	757	706	762	818	914	1,056	1,108
남한(B)	6,147	7,527	9,459	12,197	11,176	7,355	9,438	10,841	10,159	11,497	12,717	14,206	16,413	18,372
(B)/(A)	5.4	7.4	9.5	12.3	13.8	12.8	13.2	14.3	14.4	15.1	15.6	15.5	15.5	16.6
경제성장률														
북한	-3.7	-6.0	-2.1	-3.6	-6.3	-1.1	6.2	1.3	3.7	1.2	1.8	2.2	3.8	-1.1
남한	9.0	5.9	8.5	7.0	4.7	-6.9	9.5	8.5	3.8	7.0	3.1	4.7	4.2	5.0

주 : 1) 북한의 2001년도 1인당 GNI가 2000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남한의 기준환율이 2001년도에 전년 대비 상승하였기 때문임(2000년도 기준환율 = 1,130.61, 2001년도 기준환율 = 1,290.83). 참고로 북한 원화로 계산된 1인당 GNI는 2000년 = 85.6만원, 2001년 = 91.2만원임

2) 경제성장률은 2000년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실질GDP 성장률임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표 5-1〉에서 보면, 1990년대 북한의 명목 GNI는 1990년 232억 달러에서 경제난이 최고조로 달했던 1998년에는 126억 달러까지 떨어져 무려 45.4%나 하락하였고, 1990~1998년 간 성장률은 연평균 -3.8%였다. 1990년대 진행된 이러한 북한경제의 위기는 처음에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외경제 부문을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중단 및 감축이 곧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요소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산출량이 감소하여 연쇄적으로 전 산업부문에서 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즉 1990년대에 북한경제는 전시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급격한 축소재생산, 즉 ‘공급경제’의 위기를 겪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9년도 이후부터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첫째,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경제회복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특히 2002년 실리추구를 강조하는 7.1 조치에 의해 경공업, 서비스업 등 일부 경제부문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9년도부터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무상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 확대에 의한 외화의 유입으로 지방공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공장들의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서 과거 구소련의 역할만큼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확대됨으로써 공장 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 및 산업설비들의 수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2006년도에 다시 -1.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생산력의 회복세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에 북한경제는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는데다 기상악화까지 겹쳐 농업생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로 추락하였다. 그리고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도 부진했고, 서비스부문도 침체에 빠졌다. 이는 한마디로 1999년 이후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세가 안정적인 선순환적 구조는 아니었으며, 7.1 조치에 의한 경제개혁 시도도 일부 경제부문만 활성화하였을 뿐 저시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부족 문제가 지난 몇 년 간의 경제회복조짐에 의해 더욱 현재화됨으로써 경제전반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 등 세계 경제기관들에서는 북한과 같은 최빈국이 ‘빈곤의 늪’을 벗어나 로스토우(W.W.Rostow)가 말하는 도약단계로 진입하려면 적어도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극단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서는 벗어났으나, 2006년까지 연평균 약 2.4%의 성장률을 보이는 데 불과했다. 그리고 <표 5-2>에서 보는 것처럼 1999년 이후의 플러스 성장세는 농업, 경공업, 건설업, 그리고 상업유통 부문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북한 경제에 중요한 중공업분야의 활성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중화학공업 부문의 성장률은 1999년 잠시 1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경공업 부문 역시 2004년, 2006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생산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부문 또한 2001~2002년 여전히 마이너스였다가 2003년~2006년 평균 1.1%의 성장세만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부문이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7.1 조치 이후 상업유통 부문의 시장경제 기능 도입으로 운수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 활성화되고 이 부문에서의 개인경제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도의 경우 8~9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해 농업생산액이 전년대비 11%나 감소하고 광공업부문의 생산도 전년도보다 다소 위축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볼 때, 전반적으로 2006년처럼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제로 성장에 가까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따라서 이런 현실 때문에 북한은 매년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에서 ‘먹는 문제’의 우선적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4대 경제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의 정상화와 인민생활경제의 개선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제의 현대화와 인민생활의 개선문제를 군사력 강화보다 앞서서 강조하며 경공업혁명을 제기하기도 하고,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이 경제전선이라고 언급하며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성장을 위한 투입변수(inject variables)가 거의

7) 통일부, 『2007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2007. 12, p. 78.

〈표 5-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2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림어업	-10.2	-2.7	2.7	-10.4	-3.8	4.1	9.2	-1.9	6.8	4.2	1.7	4.1	5.0	-2.6
광업	-2.9	-15.0	-4.2	-4.6	-13.8	-6.1	14.1	5.8	4.8	-3.8	3.2	2.5	3.5	0.9
제조업	-1.5	-17.8	-3.7	-5.2	-16.8	-3.1	8.5	0.9	3.5	-2.0	2.6	0.4	4.9	0.4
(경공업)	-6.2	-7.3	-0.1	-4.0	-12.5	-0.2	2.4	6.2	2.3	2.7	2.3	-0.2	3.9	-0.6
(중공업)	-0.4	-21.0	-5.2	-5.9	-18.8	-4.6	11.6	-1.5	4.1	-4.2	2.7	0.7	5.4	1.1
건설업	-5.9	-2.1	-26.9	-3.2	-9.9	-11.4	24.3	13.6	7.0	10.4	2.1	0.4	6.1	-11.5
서비스업	-0.3	-0.8	2.4	1.7	1.3	-0.5	-1.9	1.2	-0.3	-0.2	0.7	1.4	1.3	1.1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고갈되어 있고, 전력부문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부문의 설비들이 에너지 다(多)소비형으로 거의 노후화·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초 원자재들은 외부로부터 대규모로 투자재원이 유입될 때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북한의 거시경제 총량지표의 정체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2] 재정규모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제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재정이 총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가 국영기업소의 자본형성 및 투자 외에 운영자금까지 부담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이 비중이 매우 높아, 김정일이 2001년 10월 3일 담화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사회적 공짜’가 재정지출에서 거의 2/3 이상을 차지했고 경제난이 극심하게 진행되던 1993, 1994년경에는 91%의 비중까지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다음 〈표 5-3〉은 북한의 재정추이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 191.9억 달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5년도 이후 두 번이나 재정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즉 경제난이 최악이었던 1995~1998년 4년간, 그리고 7.1 조치 직후인 2002년~2004년 3년간 재정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1995~1998년간의 미발표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정활동 자체가 마비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2002년~2004년간의 미발표는 7.1 조치에 의해 국영기업소·협동농장 등 경제단위들의 경제활동이 독립채산제로 바뀜으로써 이들 경제단위에 있어서의 국가납부금 항목이 변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 기능의 일부 축소에 의해 국가지출 항목도 달라져야 하고, 지방예산제의 본격화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분리도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필요해서였던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재정규모는 급격하게 축소되는데, 달러화로 표시된 북한의 재정규모는 2007년 현재 3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비해 급격한 생산력의 하락으로 재정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의 위기도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5-3〉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연 도	달러표시(억 달러)	북한 원화표시(억 원)	대미환율(원)
1990	163.7	355	2.17
1992	185	393	2.13
1993	187	402	2.15
1994	191.9	414	2.16
1995-1998	-	-	-
1999	92.2	204	2.17
2000	95.7	210	2.19
2001	98.1	217	2.21
2002-2003	-	-	-
2004	25.1	3,489	138.96
2005	29.0	4,057	140
2006	29.7	4,193	141
2007	32.6	4,341	135
2008	35.2	4,515	128

주 : 2008년도 수치는 집행액이 아니라 예산수입 계획액
자료 :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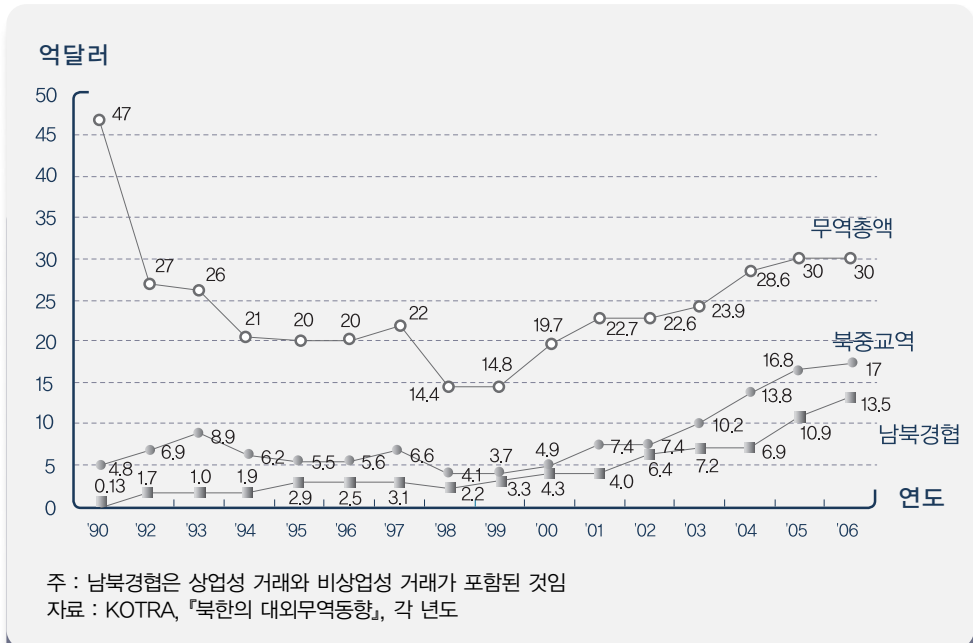
북한 국가재정의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 이러한 재정의 위기는 7.1 조치를 단행하면서 재정개혁도 불가피하게 하였다. 즉 북한은 7.1 조치를 계기로 재정관리 체계를 지출위주에서 수입위주로 다시 수립하고 예산구조를 현실화 하였다. 가격편차 보전금, 기업보조금 등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북한경제백서」, 2002, p. 232.

‘사회적 수요’에 대한 지출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시장경제 기능의 일부 도입에 따라 달라진 경제활동 부문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야기된 재정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부동산사용료, 토지이용료, 시장이용료, 재산판매수입금 등 새로운 조세항목을 신설하고, 2006년에는 기업소 이익금의 7%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함과 동시에 재정원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적 현실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3년 5월 10년 만기의 인민생활공채(북권방식)를 최초로 발행하기도 했지만, 재정부족 문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무역규모

북한의 무역규모는 1960년 3.1억 달러, 1970년 7.4억 달러, 1980년 34.5억 달러, 1988년 52.4억 달러로 19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 그림 5-1,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1998년 14.4억 달러까지 급락하였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지속된 1990~98년간 무역규모 하락률은 연평균 약 -11%로서 연평균 약 -3.8%씩의 하락률을 보인 GNI 하락률의 약 3배나 될 정도로 심각했었다. 특히 이 기간 수출 하락률은 연평균 약 -10.2%인 반면 수입 하락률은 -11.8%일 정도로 수입의 감소율이 더 컸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는 1999년부터 회복조짐을 보여 2000년~2006년간 연평균 11.2%씩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증가세는 이 기간 연평균 총 GNI 성장률 1.7%에 비하면 큰 성장세이다. 만일 남북경협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6년에(2006년 남북경협 규모는 약 13.5억 달러) 거의 1999년도 수준을 회복하였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에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 이후의 성장 추세를 멈추고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이 2006년에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추가적으로 제재를 받았기 때문인데, 특히 일본에 의한 대북제재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2000년대 들어와 나타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증대는 북·중교역과 남북경협의 증대가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5-1> 참조) 우선 북·중교역은 2000~2006년 동안 연평균 약 32%씩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북·중교역의 비중이 2000년 23.5%에서 2006년 39%까지 증대했다. 2000년대 이후 북·중교역의 비약적 증대는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중국이 최근 연평균 10%대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1차자원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7.1 조치의 영향으로 중국자본의 북한시장 진출이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개설 등으로 중국산 공산품의 북한시장 지배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북한 내에서 공장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경협의 경우에는 이 기간 약 27%씩 증대함으로써 북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0.5%에서 2006년 31%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남북경협의 증대는 1999년 이후 대북지원이 지속적

9) 북·일교역이 '05년에 비해 무려 37.2% 감소하였다.

로 이루어지고, 금강산관광사업·개성공단사업 등 북한에 대한 투자 협력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북·중교역과 남북경협은 2006년 현재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일교역은 1995년 한 때 5억 9천만 달러로 북·중교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6년 현재 1억 2천만 달러로 4.1%의 비중을 지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역은 1990년 22.2억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의 53%였으나, 2000년 4천 6백만 달러까지 추락하다가 2006년에는 2.1억 달러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경제난 이후 북한 무역품목 구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원자재·공업완성품 및 에너지·식량 등을 주로 수입하고 1차자원(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및 위탁가공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후진국형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수지 적자폭은 2000년 8.5억 달러에서 2006년 11.2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식량, 에너지 등을 수입해야 하는 요인을 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회복 조짐에 조응해서 기계설비·원자재 및 공산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무역역조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¹⁰⁾

2 부문별 현황과 과제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모든 공급경제 부문에서 동시에 애로 현상이 발생하여, 산업연관 관계가 상호 연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 내내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 생산요소 부문에서의 생산력 파괴를 겪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부문에서도 플러스 성장세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산요소 부문 역시 ‘저축적(低蓄積)의 늪’에 머물러

¹⁰⁾ 상세한 북한의 무역 구조에 대해서는 KOTRA,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07년 6월 참조.

있는 상태로서 경제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1] 식량생산부문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여만 톤 정도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5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이미 평균 700g에서 22%나 감량배급하고 있었다. 다만 이 당시에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일부 자체 수입능력의 유지 등으로 기근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의 감소,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의 급락, 연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도 400만 톤 이하로 급락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표 5-4>를 보면 199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350만~400만 톤 내외로서, 정상배급 기준으로 볼 때 수요량 대비 부족량이 매년 평균 180~280만 톤에 달할 정도로



○ 북한의 탈곡작업

〈표 5-4〉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단위 : 만톤)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요량	650	658	667	620	618	617	583	591	606	613	626	632	639	645	651	650	650
생산량	443	427	388	413	345	369	349	389	422	359	395	413	425	431	454	448	401

주 1) : 수요량은 정상배급 기준(인당 700g) 추정치이고 공급량은 전년도 곡물수확량임.

2) : 2008년도 수요량은 추정치임.

자료 : 농촌진흥청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부터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양호한 기상조건,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힘입어 400만 톤 수준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농업부문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선정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을 전년대비 32.2% 증액하는 등 식량증산에 역점을 둔 결과, 1990년대 이래 가장 큰 규모인 454만 톤의 식량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에 힘입어 평양 등 일부지역에서 2005년 10월 1일 배급제 정상화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상 배급을 기준으로 한 총수요량 대비 식량부족량이 여전히 200여만 톤으로 정상배급제의 지속 및 지역적 확대는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수해 및 태풍피해가 일어나면서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증가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7년도의 경우에는 벼의 생육기인 7~8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9월에 북한의 곡창지대 중심으로 태풍피해가 일어남으로써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401만 톤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에는 정상배급 기준으로 약 250만 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정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즉 1996년도에 신(新)분조관리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7.1 조치 이후로는 협동농장에 작목선택권, 초과생산물의 자율처분권, 분조단위의 자율구성권, 협동농장 지배인선출권, 농업노동력 배치권, 계절별 영농활동 등 경영활동에 관한 권한을 상당부분 이양하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대대적인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주체농법에 기초한 식량작물 위주의 단작체계 및 밀식(密植)재배도 수정하여 이모작, 감자농사 혁명, 콩농사, 소식(疎植)재배, 다수확품종 위주의 경작 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간공업과 농업에서의 3개년 연속계획' (2006~2008년)도 세워 여타 산업부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지출을 시행하고 있다.¹¹⁾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농업정책들은 과거에 비해 변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별 농가에게 토지이용권과 더불어 생산 및 경영권의 이양, 농업생산물의 자율판매권까지 부여하고 결국 인민공사까지 해체함으로써 비로소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던 중국에 비하면 아직 집단적 영농방식 및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에너지생산부문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는 현재 북한의 산업가동률을 30% 내외로 떨어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최근에는 식량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 식량생산과는 달리 그 회복세가 더디고 아직도 경제난 이전인 1980년대 후반과 비교해 현격하게 낮은 생산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표 5-5>에서 보듯이 석탄, 원유도입량, 발전량 모두 199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2006년 현재 석탄생산량은 2,468만 톤으로서 1989년에 비해 약 30%나 감소하였고, 원유도입량은 2006년 현재 54.9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무려 79%나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량도 2006년 현재 1989년에 비해 23.5%가 감소한 225억 kwh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석탄생산량의 증가율이 연평균 1~2%대, 전력생산증가율은 2%대, 원유도입량은 50만 톤대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7년도에도 석탄·전력생산의 이러한 추세는 지속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원유도입량은 6자회담 2단계 합의에 의한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중유 제공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은 무엇보다도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가 1960년대 초반부터 석탄>수력>석유>기타 등 압도적인 석탄의존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탄에너지 의존율은 1970년도

11) 2006년도의 경우 기간산업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은 9.6% 늘렸으나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12.2%를 늘렸고, 2007년도에는 전체 예산증가율 3.3%보다 높은 8.5%를 증액 배정하였다.

〈표 5-5〉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만 톤, 억 kwh, %)

구분	1989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석 탄	3,508 6.3	3,315 -23.4	2,920 -5.8	2,540 -6.3	2,100 -11.4	1,860 -9.7	2,250 4.6	2,310 2.7	2,190 -5.6	2,230 1.8	2,280 2.2	2,405 5.5	2,468 2.6
원 유 도 입	-	252 -	152 -19.5	91 -33.0	94 -14.6	50 -1.2	38.9 22.7	57.9 48.5	59.7 3.1	57.4 -3.9	61.3 7.0	52.3 -14.7	54.9 0.2
발전량	294 4.2	277 4.2	247 -6.1	231 4.5	213 -7.4	170 -11.9	194 4.5	202 4.1	190 -5.7	196 2.9	206 5.1	215 4.7	225 4.4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에 72.5%나 되었고, 2006년 현재에도 69%로 남한의 24.1%에 비하면 약 3배나 높다.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 신규설비의 부족, 자재의 공급애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었고,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 일어난 대규모 홍수 피해로 서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탄광들이 파괴됨으로써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수해를 입었던 탄광들 중 많은 탄광들이 아직도 예전 수준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6년에 중앙정부는 채굴조건이 좋은 일부 대규모 탄광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관·기업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탄광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규정’이라는 법령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즉 개별 경제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비경제기관들까지도 자본만 있으면 탄광에 투자·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원유도입량의 경우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에너지정책으로 일관되게 ‘주탄종유’(主炭從油)정책을 취해 왔다. 자립경제노선에 따라 최대한 자체 생산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했으며, 도입된 원유는 불가피한 산업부문, 수송용 그리고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의 착화용으로 이용되어왔다. 가정난방용 및 취사용 목적의 원유 사용량은 아주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1990년 최대치를 기록한 250만 톤대의 원유도입량은 북한이 1980년대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유량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원유도입량이 이보다도 7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원유도입량이 이렇게 급감하게 된 데에는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전까지 북한은 원유의 80% 이상을 구소련으로부터 ‘우호무역’, 즉 국제시세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구상무역 형태로 도입했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 원유 도입 결제 방식이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원유도입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1992년부터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유도입량과 석탄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당연히 심각한 전력난으로 연결되어 북한 공업시스템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표 5-5>에서 보듯이 북한의 전력생산량은 1989년 대비 1998년 한 때 42.2%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2006년에는 1989년 대비 23.5%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난은 기본적으로 석탄생산량 및 원유도입량의 급격한 감소에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님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력생산 감소는 발전설비들의 심각한 노후화 및 효율성 저하 등도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 이미 발전소가 동율이 40%대에 지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부문의 애로에 직면해서 북한당국은 경제난 극복에 에너지 문제, 특히 석탄생산 및 전력생산의 증대가 핵심고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계획’ (2003~2005년)을 세우고, 노후화된 발전설비들의 교체 및 개건·보수, 전력 및 석탄생산에의 자본·노동력·수송 등의 집중 배분정책을 시행하는가 하면, 2006년도에는 8년 만에 다시 전기석탄공업성을 전기공업성 및 석탄공업성으로 분리하여 각 성(省)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생산애로를 타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형발전소 건설과 함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메탄가스 등 대용연료의 개발 및 풍력·태양열·조력 등 대체에너지의 활용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별로 큰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노력들은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는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속에서나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기초원자재 생산부문

북한이 지속적으로 공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산업 생산의 주요한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의 급격한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원·부자재의 부족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기초 원자재 생산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다시 중간재 생산부문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최종소비재의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 저하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그 동안 원자재 공급원 역할을 해 주었던 외부조달원이 축소된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통해 북한의 기초원자재 생산부문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를 보면,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등 주요 기초원자재 공급량이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해 왔음을 볼 수 있다. 1999년 이후부터는 약간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멘트를 제외한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비료 등의 생산은 그다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1991년도에 비해 2006년도 생산량이 철광석의 경우 38.3%, 비철금속의 경우 62.1%, 강철의 경우 62.7%, 비료의 경우 58%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자재 생산부문의 정체 및 미미한 생산증가율은 북한경제가 1999년 이후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 관계의 연결고리 회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 산업시설들의 대부분은 구소련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서, 사실상 1980년대 중반 이후 보수 및 대체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설비

<표 5-6> 북한의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단위 : 만 톤)

구 분	1991	1993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철 광 석	816.8	476.3	344.0	289.0	379.3	420.8	407.8	443.3	457.9	491.3	504.1
비철금속	22.7	16.4	11.6	9.7	9.6	9.2	8.7	9.4	9.8	10.7	8.6
강 철	316.8	185.9	120.8	94.5	108.6	106.2	103.8	109.3	106.8	116.8	118.1
시 멘 트	516.9	398.0	379.0	315.0	460.0	516.0	532.0	554.3	563.2	593.0	615.5
비 료	108.1	121.2	72.1	52.7	53.9	54.6	50.3	41.6	43.4	45.0	45.4

자료 :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결과』, 각 연도.

들이 폐기 처분되거나 대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이 부문에서의 기술개진 및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원자재난 역시 에너지 문제의 해결, 해외자본의 도입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라 하겠다.

[4] 금융자원 동원으로서의 외화부문

공급경제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로서 금융자원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건설을 위한 금융자원을 내부에서 동원하거나 해외부문으로부터 충당하는데, 북한은 현재 1970년대 후반 이후 외채상환불능(모라토리엄)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자립경제노선으로 외화가득 산업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어서 심각한 외화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달성했다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해방 직후부터 공급경제의 확대를 위해 해외 금융자본을 활용해 오고 있었다. 즉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무상원조 12.8억 달러, 유상원조 34.7억 달러 등 총 47.5억 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전후 경제복구와 군사력증강, 경제개발 등에 투자를 해 왔다. 이 중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0.4억 달러는 1960년대 이전에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유·무상으로 들여온 것이고 12.4억 달러는 1970년대 초반 서방 국가들로부터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로부터 도입한 외채는 1970년대 후반 외채상환 불능사태가 발생하면서 누적되어 2000년 현재 그 규모가 124.6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2000년 당시 명목 GNI의 74.2%, 수출의 약 22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참고로 IMF는 수출액 대비 외채 비율이 2.2 배 이상이고 1인당 GNI가 695달러 이하인 국가를 ‘중부채 빈곤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¹²⁾

따라서 북한이 해외 금융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채상환 불능상태부터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국가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신용평가 기구들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신용도는 조사대상국 중 최하 수준에 머물러 있

12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이명훈, 2004, p. 7.

〈표 5-7〉 북한의 외채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외 채	78.6	92.8	97.2	103.2	106.6	118.3	120.0	119.0	121.0	122.9	124.6
외채/명목 GNI	34.0	40.5	46.0	50.3	50.3	53.0	56.1	67.2	96.0	77.8	74.2

주 : 2001년 이후로는 북한의 외채규모 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블룸버그통신(08. 1. 11)은 북한의 부채규모를 1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다. 따라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에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문제 해결에 전략적 결단을 내려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규제대상국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1986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이모이정책을 표방하였지만 1991년 11월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교섭이 개시된 이후인 1993년부터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금융을 받을 수 있었음을 볼 때, 북한이 외부금융을 활용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경제 전 부문에 걸쳐 축소재생산을 초래하였다.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력 수준을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로 하여금 ‘빈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북한은 1999년부터 나름대로 경제회복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생산력 회복에 노력해 왔다. 북한이 현재까지 거시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회복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북한은 2000년대 이후 ‘먹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면서 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 등 이른바 4대 선행부문의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부문들의 연쇄반응적 경제회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해마다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민경제비의 대부분을 농업생산 및 4대 선행부문의 정상화와 기술개건(技術改建)에 집중 편성하였으며,¹³⁾ 선행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전력·석탄생산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농업부문을 2005년에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선포한 이래 2007년에 이르기까지 3년 연속 최우선적인 역점사업으로 설정해 놓았는가 하면, 2006년에는 ‘기간산업 및 농업 3년 연속계획’

¹³⁾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이영훈, 2004, p. 7.

이라는 중기 경제계획을 경제난 이후 10년 만에 발표함으로써 선행 경제부문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체 예산증가율은 3.3%인 반면, 농업부문에 대해 8.5%, 4대 선행부문에 대해 11.9%, 경공업부문에 대해 16.8%라는 높은 예산지출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국가예산의 우선 지출부문으로 선정한 농업부문은 ‘먹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력·석탄부문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해야 하는 차원에서, 기계금속 및 철도·운송부문은 북한 산업의 근간인 중화학공업 부문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강조된 것 같다.

그러나 북한처럼 산업연관 관계의 연결고리가 대부분 분절화되어 있는 공급애로의 경제에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투자자원 확보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파급 효과가 큰 산업부문부터 정상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고갈된 투자자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의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외화자원으로 산업정상화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부문부터 생산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산업노동력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 식량문제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대외경제관계가 마비되자, 무역·농업·경공업 등 ‘3대 제일주의’를 내걸고 이 부문들의 우선적 발전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경제발전 전략을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경제회복 전략 선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주민들의 빈곤한 민생경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지자,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강성대국 건설이 현시기 북한 사회발전의 가장 절박한 요구라고 하며 경공업혁명을 4대 선행부문보다 앞서 강조하기도 하고,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제약에 의해 이러한 목표는 쉽게 달성될 것 같지는 않다.

2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전략

북한은 1998년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나서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웠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란 김일성사회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사상·정치·군사·경제의

강국을 말한다. 북한은 단순히 경제회복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체제의 장기적 생존도 지향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1998년부터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과학기술을 하지 말자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정하고 2000년도 이후부터 강성대국 건설의 3대 전선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을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해 나갔다. 즉 2003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5.7%, 2004년은 60%, 2005년은 14.7%, 2007년은 60.3%나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까지 단계별 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한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3~2007년)도 추진함과 아울러,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7.1 조치 이후부터는 경제현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이것을 개발한 과학·기술자 개인에게 지적재산권도 인정해주고 이익금의 30%를 할당해주도록 하는가 하면, 공장·기업소들이 수익금의 5%를 연구개발비로 적립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대부분은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 위주의 응용과학기술 내지는 기존 공장설비들을 가동하기 위한 자력갱생적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의 IT기술이다. 이는 북한이 장기간의 폐쇄체제에 따른 최신과학기술 정보 및 연구능력의 부족, 경제난으로 인한 연구환경 인프라의 열악 등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근본적인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3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

북한은 자신들의 낮은 경제발전 수준을 볼 때 단순히 경제회복만을 지향하는 경제정책만으로는 영원히 선진경제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회복과 동시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일거에 진입할 수 있는 ‘단번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0년대 이후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IT산업 육성도 강조

해 오고 있다. 2001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IT기술을 응용한 기술개건(技術改建) 운동을 벌이고, 내각의 주도 아래 몇몇 주요 산업 및 공장부문의 설비들을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들로 대체하는가 하면 사무자동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의 중요성과 컴맹 퇴치운동 등을 강조하며 IT인력 양성 및 컴퓨터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성에 '프로그램 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을 새로이 설치하고 각 대학에도 정보 관련 단과대학 및 학과를 설치하여 IT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북한 IT산업의 태동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상 2000년대에야 시작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 및 하드웨어 분야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폐쇄된 북한체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분야는 대외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폐쇄적 내부연결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우수한 인력에 의해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학교 컴퓨터교육 또한 평양에 있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교실 내 한두 대의 컴퓨터로 교육하거나 종이 자판기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과의 IT협력사업도 대부분 평양이 아닌 북경이나 단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IT산업 육성을 통해 '단번도약'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선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해 바세나르협약¹⁴⁾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과 더불어 정보통신 개방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전략

북한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의

14 1994년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COCOM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재래식 무기 및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이다.

해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수준에서 전개해왔다. 1970년대 들어와 '내포적 공업화' (Intensive Industrialization) 추진을 위해 보다 선진적인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방국가들과 경제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차관을 통한 금융적 지원에 한정되어 곧 채무불이행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1980년대에는 '합영법'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계획경제 시스템 속에서 합영기업을 관리하려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조-조합영' (조총련계 기업과 북한간 합영)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1991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하였으나, 계획경제 시스템의 개혁없는 '모기장식 개방전략'으로 인해 의도했던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통해 이러한 과거의 소극적인 개방정책을 벗어나 보다 확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은 것 같다. 내부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른바 '우리식 변화'를 표명하며 국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의 적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제도 연구원'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수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남한 및 해외기업들과의 위탁가공을 겨냥한 '가공무역법' (2001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의도하는 '북남경제협력법' (2005년)도 새로이 제정하였다.

그리고 신의주(2004년 8월 폐지), 개성·금강산지역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개성·금강산지역은 남한자본 전용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제바코드기구, 국제섬유수출기구 등 각종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고, 매년 국제상품전시회 및 국제박람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거나 해외 박람회에도 참가함으로써 국제상품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대외관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관료·교수·과학자·대학생들을 매년 수백 명 규모로 해외시장 경제 시찰 및 연수를 위해 내보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평양 등 내륙지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자기업들이 고용한 북한노동력의 임금액을 38달러까지 낮추었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그동안 자신들의 외자유치정책 및 대외 합작·합영사업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여건이었음을 인정하고, 대외 신용을 강조하며 국내투자환경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직 외국투자기업의 북한 내 기업설립·운영·청산 등 전 과정에서 국가의 간섭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계획경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고,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내경제와의 연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면에서 적극적인 개방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7.1 조치의 보다 진전된 조치라든가 개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고 자력갱생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해외자본 활용전략은 본격적인 경제성장 차원이 아닌 경제정상화 차원의 소극적 측면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4절

북한의 경제개혁 · 개방 추진내용과 과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2년 7월 1일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1 조치)라는 것을 발표하여 '북한식' 경제개혁 · 개방을 추진하였다. 7.1 조치는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조치로서 부분적으로나마 경제의 분권화 · 화폐화 · 시장화를 의도하는 제한적 경제개혁 정책이며, 경제관리체계, 분배제도, 가격제도, 재정 · 금융부문, 유통부문, 대외경제부문 등 전 경제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1 7.1 조치의 성격과 방향

1990년대만 해도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수정하고 시장경제 기능을 적극 도입하는 개혁정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난과 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된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압박하게 되었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수령절대체제라는 북한식 체제도 유지하면서 경제난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7.1 조치를 단행하도록 압박하였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 · 개방 모델조차 북한식 체제유지에 부정적이라고 본 것 같다. 그래서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단위들의 주요 경제목표로 "원칙을 지키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제기하면서도, 곧바로 2002년 9월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구호도 내걸었으며, 2005년도에는 이를 선군시대 당의 경제사상 및 노선으로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이란 제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방공업의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경제정책 노선이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이 기존 정치이념 및 체제는 개혁하지 않은 채 인민경제와 관련된 일부 경제부문에서만 한정된 개혁·개방, 즉 ‘선군정치 하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논리이다.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실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기능을 일부 도입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경제의 기본틀 내에서 관리되는 수준으로만 한정하겠다는 논리이다. 중국처럼 경제의 완전한 현대화(선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시장화를 지향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적인 사회주의 상품경제 단계에 맞게 계획경제 내에 관리되는 수준에서 시장경제 기능의 일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체제유지와 계획경제 모순의 해결, 경제회복의 동시적 달성이라는 이중적 전략으로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5년째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개방이 이러한 성격과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유의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추진내용

[1] 경제단위의 분권화·자율성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강화

그 동안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전인민적 소유 및 집단적 소유에 바탕을 둔 ‘대안의 사업체계’ (공업·기업관리), ‘청산리방법’ (농업관리) 등으로 표명되어 왔다.



즉 당정책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당의 통제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중앙계획기구가 ‘계획지표’에 의해 각 경제단위들의 경제사업을 관리·통제하고 심지어 경영권까지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7.1 조치에 의해 ‘경제적 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중앙집권적 경제관리 방식을 개선하였다. 즉 당간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던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여 전문경영 방식을 제고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관리위원장 및 지배인의 경우 노동자나 농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경제계획 및 생산지표, 상품의 가격 및 품질·규격제정 등 일부 경영지표들까지 기업소·공장 등에 이양하는 분권화 조치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자재를 구입·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계획 외 생산물이나 부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30%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 또한 지배인에게 20% 범위 내에서 종업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사권한도 주었다.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경영지표로 ‘변수입’(이윤+임금) 지표를 도입하여 각 공장·기업소가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초과이윤도 기업 자체로 생산확대 기금 및 종업원 복지기금으로 유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된 재정법에는 기업이 사용하지 않은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까지 하였다. 과거 이윤 대비 70~80%에 이르렀던 국가납부금(납한의 법인소득세에 해당)을 30~5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이윤규모를 증대시켰다. 대신 기업소들은 과거 국가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었던 재투자자금 및 유동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공장·기업소들이 자체 판단에 의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각경영도 허용해 주고, 외국자본을 유치해 합영·합작기업을 만들거나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었다. 외화벌이 기업소의 경우 외화의 자체 활용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해 주고 있고, 일부 주요 생산부문의 경우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술개선을 위해 전부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한편, 농업부문의 경우 1996년에 도입된 신(新)분조관리제에 의해 계획생산량 자체를 하향 조정하고 분조단위에 초과생산물의 자율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는 이의 분권화를 더욱 확대한 ‘포전(圃田)담당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

범적으로 실시했다. ‘포전담당제’란 분조를 가족·친척 단위로 2~5명씩 구성한 것으로, 집단농에서 개인농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도적 형태의 영농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협동농장에 분조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분할 경작하게 하는 권한도 부여하였으며, 분조에 토지사용료와 농약·비료 등 생산비용 이외의 수익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었다. 이러한 권한은 7.1 조치 이전에는 여러 개의 분조가 합쳐진 작업반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작업반 단위 내에서는 경작 허용면적을 30~50평에서 400평까지 확대해 주고, 이들 개인발 경작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받는 대신 협동농장 외 개인발에서의 개인 노동도 농장원 근로일수의 1/3 범위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었다. 이 밖에 기존의 ‘주체농법’이라는 영농체계에 의해 중앙계획적으로 집행되었던 영농방식을 수정하여, 적지적작(適地適作)을 강조하며 농민들에게 부분적 작목 선택권과 수익을 목표로 한 자체 영농방식의 결정권도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국영기업소·협동농장 관리방식에서의 개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앙계획당국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권한을 경제단위들에게 부분적으로 이양하고 이윤의 자율사용권을 부여해 주되, 경영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독립채산제의 일부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무관리의 변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북한은 경제관리 방식을 개선하면서 노무관리 방식도 변화시켰다. 즉 생산단위에서의 당 간부의 역할을 정치사업 위주로 제한하고 기업소 내에서 노동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통폐합·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소에 부여해 주었다. 또한 무보수로 활용되어 왔던 사회적 노력동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동보수를 지불할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노동력 동원방식도 개편하였다. 그리고 임금지불에 있어서 국가가 정한 일률적 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계획달성 및 수익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자 간 개별 경쟁도 유도하였다.

특히 기본임금과 그 외의 실적임금 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월급·주급·일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불할 수 있는 도급제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에서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소의 경우 동일 산업 및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이 지불되는 등 과거 유일임금 체계가 완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7.1 조치에서의 이러한 조치들은 중앙계획 당국이 통제·관리하였던 노무관리의 일정 부분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개인노동량 및 계획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분배되었던 평균주의적 분배개념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생산성 증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3]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가격제도의 다원화

북한은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가격개혁도 시행하였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바탕을 둔 ‘계획가격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가격제’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욕구, 수요·공급의 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전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즉, 국정가격과 농민 시장 가격 사이에 극심한 차이가 발생하여 암시장에서의 상품유통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공짜’를 남발하여 경제주체들에게 생산성 증대에 대한 유인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무엇보다 기존 국정가격제를 개혁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재화의 가치에 따라 생산물 가격을 계산하고, 국제시세 및 시장

〈표 5-8〉 7.1 조치에서의 가격현실화

구 분	품목/계층	단 위	국정가격 조정		
			조정 전 (A)	조정 후 (B)	인상폭 (B/A,배)
상품 가격	쌀	1kg	0.08	44	550
	옥수수알	1kg	0.07	33	471
	디젤油	1kl	1	38	38
	전력	1kWh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요금	평성(평북) ~남양(함북)구간	50	3,000	60
	유원지입장료	송도해수욕장	3	50	17
	냉면	옥류관	10	145	14.5
	집세	평양기준	수입의 0.03%	1㎡당 월 2원	-
임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부	월	-	6,000	-
환율	대미환율	1달러 당	2.12	153	72
관세	비누, 신발, 직물		20%	40%	2

자료 : 한국은행, 조선신보, 노동신문 등 자료 종합

의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취하고,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키는 가격개혁을 시행한 것이다. 즉 쌀·옥수수·생필품·공산품 등 모든 재화의 가격을 7.1 조치 당시의 시장가격 수준과 비슷하게 평균 25배 이상 올리고, 공공요금은 20배 이상을, 임금은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에 걸쳐 평균 18배 이상을, 환율은 150배 이상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가격의 경우 힘든 일을 하거나 기술기능이 높은 사람,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차등분배 방식을 적용하였다. ② 재화가격의 경우 생산자의 생산원가 외에 국제시세, 수요·공급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생산원가를 무시한 인위적 가격설정을 폐지하였다. ③ 가격제정에 있어서 국가가 여전히 가격을 관리·통제하지만, 과거처럼 장기간 고정된 국정가격이 아니라 수요·공급 및 생산단위의 요구도 반영하여 일정기간(10일)마다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탄력적인 국정가격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경제주체들이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제가격’ 제도도 도입하였다. ④ 그동안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원리에 입각하여 거의 무료로 공급되었거나 가격을 매기지 않았던 전기료, 주택·토지사용 등의 공공재 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북한은 가격개혁을 시행한 직후 2003년 3월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을 허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가격제는 국정가격, 시장가격, 합의제가격 등 다양한 제도가 공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의 가격현실화 조치는 이중가격제와 저가격제 유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공급의 애로가 타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시장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현실화한 급진적 조치는 북한경제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4] 유통망으로서 시장기능의 도입 및 협동적·사적 상업활동의 허용

기업이 독립채산제의 강화에 의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품유통망으로서 시장이라는 경제활동 공간도 허용되어야 했다. 따라서 북한은 7.1 조치에서 기업소들 간에 생산품 및 중간재를 서로 거래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 2003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장을 상품유통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조치도 취했다. 과거처럼 시장을 억제 내지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 시·군



○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는 통일거리 시장 내부

행정단위들이 주관해서 상설 종합시장을 개설, 운영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종합시장에서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상품 및 생산수단, 그리고 군수품을 제외한 생필품, 공산품들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다만 식량의 경우 7.1 조치 이후 최근까지 거래를 허용해 주다가 2005년 10월 1일 배급제의 정상화를 시도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종합시장의 각 매대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임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대신 이들로부터 '시장이용료'라는 명목의 임대료와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받고 있다.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 및 상품들은 시장한도 가격이라는 최고가격제 하에 관리되지만, 전반적인 공급부족으로 국정가격과의 편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북한은 운영이 어려운 국영상점을 자본이 있는 기관·기업소가 대신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수매상점, 기업소가 직접 상점을 개설한 직매점, 소규모 개인 상업 등 '일반상점'도 허용함으로써 유통망을 국영상점망과 일반상점망으로 이원화하기도 하였다. 2005년도에는 중국과 합영으로 기초원자재를 수입하여 기업 간에 시장가격에 따라 현금거래가 가능토록 한 수입물자 교류시장을 평양, 원산 등



○ 평양시내 매대(협동기관 운영)

대도시에 개설하기도 하고, 부유층 대상의 고급 상점(평양 중심), 맥주집, 가라오케, PC방 등 새로운 서비스 상점들의 개설도 허용하였다. 즉 상업유통의 다양화, 전문화 외에 대외개방도 일부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조치들은 명목상 기관·기업소가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 및 서비스업체의 등장, 국영상점보다 종합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상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7년도에 들어오면서 종합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 및 장사품목들의 제한, 수익률이 높은 일반상점의 재(再)국영상점화 등 억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보조금제도의 폐지 및 재정·금융부문의 개혁

미시적인 기업소·협동농장 경영관리방식 및 가격개혁은 재정·금융부문의 변화도 초래하였다. 우선 식량·생필품 등에 적용되었던 이중가격제 유지에 따른 가격편차 보조금을 철폐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부문으로부터의 예산지원도 축소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거의 무상이나 다를 바 없는 낮은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기업들에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원자재들을 공급해 주는 대신 재정자금으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재정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7.1 조치 이후 주민들은 인상된 월급으로, 기업소들은 독립채산제에 의해 직접 물자교류시장이나 국영상점, 종합시장 등에서 필요한 재화를 제값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물론 북한은 이렇게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교육·의료 등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무상지원과 배급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거 월 생활비의 3.5%만 지출 가능하도록 극히 낮은 수준에 매겨져 있던 식량의 국정가격이 5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배급제'는 사실상 '구입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및 의료 또한 재정의 위기로 사실상 실제적인 부담이 주민에게 지워짐으로써, 교육과 의료의 무상제공도 유명무실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적 공짜'를 없애는 이러한 재정 개혁과 더불어 재정 재원의 확대를 위해 세제도 개혁하였다. 즉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조세인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을 폐지하고 국가기업이득금을 새로이 신설하였던 것이다. 국가기업이득금은 기업소·기관의 평가를 '변수입'에 기초하여 시행하면서 계획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계획 이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도 국가예산 수입으로 거두어들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새로이 시행된 예산수입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북한은 시장경제적 조세들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즉 종합시장이나 서비스부문, 개인 발 등에서 개별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이용료 및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국가납부금, 시장사용료·토지사용료, 부동산사용료 등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항목에는 재산판매 수입금 항목까지 개설했다. 그리고 재정위기의 해소를 위해 2003년에 인민생활공채를 50여 년 만에 발행하기도 하고, 2006년에는 각 기업소들로 하여금 이윤의 7%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게 하는 사회보험료 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재정의 분리, 다양한 세제의 도입 등 제도적 정비도 실시하였는데, 북한은 우리의 국세청과 같은 징세기관인 집금소(集金所)를 설치하고(2003년), 회계법을 제정(2003년 3월)하였으며, 재정법을 개정(2004년 4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변화, 화폐경제의 도입,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시장경제의 부분적 허용 등은 상업금융제도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북한은 아직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개혁도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은행이 상업금융까지 취급하는 단일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

만, 상업은행법(2006년)을 제정함으로써 단일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7.1 조치 이후 5년간 전 경제 부문에 일부 시장경제 기능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업금융제도를 본격화하지 않음으로써, 사금융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 조치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강화로 인해 더 이상 국가가 기업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소들의 은행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아직 신용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소들이나 개별 경제활동에 나선 주민들은 사금융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005년에는 호주의 마라타나 신탁회사가 북한 재무성과 금융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소기업소나 자영업자들에게 평균 2천 유로의 신용제공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바 있다.¹⁵⁾

[6] 신경제특구정책의 추진

동원할 수 있는 내부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해외자본을 공급측면의 애로 타파에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02년 7.1 조치 발표 이후 곧바로 신의주·개성·금강산 등을 새로운 형태의 특구로 추가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신경제특구정책의 내용을 보면,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심천 등 중국의 경제개방지역 제도를 모방 또는 원용한 북한식 경제특구를 지향하고, 개성·금강산 특구의 경우 남한자본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조차지(租借地) 형태의 특구모델로 제시되어 있다. 즉 내부경제 부문은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경제의 일부 기능을 도입하면서, 신경제특구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원래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서남북 국경의 경계선상에 4개의 꼭지점으로 경제특구를 개설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신의주특구 개발정책은 중국의 반대 및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2004년 8월 이후 그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최근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1970년대 서구자본의 차관도입정책, 1980년대 합영법에 기초한 대외개방정책, 1990년대 나진·선

¹⁵⁾ 연합뉴스, 2005. 12. 15일자

봉 경제특구 등과 같은 대외개방 정책에 비하면 보다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식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고, 북핵문제라는 한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수경제 부문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과제

[1]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복 전략 및 조치들은 기업경영, 농업경영, 분배제도, 무역제도, 재정·금융 등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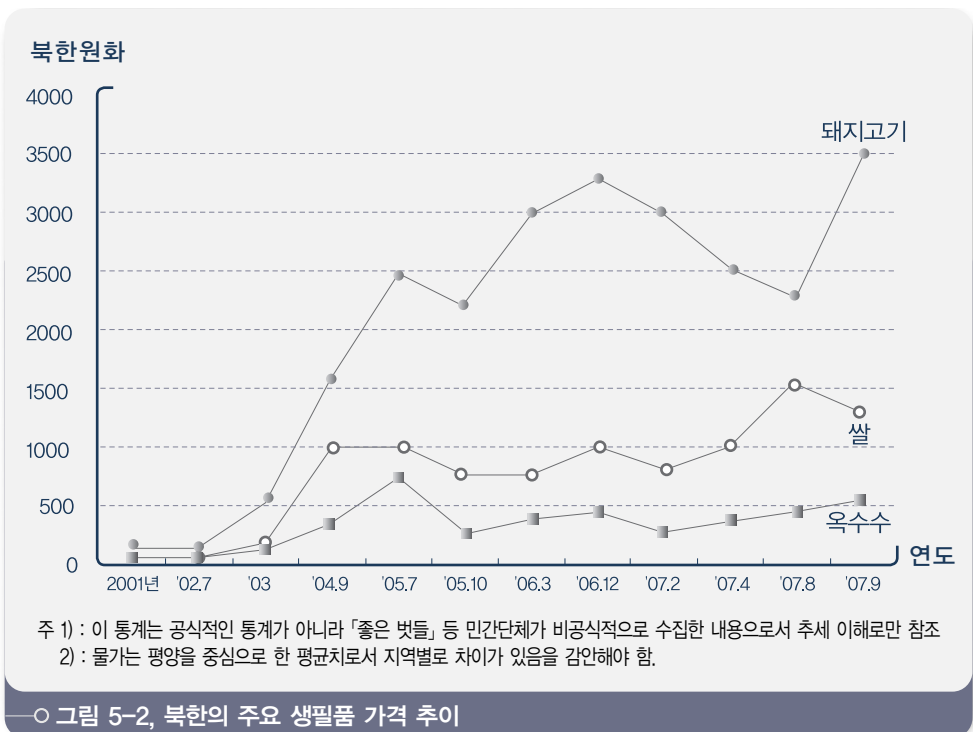
이러한 조치들은 우선 비공식 경제부문을 위축시키고 공식 경제부문을 활성화 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 및 산업생산성의 제고를 가져와 1999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플러스 성장세를 유도해나가는 데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1 조치는 민수생산부문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공업, 경공업, 농업 등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와 상업·서비스부문의 발전을 기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 부문의 경우 영농의욕의 증대 및 토지이용률의 제고로 2001년 395만 톤이었던 곡물생산량이 2003년 이후 5년 연속 400만 톤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종합시장의 설치로 인해 상업유통부문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평등주의 원리에 따른 평균주의의 타파와 ‘노동에 따른 분배’ 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의욕 및 노동생산성 증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또한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경영 방식의 도입,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확충, 대외경제 관련법의 개정, 시장기능의 일부 도입 등은 외부 자본 투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7.1 조치는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의 기본 틀 내에서 일부 시장경제공간을 허용하겠다는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애로를 타개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거시경제적 방향 속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수출지향적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생산력 회복을 도모하지 못하고, 계획경제 공간과 시장경제 공간 사이에 비정상적 관계 발생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9년 이후 7년 만인 2006년도에 다시 -1.1%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비록 수해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식량생산량도 하락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외무역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7.1 조치 이후 지난 5년간 북한경제에 나타난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경제가 인플레이경제로 전환되었다. 근본적인 공급의 애로가 타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된 가격개혁과 종합시장의 허용은 7.1 조치 이후 3년 간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를 야기하고 이후 북한경제를 인플레이경제로 구조화시키고 있다. 원래 7.1 조치 이전에도 북한 재화의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 간에는 100배~1,000배에 이르는 현격한 가격차가 존재하였는데, 2002년 7월 당시 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자 일거에 북한의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7.1 조치 이후 주민들의 소비욕구가 표출되면서 종합시장 물가가 200~300% 이상 올랐는데, 시장물가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조금씩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 들어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국민경제의 이중화 현상과 일부 경제부문에서 계획경제 공간이 시장경제 공간에 의존하는 조짐도 나타났다. 여전히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부문과 시장기능



의 자원에 맡겨진 경제부문, 7.1 조치의 혜택을 받는 경제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여전히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내수경제부문과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대외경제 부문 등으로 국민경제가 이중화되고, 일부 영역에서 계획경제 부문이 시장경제 부문으로부터 침식당하거나 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대외의존 구조가 심화되었다. 1980년대 중국처럼 개체경제 공간을 적극 허용하지 않는 북한은 7.1 조치 후 공급부족 문제를 해외로부터의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 의존도가 동시에 상승하게 되었는데, 특히 북한 유통경제의 80% 이상이 중국의 유통자본에 의존하게 되어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일부 기업 및 지방공업, 개인수공업자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중국산 제품에 밀리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넷째, 거시경제적 불안정요인이 확대되었다. 북한의 제한적인 재정·금융개혁은 7.1 조치에 의해 음성적으로 확대된 사경제활동을 포착하지 못해 여전히 재정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재정의 위기는 계획경제 부문의 정상화를 곤란하게 하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경제정책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심각한 괴리와 더불어 시장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는 등 화폐경제의 불안요소를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음성적인 시장경제 및 사경제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를 극심하게 양극화시키고 있다. 7.1 조치는 장마당 장사활동을 공식화하였는데, 계획경제 기능의 마비가 큰 상황에서 취해진 이 조치는 역설적으로 합법이라는 명목으로 비합법적인 시장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계획경제부문 종사자와 시장경제부문 종사자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빈부의 격차도 초래되었다. 7.1 조치는 공식적으로 평균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소득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조치인데, 여기에다 과도기적 상황을 이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하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도 더해져 소득불평등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정 관료들의 실리경제 공간을 이용한 부정·부패행위도 만연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관리되지 않는 시장경제공간(black market)’의 확산을 야기하고 있다.

[2] 7.1 조치의 과제

북한은 7.1 조치 이후 후속 보완조치를 취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제의 분권화 ·

시장화·화폐화를 전개해 왔다. 이 과정은 시장경제적 기능을 좀더 확대하기도 하고, 계획경제적 기능을 일부 강화하기도 하는 나선형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도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도 동시에 얻고자 ‘북한식’ 경제개혁·개방을 조심스럽게 실험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적 기능 도입에 따른 후유증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1 조치 이후 2005년도까지는 개혁을 좀 더 확대하는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전개하더니, 2006년도부터는 확대 조짐을 보이는 시장화 현상을 통제하고 심지어 억제하는 조치도 내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코 과거로 회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주민들의 생활경제 구조 자체가 국가의존형이 아니라 시장의존형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국가의존형으로 복귀시킬 수 없는 ‘빈곤의 늪’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 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냉전시대와 상이한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환경 조건은 북한경제의 개방화를 전제해야만 북한경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북한식’ 경제개혁·개방이 성공하려면, 북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① 무엇보다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부터 해결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고 ② 시장지향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보완·도입하여 선행 조치들이 탄력을 받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외국자본이 대량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공급경제의 애로 타파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북·미 간 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경제환경 조성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선행 경제회복 부문에 대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하고, ‘선군경제 건설 노선’에 대한 경제현실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 7.1 조치의 성공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과제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개혁들이 추진된다면, 북한경제는 그럭저럭(muddling through) 유지되는 수준으로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 조치와 북한』, 높이깊이, 2005.
- 권영경,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동향에 대한 분석」, 『수는 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5년 겨울호.
-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산업연구원, 2007. 10.
-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2005. 3.
- _____, 『북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6-8, 2006. 7.
- 김일성종합대학, 『경제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8.
-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2001. 10. 3 담화.
- 김재서,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경제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년 제1호
-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주민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 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2004. 12.
- _____,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한국은행, 2005. 11.
- 양문수, 「2000년대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9권 제5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 5.
- _____, 「7.1 조치 5주년의 평가와 전망 : 경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수는 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7년 여름호.
- 윤덕룡·이형근,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02-2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7.
-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은행, 2004.
- 이정철, 『북한 기업소의 임금체계』, 평화재단 10월 포럼 발제문, 2006. 10. 19.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전병유 · 이일영 · 김연철 · 양문수, 『북한의 시장 · 기업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4. 11.
- 정영철, 『북한의 개혁 · 개방』, 선인, 2004. 2.
- 조선노동당출판사,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2005.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년도.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 _____, 『2007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7. 12.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년도.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제1절 북한의 교육 | 제2절 문학과 예술

6

이미경 | 통일교육원 교수

Key Point

Point

1 북한의 교육은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을 중시하면서, 이들을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양성시킬 것을 강조한다. 한편 경제난 이후 정치사상 교양과 함께 외국어교육 및 컴퓨터교육 등 실용적 교육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Point

2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학습시키고, 과학기술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가르치며,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을 위한 체력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Point

3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미(美)의 추구보다는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국가의 독점적 통제 하에 당성·인민성·계급성을 기반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선군정치 등 정치사상적 내용에 치중하면서 주민의 일상적 체험과 '재미있는' 내용의 문예작품도 일부 창작하고 있다.

● 제1절

북한의 교육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 교육목표

교육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제도의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 전 교육, 11년제 무상의무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근로자를 위한 성인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제도는 경제난 이후 기자재 부족, 시설 낙후, 출석률 저하, 수업 질 하락, 교권 하락 등의 총체적인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교육운영의 파행화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 분야의 사상적 이완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방지하는 한편, 경제 재건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등 일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이는 ‘교육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등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와 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교육법’ 제 1장 3절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법에 명시된 인재의 구체적인 인간형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전반의 기본방

향과 지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자연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다. 북한교육에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 갖추어야 할 혁명사상, 과학지식, 체력 등의 요소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혁명사상이다. 이는 과학지식과 체력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사상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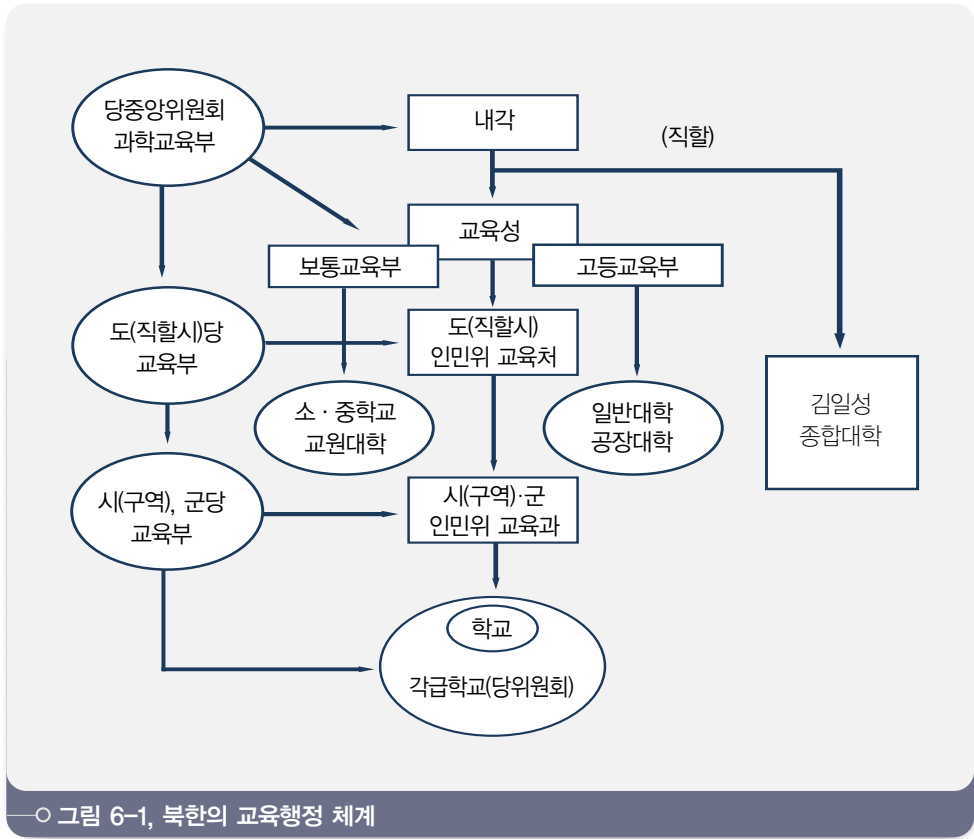
북한교육에서 혁명사상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 당 정책 및 혁명전통 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등이고, 과학기술교육은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체득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며,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으며, 주체형의 인간이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김일성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2]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교육행정은 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다. 북한은 일체의 국가기구와 사회조직이 최고의 권한을 지닌 당의 지배 아래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



○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는 도구로 이용되는 당-국가의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수립과 총괄적 지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정책의 집행 및 교육과 관련된 행정의 총괄은 내각에 있는 교육성에서 이루어지며 각급 교육기관은 당-내각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그리고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관계는 <그림 6-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당은 지시와 감독을 하고, 내각은 당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며, 학교는 교육을 실시한다.

① **노동당** : 당은 교육과 관련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 위원회와 내각에 지시·전달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인사나 교육문제를 다룬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형식상 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에 파견된 당 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이 실권을 장악

하고 있다. 즉 학교장은 학교의 책임자로서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는데 비해 부교장은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며 교수교양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② **내각** : 행정적·실무적인 업무는 내각의 교육성이 담당한다. 교육성 산하에는 보통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있다. 보통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교원대학을 관장하며, 고등교육부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관장한다. 교육성은 교육지침을 각 도(직할시)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교육과로 송부한다. 교육지침이 최종적으로 각급 학교에 하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이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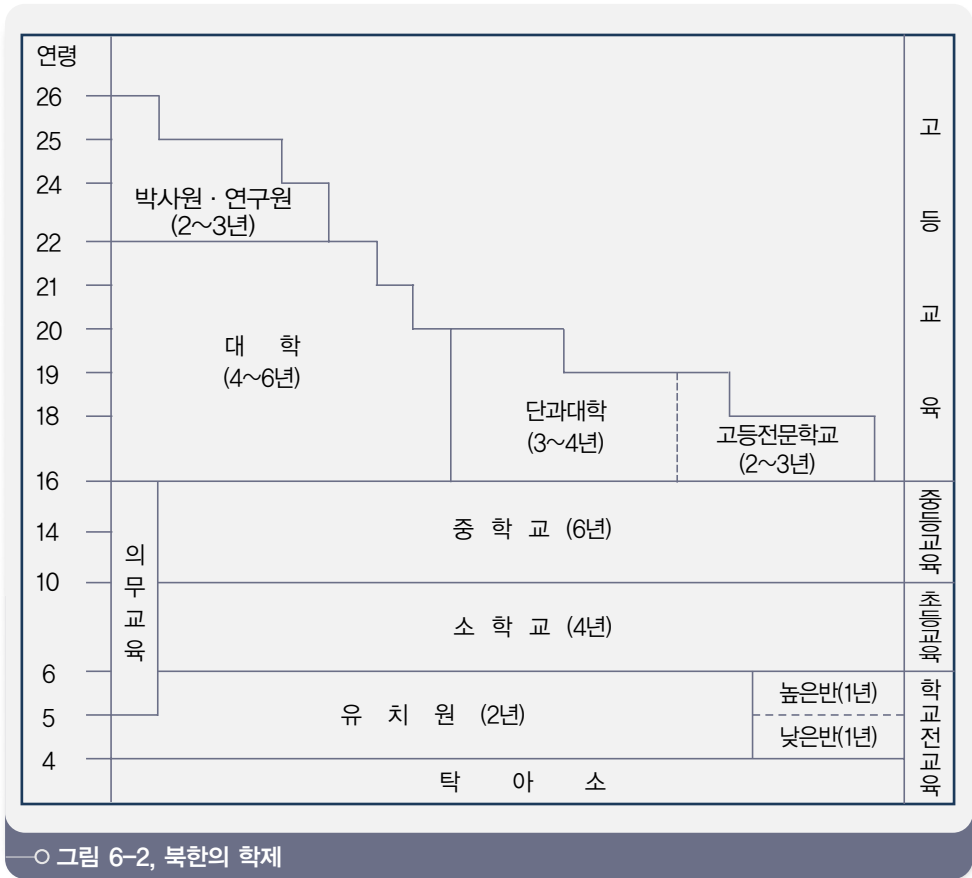
③ **학교** : 각급 학교는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행정조직은 학교장과 학교단위 초급당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 그리고 각 분과와 경리주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학교에서는 교과별 분과가 조직되어 있고, 소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분과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학교당위원회가 있고 이 당위원회 산하에 교원사회단체, 학생사회단체 등의 사회정치활동 조직이 있다.

당 우위의 통치체제에서 당의 통제력은 학교교육의 정치문제 지도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행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당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학교 관리·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의 권한을 능가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는 교육부문에 당의 개입이 제도화된 교육의 당적 통제체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¹⁾

[3] 학제

북한의 학제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6-4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학제와는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

1) 그러나 선군정치의 구현 이후 공장, 기업소 등 각 기관에 파견된 당비서와 당세포 등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당위원회 위원장의 위상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분야의 특기자교육과 혁명학원과 같은 출신성분에 따른 특수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과 특수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교원대학과 전문대학은 3년제이고,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이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운영되고,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인문과학부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 최근에는 자연과학부의 졸업연한이 1~2년 짧아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학기는 1969년 이후 9월 1일에 시작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개학날이 4월 1일로 환원되었다. 방학은 여름방학(8월 중)과 겨울방학(1월에서 2월 초 사이)을 합쳐 약 두 달 정도이다. 3월에 학년말 시험을 치르고 약 10일 정도 휴식을 가진 후, 4월 1일 새 학년이 시작된다.

1) 보통교육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종래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예비반 1년 과정을 포함한 6년제 인민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 후 수 차례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최근 실시되고 있는 학제의 골간은 1975년부터 실시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로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유치원과 초중등단계를 포괄한 11년제의 의무교육이다. 북한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적 교육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교육은 모든 자원이 정부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물 역시 정부가 소유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더구나 북한의 교육이 ‘노동을 병행’ 하는 원칙 아래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근로지원 활동은 등록금을 보상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교재 및 학용품 구입 등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이후 더욱 가중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이탈이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무상의무교육은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평등주의적인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리적인 내용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학교는 수학과 물리분야의 과목에, 농촌지역 중학교는 생물과 화학분야의 과목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엘리트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와 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난으로 부족한 자원을 선택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에 집중하여 북한당국이

주창하는 강성대국 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학생들의 근로지원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노동 뿐만 아니라 농사철에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일반중학교 학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1~4학년) 내지 8주(5~6학년) 동안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 지원을 나가야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행해지는 ‘김매기전투’나 모내기하는 ‘봄 전투’, 가을걷이하는 ‘가을 전투’는 각각 5월 초와 9월 말에 시작돼 20~30일씩 계속된다.

2) 고등교육

북한에서의 고등교육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건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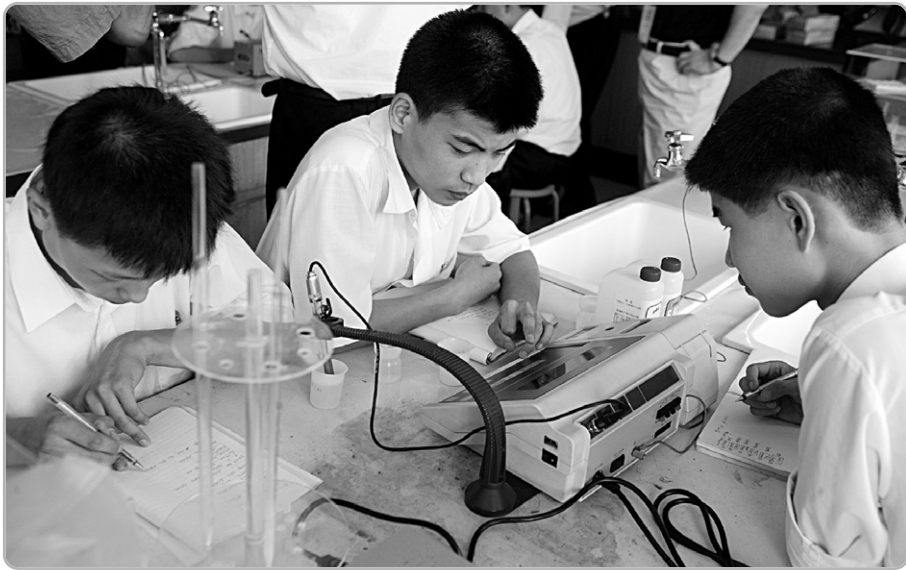
6.25 전쟁 후 3개년 복구 건설기(1954~1956)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해 중등교원의 대량 양성을 위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에는 경제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 설립이 결정되어 7개년 경제계획(1961~1970) 기간에 공장대학이 증설되었다. 이어 제2차 7개년 경제계획(1978~1984) 기간에는 부족한 각급 학교 건설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하고 소규모의 공장대학·통신대학·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 및 일반 단과대학과 함께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 등 산업체 부설 현장대학이 설립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경제재건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한편,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제로 간주하고 이들 분야의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동화학부와 물리학부를 일부 개편하여 컴퓨터과학대학을 신설하고, 2001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도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2006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정보기술전용교육단지를 세우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원격교육 체계를 갖추고 원격강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평양컴퓨터기술대학과 함흥컴퓨터기술대학을 설립하고, 일부 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켰으며, 각 대학에도 컴퓨터 관련 학부나 학과를 신설하였다. 2002년에는 정보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23개 전문학교에 6개의 정보공학과를 신설하고, 생명과학·나노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생명과학부를, 이과대학 생물학부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3개 학과를 신설하였다. 특히 대학 내 수재양성을 위한 수재반이 설치되었으며 이과대학 등 일부대학이 수재양성대학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수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에서 시범적으로 대학과정과 박사원(대학원) 과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학진학은 보통교육과는 다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보통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므로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으나, 대학진학은 대학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 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예비시험을 통해 대학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 정도이며, 이 중 시험에 합격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환경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이른바 '직통생'으로 불린다. 시험에 떨어지면 남



○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의 수업장면

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사회인으로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북한의 대학입학 시험은 대학추천을 위한 예비시험을 거친다. 내각 교육성이 별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해주고, 시·군 인민위원회의 대학모집과는 도에서 할당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보통 시험성적 순에 따라 시험 볼 대학이 결정되나, 성품이나 소질도 중시돼 일종의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별 성적 차를 인정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가 실시되어 지역별 학력 차를 감안, 합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3) 특수교육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학교가 있으며,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에 소질을 가진 특기자를 가르친다.

북한은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영재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1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옹기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개성·청진·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직할시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 시(구역)·군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200여 개에 달한다. 주로 과학·수학·물리 등 이과계통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어,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성분만이 아닌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제1중학교에서는 일반중학교와 다른 특수교재(전문대 수준)를 사용하여 자연과학, 컴퓨터 및 영어 등을 배우고, 졸업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대1 교육을 받으며, 농촌 지원활동, 군 입대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수재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인재의 양성은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다. 북한당국의 수재교육 강화는 “정보산업시대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

성취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²⁾며 첨단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제건설과 국가발전을 기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제난 이후 북한사회 전역의 학교운영에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만이 아닌 부족한 교육예산을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 학원의 입학자격은 소학교 졸업자로 혁명유자녀, 영웅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 가운데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다.

혁명학원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교육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유자녀대학,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소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8년제로 운영되는 특수학교로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이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모두 기숙사 생활과 엄격한 군사조직 아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 속에 최고대우를 받으며 졸업 후 군 또는 특수요직에 진출한다.

2 교육과정과 방법

[1] 교육과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구분된다.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가르치

2) 북한 『주간교육신문』
2006년 11월 10일자.

고, 과학기술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가르치며,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교육의 경우 <표 6-1>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1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사상교육·과학기술교육·체육교육·예능교육·국방교육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당 수업시간을 보면 국어·수학·자연·체육·음악·도화공작의 순이고, 이어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등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우상화하는 과목이 각각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중등교육의 경우 <표 6-2>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의 교과목 역시 과목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학교 과목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가르친다.

최근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세

<표 6-1>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구 분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1	1	1	1
4	사회주의 도덕		1	1	1	1
5	수 학		5	5	6	6
6	국 어		8	8	7	7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1	1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 화 공 작		1	1	1	1

주 1)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확인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했으나, 북한의 교육과정자료 미공개로 수업시간 수는 변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 학기 16주, 2학기 18주(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 말 1주일 간 봄방학)

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 교육과 첨단과학 기술교육 등 실용적인 차원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 영어와 중국어가 그동안 제1외국어였던 러시아어를 누르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아,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들도 영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강화에 이어 최근 외국어교육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시켜 외국어 실기능력과 일상적인 외국어회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표 6-2〉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1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 어	5	5	4			
9	문 학				4	3	2
10	한 문	2	2	1	1	1	1
11	외 국 어	4	3	3	3	3	3
12	력 사	1	1	2	2	2	2
13	지 리	2	2	2	2	2	
14	수 학	7	7	6	6	6	6
15	물 리		2	3	4	4	4
16	화 학			2	3	3	4
17	생 물		2	2	2	3	3
18	체 육	2	2	2	1	1	1
19	음 악	1	1	1	1	1	1
20	미 술	1	1	1			
21	제 도				1	1	
22	컴 퓨 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주 1) 북한 교육성의 과정인(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확인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했으나 북한의 교육과정자료 미공개로 수업시간 수는 변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대학에서는 외국어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과목의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강의도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자연과학 부문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외국어교수경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북한이 외교관 및 무역일꾼 등을 키워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그리고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여,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특히 2001년 금성 제1중학교를 컴퓨터수재양성학교로 지정, 2003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전문부 4년 과정을 종합한 금성학원으로 개편하고 첨단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소학교와 중학교의 컴퓨터 및 과학·기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별로 2~3개의 시범학교를 설정, ‘본보기 단위’로 조성하였다.

국가와 당이 교육의 전반을 관리·통제하는 북한교육에서 개별학교 및 학생에게는 교육의 내용은 물론이고 교과목의 선택권이 없었으나, 2001년 4월 1일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제가 중등교육에 도입되었다. 예컨대,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관련 교육을, 어촌지역에서는 어업관련 교육을, 산간지역에서는 임업관련 교육을, 그리고 경공업 공장지역에서는 경공업관련 교육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선택과목제가 도입되면서, 광업·기계·임업·식료·피복·약전(弱電: 통신공학) 등 6종의 교과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에 법률대학을 설치하는 등 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률대학에는 법·국제법 그리고 정치학과 등 3개의 학과가 있다. 북한의 법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학부나 철학부에 흡수되어 있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법에 우선하는 현실에서 법학이 중시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법률대학의 신설 등 법학교육의 강조와 국제법 전문가의 양성, 외국자본 유치 등 개방에 대비한 측면이 강하며, 각종 법제의 정비·제정·법률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사상적 이완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였다. 정치사상 교육의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다. 이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김일성 가계의 이상화, 즉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 등의 교과목을 배우며,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역사> 그리고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에 핵심내용이나, 개혁·개방에 따른 자본주의 요소 유입에 대한 경계와 핵과 미사일 등의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미대결 의식의 고취 등도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대미 적대의식은 북·미관계 악화에 따라 강화되어 청소년에 대한 반미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사상과 문화침투를 배격하는 한편 주체사상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학생의 군 입대 장려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 북한의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을 볼 때 북한의 교육과정은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사상교육 강화는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교육과 정치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기초기술교육과 실습 또는 생산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고 있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³⁾

[2] 교육방법

북한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규정된 다섯 가지의 사회주의 교육방법에 기초하고 있다.⁴⁾ 첫번째 교육 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으로, 학생들 자신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교수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방법에는 설명을 통한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문답식 학습을 통한 교육, 직관을 통한 교육, 실물을 통한 교육, 긍정감화교육 등이 있다.

설명을 통한 교육은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은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폭넓은 견

3) 조정아, 「북한의 교육: 체계와 문화」 2005년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pp. 330~332.

4)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 pp. 389~398.

해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답식 학습방법은 같은 책상에 앉은 학생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종 시험에 대비한 문제집을 교사가 미리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답안집을 만들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데 활용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교수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실물적인 학습수단을 많이 활용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장전학과 지원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감화교육은 사상학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대중 앞에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총화하고 분발하도록 이끄는 사상교육방법이다. 북한에서 대중들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인 ‘... 따라 배우기’ 운동이 이 교육방식의 예이다.

두 번째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 이는 학생들을 쓸모 있는 산 지식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 필요한 방식이다.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의 답사와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세 번째 교육방법은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이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학생들은 학생소년단, 청년동맹조직에 가입하여 녹화근위대 활동, 사회주의건설지원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네 번째 교육방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후대 교육을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은 학교 이외에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 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정치사상 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 등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교육방법은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이 어릴 때 형성되어 일생 동안 공고히 발전된다는 전제 아래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일생동안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학교전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각각의 수준에 맞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교육방법은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보화, 세계화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 북한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방법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단순한 지식습득만이 아닌 지적능력과 지식탐구 방법의 향상을 위해 IT 교육의 일환으로 지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암기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험을 암기테스트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실시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소위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인 지능교육을 위해 학교마다 과목별 지능문제 만들기, 소논문 집필, 지능문제풀이 경연,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등을 실시하고, 교수방법 강습, 과목별 교수교양경험 발표회, 교수방법 토론회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한 교사에게 '새 교수방법 등록증'을 수여하고 우수교원에게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는 김정일이 2003년 무봉중학교 현지도도를 실시한 것을 기념하여 우수교원에게 칭호를 수여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도 북한교육이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원하는 구성원, 즉 체제 순응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 앞선 교육방법과 큰 차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 과외활동

북한의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소학교의 수업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1~3학년이 6시간, 4~6학년이 7시간이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보통 8시에 시작한다. 소학교의 경우, 8시에 1교시를 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는 15분간의 ‘업간체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5교시를 마치고 1시간 45분간(12:35~2:20) 점심시간을 갖는다. 점심시간에는 오침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6교시가 시작되어 3시 15분에 끝난다.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상학 전 검열이 실시되며, 8시 반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 마치고, 1시 반부터는 점심 및 오침시간이며, 오후 강의는 4시에 시작하여 1강좌를 하고 5시 반에는 정규강의가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원이나 노력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강좌를 더하여 7시까지 강의를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남한과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는다. 고급 관리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교 교원을 초대해 부정기적으로 자녀의 지도를 부탁하기는 하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 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는, 이른바 보충수업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소조·외국어소조·예체능소조 등이 있으며, 매일 방과 후 2~3시간 정도 실시된다.

북한학생에게 특징적인 과외 활동은 노력동원과 조직생활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은 생산 활동과 결합되어 있어 모든 학생은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소학생은 연간 2~4주, 중학생은 연간 4~8주, 고등전문학생은 연간 10주, 그리고 대학생은 연간 12~14주로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기간이 길어진다.

북한의 주민은 모두 조직생활을 해야 하므로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된다. 중학교 4학년이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에 가입, 소년단 일원의 상징이었던 붉은 머플러 대신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 또한 청년동맹 가입 후 바로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군위대에 들어가게 된다.

군사교육훈련은 남녀학생 모두에 해당된다. 대학생이 되면 준군사조직인 대학교교도대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교도대 복무졸업증이 없으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 북한의 학교는 그 자체가 군대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

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연대로, 학부는 대대로, 학과는 중대로, 그리고 학급은 소대로 편성된다.

[2] 학생의 일탈과 처벌

북한학생들은 학교 규칙과 조직생활(소년단, 청년동맹 등)에 의해 규율통제를 받지만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일탈행위를 하기도 한다. 북한학생의 일탈행위는 주로 결석을 비롯한 각종 학교규율 위반과 용의복장 불량, 흡연과 음주, 이성교제 등의 생활규율 위반이다. 경제난 이후 특징적인 규율위반 행위는 절도와 엉덩이춤, 장발, 종대바지(쫄바지), 외국어가 쓰인 옷 등 ‘자유주의’, ‘항색바람’ 등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문화유입에 따른 모방행위 등이다. 이 같은 학교규율 위반 현상은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 이후 가족해체와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통제이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규율 위반학생에 대한 처벌 권한은 청년동맹에 있다. 물론 교원들도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이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등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만, 교실 밖에서는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서 벌을 준다. 퇴학제도는 없고 학교에서 개인별로 교양을 한다. 수업을 받으면서 방과 후 교양을 받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양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시·군·구역별로 문제학생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교양을 하기도 한다.

[3] 북한의 교원

북한에서는 교사·교수를 통칭하여 교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말도 사용하며, 대학교원의 경우 교수라고도 하는 점은 우리와 같다. 일반 교원의 경우 임금은 노동자의 상급 수준을 받고, 대학교원인 경우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등 북한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자력갱생으로 학교를 운영해나 가면서 교원에 대한 처우와 인식은 나빠졌다.

한편 교원들도 끊임없는 업무와 배급중단에 따른 생활고로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원들은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여 마음대로 조직생활에 빠질 수 없고 장사에 나서거나 퇴직할 수도 없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

다. 따라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경제난 이후 교원은 인기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였다.

도시지역의 남성교원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농촌에서는 떼기밭 농사로 연명한다고 한다. 미혼여성들은 병, 결혼 등을 빙자하여 휴직한 후 장사에 나서고 기혼여성들도 직접 장사에 나서기 위해 결근하기도 하여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교원들은 몇 조로 나뉘어 시당 교육부 모르게 7~10일씩 교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학교에 남은 교원들이 몇 개의 학급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사범대 출신 중 성분이 좋은 집 자녀들은 학교졸업 후 보위부나 안전부 혹은 시·군 교육부나 군당지도원으로 빠져나가고 주로 성분 나쁜 학생들이 교원 직을 수행한다고 한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원양성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양성대학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 도(직할시)마다 1~2개씩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중학교 교원을, 교원대학에서는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원 충당을 위해서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교원의 재교육도 실시한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다.

교사의 주 업무는 물론 교육이지만, 방과 후 학습부진 학생 혹은 우수 학생의 학습지도 외에 월요일에는 학습과 총화시간을 가지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모임을 갖는다. 나머지는 교재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중학교 교원의 분과모임은 수업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서,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교원들은 여러 종류의 노동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철도공사 지원, 주변농장 지원, 식수, 국토정리 등 각 시기마다 제기되는 노력동원과 봄과 가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제2절

문학과 예술

1 문예정책

[1] 정책적 목표

북한은 목적주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예정책은 예술성보다는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북한 당국이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여 동기 부여,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 그리고 북한에 의한 통일의 정당성 확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문학예술은 해방 후 사회주의체제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북한의 문인과 예술인들은 시기별 당의 노선에 따라 초기에는 토지개혁 등을 찬미하고, 1950년대 후반에는 ‘천리마운동 영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사회주의 건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창작·보급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과 지도자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숨은 영웅’을 발굴하여 선전하는 ‘숨은 영웅 형상문학’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구소련의 붕괴, 동구권의 체제전환 등 사회주의권이 급변하는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지키세>, <어머님은 붉은 기와 함께 계시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등과 같이 북한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결속시키고 사회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둘째, 북한의 문예정책은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가 확고해지면서, 나름대로 미적 측면을 추구하고 있었던 카프(KAPF)⁵⁾ 계열의 문인이 대거 숙청되고, 김일성의 반제항일투쟁을 주제로 하는 ‘항일혁명투쟁’ 작품만이 정통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 이른바 5대 혁명가극(〈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과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5대 혁명연극(성황당, 혈분 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대회), 그리고 〈불멸의 역사〉 시리즈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는 1980년대에 이르면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총서인 〈불멸의 향도〉 등 이른바 ‘지도자 형상화’ 작품이 나타나게 된다. 통치자에 대한 정당성 고양에 역점을 두는 작품은 경제난 등 총체적인 체제위기에 처하게 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되어 〈나는 첫 세대다〉, 〈받으시라 인민의 환호성을〉,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등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찬양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진다. 2000년대에는 “문학예술작품은 마땅히 시대정신에 맞아야 하며 시대의 숨결을 담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 집권 이후 주창되고 있는 선군정치와 이를 정당화하는 선군 영도업적을 작품에 반영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창작이 독려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문학예술 소재에 다양성을 보이면서 시문학의 서정화 경향이 나타났고 도시와 농촌의 갈등, 세대간의 문제, 여성문제, 애정문제 등 다양한 현실문제들이 소재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남조선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남한의 현실을 비판하고 반자본주의적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이 “문예작품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

5) KAPF(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는 1920년대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면서, 박영렬·안석영·김기진 등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좌익문예단체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북한에서는 문학 예술 작품에 남한사회의 부패상,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 특히 주한미군의 병폐를 집중 부각시켜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정책은 선전선동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문예이론

북한에서는 초기 KAPF 계열의 문학을 계승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사회주의적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 스스로 사회적 목표를 세우는 예술이다”로 정의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예술에 무게를 두기보다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창작의 형식 면에서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내용 면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성, 즉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군중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속도전 이론, 전형화 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관, 기본 이념, 창작방법 등 모든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에서 찾는 이론이다. 유일사상의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에 입각한 문학예술의 기본원리와 창작방법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문예이론은 민족성의 계승, 즉 항일혁명문예의 전통과 민족의 문화유산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문학예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 형식은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 시절에 창작했거나 지도했던 형식을 의미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은 낡은 것(봉건 잔재)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 계급과 자본주의의 모순 폭로 그리고 사회주의의 옹호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모든 작품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하고,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감성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의 호응도와 인기를 고려하여 대중성도 가미되고 있다.

북한 문예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종자론’은 주체문예이론에 기초하여 예술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 강령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의하면, 종자론은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이론의 새로운 개념”이며,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고,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의 핵심은 사상성 즉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서, 이에 의거한 북한의 문예작품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군중예술론’은 창작의 주체가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여 대중의 참여를 고무하는 이론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과정은 문학예술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수준을 전문 작가예술인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군중 문학예술을 전문예술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 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버리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글 쓰는 것을 신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김일성의 지적에 따라 북한의 문학예술은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감성에 맞는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3] 창작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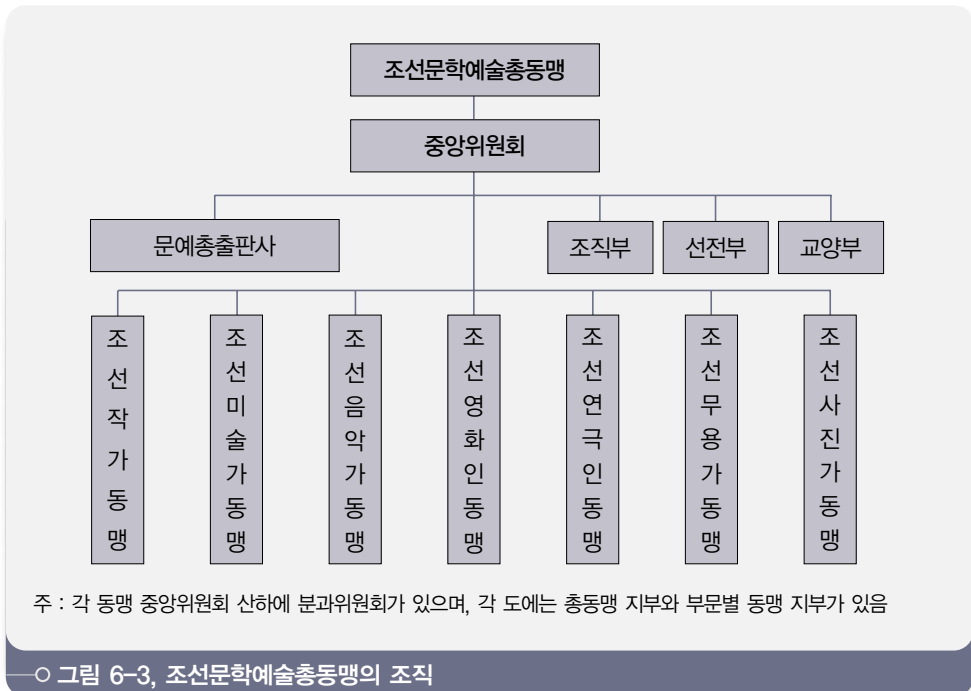
북한은 집단주의사회에 걸맞게 문학예술작품의 창작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집단적 창작은 김일성이 제안하고 김정일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3위 1체

체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3위 1체 체제란 당, 행정기관, 그리고 문학·예술인(혹은 그 단체)이 공동으로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당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을 감독하며, 문화성과 같은 행정조직은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창작가들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되어 작품을 창작한다. 즉 문학·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정권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며, 예술작품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문화성과 문예총 산하 해당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창작의 집단화를 대표하는 조직으로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있으며,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이 단체에 소속되어야 작가·예술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문예총은 <그림 6-3>에 제시되어 있듯이, 작가동맹·미술가동맹·음악가동맹 등 분야별 문학·예술인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다.

공장·기업소·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 근로인민대중의 예술 활동은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이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각 동맹의 후보맹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이 됨으로써 직업적



작가나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 외에 작품의 현상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전업 작가의 약 40%가 문학통신원 출신인데, 이는 직장인으로 현상모집에 응모하여 작가의 길에 들어선 경우이다.

2 분야별 실태

[1] 문 학

북한에서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본으로 인식된다. 이는 문학이 모든 장르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북한은 문학을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의 초인적인 모습을 그려내도록 ‘수령형상 창조’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된 1970년대 초반부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작품들을 장편소설로 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이는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거 지주와 자본가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 평가가 모범적·긍정적인 인물로서의 노력영웅을 이상화하는 구도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는 북한문학의 소재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 중앙’(김정일)의 지시로 김일성 가계를 소재로 하여 일방적 충성만 촉구하던 문학이 생활 속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변화상이 반영되어 사상과 주제는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지만 줄거리는 남녀의 애정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 등이 대표작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 등 4개의 새로운 문학개념이 나타났다. 추모문학은 김일성의 사망을 추모하는 문학으로서,

김만영의 서사시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여기에 속한다. 단군문학은 1990년대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군릉을 발굴·복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년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나타난 문학개념으로,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위인상을 사상 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2000년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잇는 개념으로서, 김정일의 선군혁명업적을 문학작품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를 미화시키기 위해 전우애를 강조하거나 강성대국 건설을 군이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출하는 작품이 눈에 띄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인 <라남의 열풍>, <조국찬가>를 비롯하여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서정시 <나는 주체사상탑과 이야기한다> 등의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개인의 일상성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과 유머 등 간단한 읽을거리는 물론 성애를 소재로 하는 작품도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다룬 작품인 김성욱의 <나의 멋>과 <유치원 마당가에서> 등이 있고, <조선예술>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등의 유머란에 다양한 유머를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홍석중의 <황진이>는 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북한의 전통적 문예관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2003~2004년 김정일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델로 작품을 쓰도록 지시함에 따라 비전향장기수를 소재로 한 소설과 시 등의 작품들이 수십 편 창작되었다. 장편소설 <새벽하늘>, 시 <축하합니다>, <나의 어머니시여>, <당기를 띄운다>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된다. <돌아오다>, <축복>, <아, 조국!>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들과 선군현실을 반영한 단편소설들은 2005~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2] 음악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음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담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형식에 있어서는 인민대중의 사상과 감정에 맞는 인민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음악은 인민의 계급의식과 공산혁명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양 및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의 음악은

서사적인 음악과 성악음악, 사실적인 음악과 민속음악, 단순한 화성적 음악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음악의 창작과 표현은 민족음악을 위주로 함과 동시에 서양음악을 발전 시켜,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선율을 창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발간한 노래집의 절반 정도는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국민가요식의 민요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치중하고 있다. 화성은 단조로워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으나 변화가 없으며, 창법에서는 비성(鼻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요는 당 정책선전 가요·서정가요·혁명가요·조선가요 등이 있으며, 김일성 부자 찬양을 위한 송가(頌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문학예술년감’(1998)에 실려 있는 보천보전자악단·왕재산경음악단·조선인민군협주단·만수대예술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76곡의 악보를 보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음악이 52곡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합주하도록 하는 등 전통음악의 양악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음악은 비정치적인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노래들도 많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통민요의 발굴에 역점을 둔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2003년에 나온 〈황해산 타령〉, 〈새타령〉, 〈느리게타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민족수난의 노래’ 혹은 ‘계몽기 가요’라는 명칭으로 〈낙화유수〉, 〈타향살이〉, 〈홍도야 울지마라〉와 같은 유행가 등 해방 이전의 흘러간 옛 노래 등을 모은 노래모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음악이 창작되어, 김일성의 사망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을 거쳐 선군정치가 완성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선군장정의 길〉과 민요풍의 대중가요 〈강성부흥아리랑〉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북핵문제 등으로 미국과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조국애’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널리 불리고 있는데 대표곡으로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결전의 길〉 등과 같은 전 시가요가 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음악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인민의 생활 감정이나 연애감정을 표현한 노래, 즉 대중가요풍의 생활가요 등이 등장하여 유행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20대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나는 알았네〉와 〈내 나라의 푸른 하

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등이라고 한다. 〈나는 알았네〉는 전쟁 영화인 〈월미도〉의 주제가이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선군정치를 주제로 한 노래이며,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는 북한의 주요 기념일 행사에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3] 무 용

북한의 무용은 가극의 한 부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여타 예술분야에 비해 독자적 정체성이 미약하고 음악·재담(코메디)과 곁들여 소부문으로 삽입되는 정도이며, 아동무용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무용의 동작은 우리의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기본을 이루나 무용형식에서는 신체미·율동미·시적인 메시지보다는 힘·규모·조직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무용수의 보조기구도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용은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동작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주력하면서 춤동작·가락·보법(步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으로 불리는 현대무용이다.

북한에서 15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자모식 무용표기법’(1987년)은 사람의 몸동작을 4가지 형태와 11가지의 동작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음적 기능으로 설정하고 12개의 자리부호, 7개의 방향부호를 자음적 기능으로 한 후 이들 기본부호를 임의의 형태로 결합시켜 무용동작을 표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의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 일이나 국민 환영식에 수만 명을 동원하여 화려한 집체예술로 연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3차례 공연된 ‘아리랑’을 들 수 있다. ‘아리랑’은 2002년 김일성 생일 90돌을 맞아 체제결속을 위해 기획되어 4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5.1 경기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대 집단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은 서장과 4개의 장, 10경,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1차 공연에 이어 2005년 두 번째 공연, 2007년의 세 번째 공연은 북한 전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관람을 유도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고양하기 위한 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



○ '아리랑' 공연 장면

진되고 있는 아리랑은 최대 규모의 체조공연으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고된 장기간 훈련과 동원에 따른 인권유린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4] 미술

북한에서는 전통미술을 배척하고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항일혁명미술을 참된 미술로 평가한다. 전통미술은 착취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했을 뿐 계급투쟁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반면, 항일혁명미술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참다운 인민적 미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다른 문학·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미술”인 주체사실주의 미술을 장려하여 왔다. 김일성 자신도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돼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북한미술에는 ‘기념비미술’이라는 명칭의 목적적 작품이 많으며, 노동자들이 망치 들고 노동하는 장면, 농민들이 벼이삭을 들고 만면에 미소를 짓

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술에서는 ‘추상은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상화나 추상조각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북한에서는 미술을 재료와 기법에 따라 회화·조각·공예 등으로 나눈다.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유화·벽화·출판화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을 혼합한 독특한 것으로, 민족미술의 특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각에는 환각·부각·투각 등이 포함되는데, 애국열사릉·혁명열사릉에 조각된 군상은 사실주의적이면서 분노와 비탄, 투쟁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선전한다. 공예에는 금속·자개·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만년화’라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모자이크화처럼 그려 일상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공예이다. <만경대 고향집>이라는 장식화가 대표적 작품이고, 기타 김일성·김정일 부자 관련 조형물을 만드는 데 주로 활용된다. 2004년도에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대형 병풍 형식의 작품 <백두산 천지의 216 봉우리>는 이른바 김정일의 위대성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5] 영화 및 연극

북한에서 영화는 다른 어느 예술장르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조선중앙년감’에서 ‘영화년감’을 별도로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적 모든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 장르로서 대중을 상대로 한 호소력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개인적 취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 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도 하고 정서교양도 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지침으로 삼는 ‘영화예술론’(1973)에 의하면, “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 감정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배우는 단순히 연극자가 아닌 구체적인 공산주의 사상 감정·생활체험 등을 미적·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재현하는 노동계급적 예술가로서 연기하도록 요구

된다.

대부분의 북한영화는 긍정전형(肯定典型)과 부정전형(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시로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강화되어,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감화로 오류를 시정하는 스토리도 주요 테마가 되었다.

영화는 1960년대 천리마운동 이후 대형화되어, 20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제작되는 등 방대한 작품 제작에 치우쳤다. 그러나 시리즈물이 해외영화제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1987년에 제작된 <보중>도 기존 북한영화의 틀을 깨뜨리고 북한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권위주의·토대와 성분에 따른 인간차별 등을 표현하였다. 신(申) 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그러한 변화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자주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는 원래 10부작으로 계획됐으나, 김정일의 지시로 50부로 늘어났으며, 2002년에 다시 100부작으로 제작이 확대되어 2006년 70부작까지 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한영화는 ‘선군혁명문학예술론’에 따른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반영한 작품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군사 관련 영화이다. 2003년도 대표작으로는 <이어가는 참된 삶>이 있다. 이 영화는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1968년) 당시 전사한 병사의 자녀와 그 주변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이 외에도 <그들은 제대병사였다>와 <여병사의 수기> 등이 2003년에 제작된 대표적 영화이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영화작품으로 <그는 대좌였다>와 <젊은 여단장> 등 이른바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실천하는 모범군인의 삶을 그린 영화와 비전향장기수 김선명의 삶을 그린 영화 <내 삶이 닳을 내린 곳>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06년에 상영된 <한 여학생의 일기>와 같이 경제난 이후 자본주의요소 투입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사상이완 세태를 반영한 영화 등이 사상교육 강화 차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서는 신상옥·최은희 씨가 북한에서 제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7편과 이훈구의 시나리오로 만든 <봄날의 눈석이>, <생의 흔적>, <자연에게 물어보라>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들이 사실주의적인데다 비교적 정치성·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풍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동맹권을 중심으로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라지꽃>, <민족과 운명(1, 2부)>, <먼 훗날의 나의 모습>이 대상격인 '햇불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0년에 개최된 제7차 축전에는 처음으로 일본영화가 상영되었다. 2002년에는 제8차 축전이 개최되었는데,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 침몰 사건을 다룬 <살아있는 령혼들>이 햇불 은상을 수상하였다. 8차 축전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팝 가수 마돈나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에비타>가 출품되었다.

북한에서 연극은 가극에 비중을 두고 있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용과 노래 등을 곁들인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는 북한연극은 1980년대에 들어 대작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데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등이 대표작이다. 이들 연극들은 모두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혁명연극'으로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새롭게 각색된 것이다.

1978년 6월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에 음악·무용 등을 가미하여 대규모 무대



○ 북한에서 인기를 끈 예술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의 한 장면

에서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공연된 〈초식〉, 〈어머니와 아들〉 등의 연극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주제와 사상을 심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단막극, 경희극 등과 같은 가벼운 코메디인 희극공연이다. 희극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반전하고 웃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서 활발히 공연되고 있다.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코메디극인 〈우리〉(2005년, 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제작)가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 ● 『조선중앙년감』 2003-6.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2004, 2005, 2006, 2007.
- 강운빈, 『인간개조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 1990.
-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 김지수, 『북한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서울교육대학원 연구노트 제 16호.
-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 한백, 1989.
- _____,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백, 1990.
- 김형찬 등,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 이현순, 『사회주의 영화예술 건설』, 평양 : 문예종합출판사, 1998.
- 문화관광부,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방법론 연구』, 1998.
-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1996.
- 박태상, 『북한문학의 동향』, 깊은샘, 2002.
- 북한, 『문화예술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 _____, 『조선영화』, 1992.
- _____, 『김정일 저작집』(제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과정안』, 평양 :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96.
-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한울, 1999.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제1권, 자료원, 1995.
- 연합뉴스, 『북한연감』, 연합뉴스사, 2001~2006.
-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1999.
-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의 예술』, 윤기관 외 『현대북한의 이해』, 법문사, 2004.
- 임채욱, 『통일문화와 북한문화의 가치성』, 문화방송, 1998.
- 집필위원회, 『사회주의 교육학 : 사범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1991.
-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예술』, 역락, 2004
- _____, 『북한의 사회와 문화』, 역락, 2005
- 조정아, 『북한의 교육 : 체계와 문화』,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자료집, 2005.
- _____, 『북한의 노동인력개발과 체계 : 형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좋은 벗들 (편),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 2000.

통일부, 『북한인민학교 교육 및 학생생활』, 199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북한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19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 문화교류 방안』, 1998.

_____,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1998.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1999.

한중모 등, 『주체의 문예이론의 기본』, 평양 : 문예출판사, 1992.

북한이해 2008



북한 주민의 생활

제1절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제2절 북한 주민의 여가와 명절 | 제3절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제4절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 제5절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

7

고성호 | 통일교육원 교수

Key Point

Point

1 북한 주민은 오전 8시경에 일과를 시작하여 오후 5시경이 되면 공식적 일과를 마친다. 과거에는 정규 일과 후 추가 노동 및 정치학습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직장에 따라 생활총화를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근하면 장사나 텃밭을 경작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Point

2 북한 주민은 만 7세가 되면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노동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그리고 인민반 조직 등에 평생 소속된다. 그러나 최근 조직활동이 이완되고 개인활동이 증가하는 등 조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Point

3 북한 주민은 전통적으로 의식주 등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배급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중단되면서, 의식주는 거의 모든 부문을 가게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하였다. 최근 최악의 상황은 극복되었으나,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Point

4 북한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을 쇠거나 신앙을 갖는 것이 힘들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속명절'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세워지고 사찰이 복원되는 등 외형상 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듯하나, 실제로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Point

5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공식적 규범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받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상적 생활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식량배급이 중단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제1절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분단 60년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우리와는 다른 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하루생활, 생애과정, 그리고 조직생활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하루생활 접근법은 기상에서 취침에 이르기까지 하루의 일상사를 시간대별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생애과정 접근법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활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조직생활 접근법은 북한 주민이 전 생애과정에 걸쳐 참여해야 하는 조직활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1 북한 주민의 하루생활

어느 사회나 하루생활은 연령과 직업 등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주민의 통상적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6시경에 기상한다. 여자는 아침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빠른 시간에 기상한다. 기상 후 세면을 하고 아침식사를 한다. 아침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일반 주민은 잠곡밥이나 강냉이밥을 주식으로 한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적 찬이며, 계란 부침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는 주민은 생활형편이 나은 경우에 속한다.

식사가 끝나면 출근준비를 하고 보통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은 평양 등

북한주민의 하루일과	
시 간	주요 활동
06:00	기상
06:00~07:00	아침식사, 출근준비
07:00~07:30	출근
07:30~08:00	독보회, 생활총화
08:00~12:00	오전작업
12:00~13:00	점심식사
13:00~17:00	오후작업
17:00~17:30	퇴근
17:30~22:00	저녁 식사, 부업 등
22:00~	취침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출근하면 독보회 및 당 지시사항 전달, 그리고 생활총화 등 당정치 사업을 한다. 독보회는 약 30분간 진행되는데, 직장에 따라 독보회 시간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최근 들어 생활총화가 일과 후에서 일과 시작 전으로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데, 직장에 따라서는 8시 일과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생활총화를 하기도 한다.

정규 작업은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13시에서 17시까지 4시간으로 총 8시간이다. 12시에 오전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직장에 인접한 동료 집에서 먹기도 하고,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먹기도 한다. 주로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먹으며, 여유가 있는 집안은 김밥에 감자볶음, 소시지를 먹기도 한다. 상당수의 주민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밥, 빵, 파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팔 음식을 준비하는 등 개인 장사를 위한 활동을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집으로 가는 도중 나물, 돼지풀, 채소 등을 채취하고 집에 도착하면 가축(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 등)에게 먹이를 주며, 농장에 나가기 전까지 텃밭에서 잔일을 한다.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중 특징적인 현상은 오침시간이다. 오침시간은 주로 행정직·전문직·사무직 등 정신노동을 위주로 하는 '사무원'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침시간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잡담을 하는 등 노동 없이 중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후 5시가 되면 거의 모두 퇴근한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오전에 퇴근하는 노동자도 많이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도 일찍 퇴근하는 경향이 높다. 농장원의 경우 일의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는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하는데, 2~3일에 한 번씩 조퇴하여 자신의 텃밭에 전념하는 농장원이 늘고 있다.

퇴근하면 개인시간을 갖는데, 전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대체로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먹는다. 저녁식사는 아침식사와 비슷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는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시간에는 남자의 경우 집 수선을 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자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하고는 장사를 나간다. 농장원들의 경우, 텃밭에 가서 김을 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땀감을 하기도 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여가생활은 주로 TV 시청이다. TV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보급상태가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우 여러 세대가 모여 TV를 시청한다. 통상 22시경에 취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생애과정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예외 없이 출생-성장-노화-사망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생물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는 생물학적 단계에 따라 사회적 단계를 설정하는데, 유아기-성년기-노년기는 모든 사회가 인정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단계는 각각의 사회에 따라 인정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의 경우 청소년기와 중년기가 인정된다. 북한의 경우도 청소년기는 인정되고 있으나, 그 기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인다. 학제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하면(우리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청소년으로서의 기간은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중년기는 서구 사회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단계로 여겨지는 경향이 높다. 우리 사회도 서구의 영향을 받아 중년기의 지위와 그 현상적 특징에 대한 관심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단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단계의 변천은 '통과의례'를 거치게 된다. 통과의례란 특정인이 어느 한 사회적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및 공표하는 의례적 행위이다. 북한 주민의 생애과정과 각 과정별 통과의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생 : 아기가 태어나면 세대주는 주거지 분주소(파출소)에 찾아가 출생신고서 양식을 받아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민반장의 확인을 거쳐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등록을 하며, 다시 분주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구역·군) 인민보안부에서 확인을 받아 직장 식량 취급자에게 제출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지, 성명, 생년월일, 성(性),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등을 기록한다.

유아기 : 백일잔치는 하지 않거나 간소히 하지만, 돌잔치는 제대로 치르려고 노력한다. 아이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이가 4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 유치원에 들어간다.

이동기·청소년기 : 6세가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4년간 교육을 받는다. 10세가 되면 중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높은반(5세)에서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가 북한에서 말하는 '전반적 의무교육기간'으로 총 11년이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가입하며, 중학교 4학년이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집단생활을 하면서 정치학습을 받는다.

성년기 : 중학교를 졸업하면 크게 대학진학, 군입대, 그리고 직장배치 등 3개의 진로가 있다. 대부분은 군대에 가거나 직장배치를 받으며,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직통생'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생활 혹은 군대생활 중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기도 한다.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배치된다.

결혼 : 북한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은 연애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중매혼 전통이 많이 남아 있다. 배우자를 찾을 때 결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그 기준도 출신성분보다는 애정과 경제적 능력으로 변하고 있다. 혼수는 대체로 여자가 장만한다. 예식장은 따로 없고, 공공회관이나 신랑의 집에서 식을 올린다. 결혼식이 끝나면 공원 등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한다. 신혼여행은 없으며, 신랑의 부모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휴가는 1주일이지만, 보통 3일 쉬고 출근한다.



○ 결혼식 모습

노년기 : 1960년대에 김일성이 '60청춘 90환갑'이란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갑이 사라졌으나, 1970년대 부활되었다. 회갑에는 온 가족이 모여 주로 '이밥'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다. 북한의 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없으면, 공원 등에서 소일하거나, 손자를 돌보기도 한다. 노년층은 배급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이다.

사망 :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약 70세였으나, 1998년에는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이전의 평균수명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장례는 보통 1~2일장이며, 상복은 따로 없고, 남자는 검은 완장, 여자는 흰 리본을 꽂는다. 1970년대에는 화장이 강요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장이 일반화되었다.

3 조직생활

북한사회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집단주의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북한 주민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직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린이는 출생 후 3개월 정도가 되면 탁아소 생활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익히게 되고,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공식적인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성인이 된 이

후에도 노동당이나 직업총동맹과 농근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야 하며, 직업이 없는 '가두여성' (전업주부)인 경우 여성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1] 소년단과 청년동맹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노동당의 직접 통제를 받는 조직생활은 만 7세가 되는 소학교 2학년 때 시작된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모두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입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단 입단식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김일성 생일) 그리고 소년단 창건기념일인 6월 6일 등 3차례 진행된다. 결국 모든 학생이 입단할 때까지는 친구 간에도 소년단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구분되는데, 먼저 입단한 학생은 자부심을 갖는 반면 입단을 하지 못한 학생은 열등의식을 갖는다.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먼저 입단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성분도 좋아야 한다.

먼저 입단하는 아이들의 경우, 입단식 자체도 거창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맹세를 받아 읽게 한 뒤 붉은 머플러와 휘장을 달아주는 행사를 갖는다. 입단식에는 시(군·구역)의 간부들을 포함하여 항일 빨치산 운동이나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훈장을 받은 노인들이 참가하여 입단하는 아이에게 직접 붉은 머플러를 매어 주면서 자부심을 심어 준다. 입단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사회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조직생활을 충실히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소년단에 입단하고 난 뒤에는 학교 소년단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실천하는 등 조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여야 한다. 각 학교에는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조직담당 위원장과 사상담당위원장 등 학생간부가 있다. 학교 소년단위원회는 학급별로 특정 과업을 수행하라고 지시하며, 학생들은 조를 짜서 이를 관철하여야 한다.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파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과업의 예이다. 또한 소년단의 날인 토요일에는 분열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소년단 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만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 소년단 입단식

만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칭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에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교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추가적으로 시(군·구역)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합격을 하여야 최종적으로 소년단의 표지인 붉은 머플러를 풀고 청년동맹 가입식을 거쳐 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맹원증이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게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허리에 차고 다닌다.

청년동맹은 북한 당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이는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청년들을 “선군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라고 규정하면서, 청년동맹조직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청년영웅, 총폭탄영웅으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소년단과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하여 조직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영향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시(군·구역)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지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 등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 평정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2] 노동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이라면, 노동당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이다. 북한의 체제상 노동당은 국가보다도 상위조직으로서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려고 하지만, 소수의 선택된 주민만이 당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당에 입당하려면 1년 동안의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당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세포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자격유무를 결정하면 지역 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예외적으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화선입당(火線入黨),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당원으로 활동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이다. 한 직장에 당원이 5명이 안 되면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노동당 가입자는 청년동맹에서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입당하지 못하면 30세까지 청년동맹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30세가 되어도 입당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자는 직업총동맹(직총)으로, 농민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직업총동맹 산하에는 세부 직업별로 직업동맹(직맹)이 구성되어 있다.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는 전업주부가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민주여성동맹(여맹)으로 소속을 옮긴다. 농촌의 경우에는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생활을 하여야 한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조직생활은 크게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등으로 구성된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으로 수요일 저녁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강연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과 당원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당원반과 근로자반을 높은반과 낮은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의 정책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교시'와 '혁명노작'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습과정안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생활총화는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모임으로서, 대체로 1주일에 한 번씩(주총화) 조직별로 개최한다. 생활총화를 할 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 및 '말씀'을 근거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한다.

[3] 인민반의 가두조직

북한 주민은 소학교에서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이 없는 노인들은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생활을 하고 대다수 '가두여성'(전업주부)들은 여맹활동과는 별도로 인민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인민반은 대체로 20~40세대로 구성되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동별로 인민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민반을 구성하는 세대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원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세대주인 남자들은 각각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당이나 근로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민반 활동은 주로 노인이나 전업주부인 가

두여성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인민반에서는 인민반장의 지도 하에 학습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고 생활총화를 진행하는 등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있는 조직활동을 한다. 그리고 각 인민반별로 배정된 과업을 수행한다. 인민반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의 지시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민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생활에서 빠지거나 과업 수행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돈이 주요 생활수단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과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북한 주민은 조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공식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이사를 위해서는 공식적 통제기구 외에도 인민반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에 이르기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활동에 대한 평정을 잘 받아야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직장에서의 승진도 마찬가지이다. 조직생활에 불성실할 경우 '자유분자'로 낙인찍히는 등 동료나 주민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으며 생활총화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직생활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제2절

북한 주민의 여가와 명절

1 여가

북한 주민은 생산 활동은 물론 조직활동에도 참여하여야 하며,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 등으로 인해 하루일과 중 여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사정으로 인해 일찍 취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가를 생산과 취침 이외의 활동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여가가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도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규 노동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하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북한 주민도 기회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긴다. 북한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 : 여행은 여전히 통제된다. 시·군 구역의 경계를 벗어날 때는 여행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체제가 안정적이던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개인적 용무의 여행허가증은 좀처럼 발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혼여행이나 기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적 여행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다만 학교나 직장의 추천을 받아 단체로 여행을 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통행증이 비교적 쉽게 발급되고 불법적 여행도 묵인되는 등 여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여행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의 유통도 가능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의 여행은 대부분 장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여가로 보기는 힘들다.

영화(연극) : 영화(연극)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활동이다. 과거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연평균 관람 횟수는 8~9회에 달하였다. 오미란, 홍영희 등 인민배우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에 방 2칸짜리 주택을 배정받으며, 화장품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따로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평양을 중심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팬레터(‘공연축하 성과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단체로 극장에서 관람했는데, 최근 단체관람의 빈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TV 시청 : 북한 주민이 가장 즐기는 여가활동은 TV 시청이다. TV 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모여 시청한다. 최근 전기사정이 열악해지면서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정전에 대비하여 축전지를 준비한다. 최근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 등 남한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으며, 함경남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남한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노래 : 음주가무는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온 여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친구의 결혼식 등 행사가 있을 때 노래를 많이 부른



○ 노래방

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 등 정치성 있는 노래, <사랑 사랑 내 사랑> 등 연속극 주제가, <휘파람> 등 서정가요가 대표적이며, 비공식적 모임에서는 <그 때 그 사람> 과 <사랑의 미로> 등 남한의 노래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최근 우리도 즐겨 부르는 <두만강>, <짚레꽃>, <홍도야 울지마라> 등 흘러간 노래가 ‘계몽기 가요’ 라는 명목으로 해금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다. 평양에는 노래방(‘화면 반주 음악실’)도 있으며, 직장에 따라서 노래방 기기가 보급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음주와 흡연 : 북한 주민들은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한다. 과거 술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결혼과 장례 등 계기가 있을 때 특별 배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배급이 중단되면서 권력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정규 공장에서 만든 술(‘국주’)을 마시기 힘들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마시는 술은 가정에서 만든 밀주인데, 이를 ‘민주’ 라고 부른다. 우리의 막걸리와 유사한 술은 농가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농태기’ 라고 부른다. 북한 남성들의 흡연률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흡연을 한다. 그러나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여성은 드물다.

취미 : 북한 주민도 등산과 낚시 등 취미생활을 하며, 축구나 배구 등 스포츠를 즐긴다. 낚시는 북한 주민이 즐기는 주요 취미활동의 하나인데, 낚시를 통해 잡은 물고기는 북한 주민이 즐기는 안주감이다. 배구는 직장에서 일이 없을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대표적 스포츠이다. 강이나 해안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며, 평양에는 볼링장도 있다. 평양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외국인과 특정 계층만이 즐기는 예외적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북한 주민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취미활동으로는 독서와 주패놀이(트럼프)가 있다. 장기와 바둑을 두는 주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적 오락이라고 하기 힘들다.

2 북한의 명절

북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은 주로 일요일과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명절은 크게 국가적 명절, 경축기념일, 국제 경축일, 그리고 민속명절로 나눌

북한의 명절	
날 짜	명 칭
1. 1	(양력) 설 (신년)
(1. 1)	(음력) 설
(1. 15)	(음력) 정월대보름
2. 16	김정일 생일
3. 8	국제부녀절
4. 15	태양절 (김일성 생일)
4. 25	인민군 창건일
5. 1	국제노동자절 (5.1절)
7. 27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8. 15	해방 기념일
(8. 15)	(음력) 한가위
9. 9	정권 창건일
10. 10	노동당 창당일
12. 27	헌법절

수 있다. 북한에서 편찬된 ‘조선 말대사전’ (1992)에 의하면, 국가적 명절은 “나라와 민족의 융성 발전에서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은 북한 최고의 명절이다. 경축기념일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기념하는 날로서 식수절(식목일), 6.6절(소년단 창단일), 교육절, 광부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기념일은 “국제로동계급과 세계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로서, 국제노동자절(5월 1일)과 국제부녀자절(3월 8일)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민속명절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즐겨오던 설, 정월대보름, 추석 등을 일컫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일컫는다. 김일성 생일의 경우 1962년 50회 생일을 기하여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고 명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몇 년 동안 공휴일로 지키지 않다가 1968년에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였으며, 60회 생일이 되는 1972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였다. 김일성 사후인 1997년에는 이 날을 ‘태양절’로 정하고,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 생일의 경우는 1975년 2월 1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명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해인 1976년 ‘국가적 명절’로, 그리고 1995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였다.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다른 명절과는 달리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등 행사가 다채롭고, 특별 배급품을 공급한다. 언론 매체에서는 이 날을 전후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하편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는 등 온 세계가 함께 이 날을 축하한다고 선전한다. 또한 이 날이 되면 “백두산에서 눈보라가 불다가 아침 해가 솟을 무렵 갑자기 멎었고 밀림도 잠잠해져서 장쾌한 해돋이가 펼쳐졌다”는 등 각종 신비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고 선전한다. 이 날이 되면 특별배급품으로 사탕, 과자, 돼지고기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 날이 특별배급품이 없는 ‘껌데기 명절’과는 다르게 인식한다.

이 외에 국가적 명절로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해방 기념일, 정권 창건일, 노동당 창당일, 그리고 헌법절이 있다.

민속명절은 양력설과 음력설, 정월대보름, 그리고 한가위(추석) 등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명절이다. 민속명절은 1967년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철폐되고 양력 설 하나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1972년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를 허용하는 등 전통명절을 부분적으로 부활시키기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음력설, 한식 등도 민속명절로 지정하였다. 2003년에 음력설을 앞두고 김정일은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기본명절로 하고 정월대보름도 하루 휴식하며, 단오와 추석을 예전의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속명절이 되면 북한은 북한 전역에서 옷놀이와 농악무·민족음식 품평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씨름경기를 개최하는 등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대다수 주민들은 민속명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민속명절을 진정한 명절로 생각한 적이 없고, 명절이라고 특별한 놀이를 했던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다만 설날이 되면, “새해를



○ 북한의 설날 장식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나누며,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다. 제사를 지낼 경우에도 벽에 걸려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올리고 난 뒤 차례를 지낸다.

● 제3절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로서 노동력을 제외한 생산수단은 오직 국가 혹은 협동단체만이 소유하며, 개인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이다. 생산수단이 집단적으로 소유될 뿐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생산물은 공동의 소유가 되며 따라서 의식주 등 생활필수품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소비된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에서의 상거래가 묵인되고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에 따라 일부 농지(텃밭)의 개인 경작을 허용하면서 의식주 생활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배급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평등분배’의 원칙은 명목적으로만 작용할 뿐 의식주 및 기타 생필품을 차별적으로 공급해 왔다. 북한은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누고, 공급등급도 매일공급대상자, 1주공급대상자, 2주공급대상자, 인민반공급대상자로 세분하여 물자를 차별적으로 배급해 왔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배급을 달리한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에게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지방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급한다.

1 식생활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의식주’로 불러왔던 관용적 어구를 북한에서는 1980년대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 상 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근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중반부터 ‘식의주’ 라고 표현해 왔다. 그만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1982년 김일성은 “쌀은 곧 공산주의”라고 말하면서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정일도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

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북한 주민의 식량구입에는 크게 2가지 방법, 즉 국가의 배급에 의한 방법과 스스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의 배급에 의한 방법은 북한 주민의 전통적 식량 조달 방법이다. 원래 북한의 배급체계는 1일 식량공급량을 연령과 직업에 따라 총 9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이는 영아에게 주는 분량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데,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공장·기업소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배급표와 배급카드를 기준으로 식량배급을 받는데, 배급표는 보통 15일에 한 번씩 받는다. 해당 주민은 지정된 날짜에 식량공급소에서 배급을 받는다. 공급일은 매달 1일~6일, 8일~13일이며, 7일과 14~15일은 공급소가 쉬는 날이다. 이런 일정은 하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배급표의 모양						
3급 700g 11월 상순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도, 시, 군〉 식량 량정과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자료 : 좋은 벚들,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2000, 정토출판, p. 69.



○ 대북지원에 의한 식량분배

배급표 왼쪽에는 해당 노동자의 급수와 1일 식량 공급량, 배급시기, 배급소의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각각 하루 공급량을 적은 15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직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지난 15일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한 횟수를 합쳐 해당하는 분량만큼 배급표의 작은 부분(‘눈깔’)을 떼어내고 준다. 무단결근 하루와 3회 지각에 각각 1일치의 배급량을 공제한다.

연로보장을 받는 노부모와 직장에 배치되기 전의 자녀들, 전업주부로서 세대주의 부양을 받는 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누어 준다. 세대주가 지각이나 무단결근으로 배급량을 공제당한다 하더라도 피부양인들의 배급량은 15일치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를 통해 배급을 받는다. 각 농민이 받는 결산분배량은 작업반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작업반에서 원래 계획의 80%를 달성하면,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는다. 따라서 분배량은 작업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작업반에서는 같은 분배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체계가 와해되면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세대당 30~50평 정도의 텃밭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는 채소와 감자 등 농작물을 가꾼다. 돼지나 염소를 키

우는 농민도 증가하고 있다.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거나 농장에서 식량을 훔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주민들도 텃밭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식량을 구하는 곳은 주로 장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으며 대부분의 생필품은 장마당에서 거래된다. 장마당은 사실상의 '암시장' 역할을 한다. 물자는 다양하고 풍족하지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는 없다.

2 의생활

배급제도는 의생활 분야에도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다.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에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의복 배급 또한 식량과 마찬가지로 중앙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누는 등 급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앙공급대상자는 고급 모직물을 배급받는다. 특히 예술가와 기자, 교원 등 특수집단과 당 및 내각의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히 좋은 옷감과 의복을 공급한다. 그러나 급수가 낮아질수록 반모직이나 그보다 질이 나쁜 옷감을 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 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판매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입한다.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의복의 공급은 식량보다 먼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의복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데 익숙한 북한 주민들은 의복은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서 구해 입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학생복은 아직도 배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2년에 한 벌씩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최근에는 국정 가격으로 공급한다. 국정가격은 장마당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만, 공급물량이 모자라 학생복 구입도 대체로 장마당에서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은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명목으로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쓰고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북한 여성은 현재에도 주로 치마·저고리를 입지만 남자가 한복을 입는 관행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블라우스와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후의 일이다. 특히 외국인과 해외 교포의 왕래가 많은 평양·원산·청진 등 대도시 주민들은 양장을 많이 한다.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언급한 후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는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1990년대 들어 그 영역이 머리모양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다.

북한 주민의 복장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일명 평양축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차림새는 북한 주민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외국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새를 흉내 내는 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졌으며,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 ‘삼각머리’, ‘채양머리’, ‘오사리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족전통’이 강조되면서 매체에서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칭송하는 등 전통적인 복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북한 여성의 옷차림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생활고로 인해 옷을 여러 벌 구입하는 일은 쉽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의 옷차림은 남루할 정도였으나, 최근 옷차림이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점퍼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이 일반적이며, 주로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 젊은 여성의 경우 세트기를 이용하여 머리를 손질하고 가볍게 화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이 든 여성들의 경우 머리 모양이나 화장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3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거주한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호에서 특호까지 모두 5개 유형으로 배정한다. 1

하모니카 주택 : 원래 명칭은 회랑식 아파트. 층마다 후면으로 단일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복도를 따라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달려 있기 때문에 속칭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부른다.

입사증 :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 주택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가 배정하며, 새 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입사증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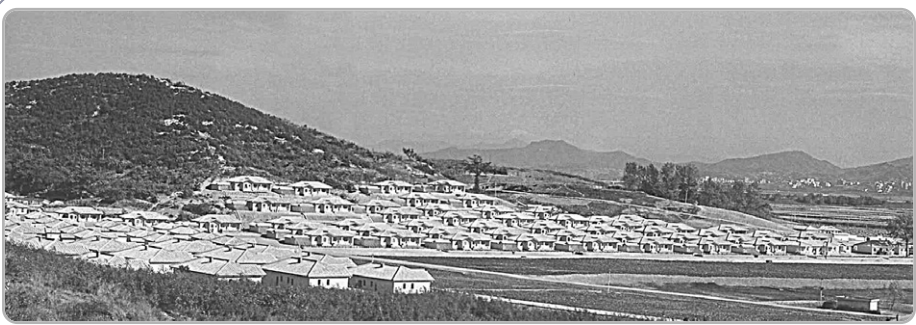
호로 분류되는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그리고 협동농장원은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문화주택을 배정받는다. 2호인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를 배정받으며, 3호인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을 배정받는다. 4호인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은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베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그리고 특호로 분류되는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은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주택을 배정받는다. 주택배정은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경우 직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을 배정받는다.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체육인에게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동에 위치한 원통형 아파트와 함께 개인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일반주민의 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도 입사증이 나올 때까지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파트 한 채에 2세대가 더불어 사는 ‘동거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택의 문제 중 하나는 시설의 취약성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색도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주택사용료 명목으로 전기·수도세를 내야 한다. 북한의 주택에는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는 실제 사용하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1달을 기준으로 40와트 짜리 전구는 얼마, 텔레비전은 얼마, 녹음기는 얼마 하는 방식이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정전에 대비하여 축전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은밀히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며 결국 실제 전기 사용량과 사



○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농촌주택

용료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북한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묵인하는 실정이다.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입사증을 받아 주택을 배정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동거인으로 등록한 뒤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택을 옮기기 위해서는 원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주민들은 주택의 소유권은 없지만 돈만 있으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선풍기·사진기나 녹음기 등을 말한다. 가구는 개인별로 장만해야 하는데, 권력층의 경우 5장 6기뿐만 아니라, 외제 가구와 가전제품을 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경우 5장 6기를 다 갖추기는 힘들다. 신부가 시집을 갈 때 2장 3기만 갖추어도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이다.

● 제4절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해방 당시만 해도 북한지역은 남한에 비해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유명한 사찰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독교와 천주교 역시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었던 지역으로 신도의 수도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1950년에 펴낸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해방 당시 북한에는 천도교도 약 150만 명, 불교도 약 37만 5천 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 명 등 약 200만 명의 종교인이 있었다. 이는 당시 북한 인구의 22.2%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의 종교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월남하거나, 전쟁 당시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고, 남아 있던 종교인들도 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형상 북한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헌법에도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등 종교단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종교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1 종교관

북한의 종교에 대한 견해는 마르크스의 종교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는 부르주아의 지배 하에 있으며, 따라서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역할을 정당화하고, 착취계급의 혁명의식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다 때, 이는

종교가 사회 착취구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종교관도 종교를 아편으로 보며 기껏해야 봉건시대의 낡은 잔재인 미신에 불과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1981년에 펴낸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 하느님 등과 같은 자연과 사람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의지해서 살게하며 이른바 저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는 그러한 조직... 역사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인민을 속이고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근대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다.”

종교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은 1985년 출판된 ‘철학사전’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철학사전에 의하면,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라는 김일성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어떤 형태의 종교이든 현실이 인간의 의식에 환상적으로 왜곡되어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전체가 허위적’ 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종교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에 대한 정의도 일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1992년에 출판된 ‘조선말대사전’에는 종교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가치중립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회적 인간의 지향과 념원을 환상적으로 반영하여 신성시하며 받들어 모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 신이나 하느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를 믿고 따르며 그

에 의지해 살아갈 때에만 온갖 소원이 성취될 뿐 아니라 래세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교한다. 원시종교로부터 시작하여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수많은 종교와 그의 크고 작은 류파들이 있다.”

종교에 관한 북한의 헌법 규정도 바뀌어 왔다. 1972년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반종교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누구든지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개정헌법에서 종교를 억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종교활동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북한에 종교가 없다는 주장이 결코 자량이 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조롱 및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자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종교를 대남교류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남한과의 대화를 전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을 계기로 남한과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인도적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북한 종교단체의 활동도 보다 활성화되었다. 셋째는 종교활동이 북한의 체제안전에 과거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그동안 종교활동은 매우 위축되었으며, 지배자의 통치권이 절대화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적 도전세력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2 종교생활

현재 북한의 대표적인 종교단체로 활동하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나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은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조직되었다. 그 뒤 1980년대 들어 재외동포 종교인을 북한에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카톨릭교협의회’(전 조선천주교인협회)와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몇몇 단체

가 새로 만들어졌다. 1988년에는 평양에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 해에도 역시 평양에 칠골교회를 건립하였다.

불교계에서도 1988년 5월,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탄절 법회를 처음 시작한 뒤 매년 열반절과 성도절 등 불교의 3대 기념법회를 개최하여 왔다. 특히 남한 불교계의 도움으로 1999년 이후 계속해 온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을 마무리하였는가 하면 금강산 신계사 복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59개 사찰에 대한 단청사업도 진행 중이다. 신계사 복원 작업은 4년여 간에 걸친 공사 끝에, 3층석탑만 남아있던 옛터에 예전의 모습을 복원하고 2007년 10월 낙성식을 가졌다.

러시아 정교도 최근 북한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2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순방했을 때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하여 북한에 성당을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가 하면, 2003년 1월에는 러시아 정교 신부가 평양을 방문하여 성탄절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였다. 2006년 8월에는 평양에 러시아 정교회 성소인 정백사원이 건립되었다.

북한이 종교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서 부분적이거나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1989년에 김일성대학교 역사학부 산하에 종교학과를 설치하고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 5대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가르치고 있다. 2003년 3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 4명이 조선



○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2004. 11. 20)

그리스도교연맹 주관으로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공부한 바 있다.

그러면 북한에도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존재하는가? 북한의 강지영 조선종교인 협회(KCR) 상임위원은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외부 종교단체나 인권기관들은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북한을 가장 혹독한 종교탄압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5~7만 명의 신도들이 수용소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종교가 있다면 김일성주의만 존재할 따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종교 관련 통계를 조사해 공개하는 ‘어드히런츠닷컴’(adherents.com)은 북한에 주체 사상 신봉자가 약 1,900만 명 있으며, 이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전통적 종교에 이어 세계 10대 종교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도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가서 종교활동을 해본 종교인들은 북한의 신도들이 찬송가를 모를 뿐 아니라 성직자들도 종교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된 종교활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오랫동안 정치교육을 통해 종교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대부분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지도자를 ‘무섭고 악착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 제5절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

북한 주민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명목으로 조직화 되어 있지만, 구체적 생활에서는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직생활이나 기타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공식적 규범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경우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정치학습 등 조직생활에 참가해야 한다. 성인들의 경우도 노동당을 포함하여 각종 직업동맹과 여맹에 가입해야 하며,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인민반 조직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조직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일상적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낮아지고 조직생활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조직생활에서 핵심을 이루는 생활총화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기계의 부속품처럼’ 돌아가던 일상적 조직생활도 느슨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 결근하는 주민들이 많을 뿐 아니라, 출근한다 해도 상당수가 조퇴를 하며 오후 5시만 되면 대부분 퇴근한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일과 후 시간 등 여가가 있으면, 장사를 하거나 텃밭을 경작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열중한다.

제도적으로는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한 여행도 과거에 비해 다소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통행증 발급이 이전보다 쉽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뇌물을 통해 통행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단여행도 자주 발생한다.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숙식 등 여행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다. 인구의 이동에 따른 정보 유통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북한 주민들은 비록 구

체적이지는 않지만 세계의 흐름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도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동포’라는 전통적 인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의식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의 삶에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도전을 안겨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쌀밥과 고기는 차치하고, 잡곡밥과 강냉이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나물국을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영양실조와 아사자도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이 모자란 상황에서 옷과 주택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치라고 할 수 있다. 입던 옷과 가재도구를 내다 팔기도 하고, 주택 입사증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사를 하거나 텃밭을 넉넉히 일군 사람들은 그나마 중국제 치약과 칫솔, 비누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몸을 청결히 하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면서 “다수확 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는 여전히 어려운 주민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도전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배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이는 동조적 적응과 일탈적 적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조적 적응은 주로 체제를 유지하는 기관, 그 중에서도 상층부를 접하는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일탈적 적응은 일반주민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상당수의 권력자들도 뇌물수수와 물자유용 등 일탈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한편,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느 정도 생활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생활이 이완되고 여행도 과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텃밭 개간과 장사 등 개인적 경제활동은 예전에는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북한 주민들도 자신의 노력 하에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삶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가

장 대표적인 성공적 적응 유형은 장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사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초보적이거나 시장 생활에 편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장차 북한 주민의 삶의 방식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의 변화를 지속할 것인가? 북한 사회가 안정을 이루면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 체제 자체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 예로 2005년 10월부터 실시된 식량 국가관리제를 들기도 한다. 식량 국가관리제는 식량을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고 오직 국가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 식량을 포함한 생활필수품이 국가의 배급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점에서 배급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를 보면 과거로 회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식량 국가관리제의 경우도, 국가가 식량을 공급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식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 주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북한 당국도 통제 → 묵인 →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에는 텃밭 경작이 묵인되었으며, 2002년 7.1 조치를 실행하면서 제도화되었다. 실제 많은 주민들은 협동농장보다 자신의 텃밭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장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배급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3년에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북한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종합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7.1 조치에서 도입한 물가와 임금은 장마당에서의 물가 및 노임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주민의 상행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전통적 하루생활에서 정치학습 및 생활총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물론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정기적으로 정치학습과 생활총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시간도 오후에서 오전으로 옮김으로써 일과 후 북한 주민이 부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밑으로부터(bottom-up)의 변화가 어느 정도 제도적 변화를 수반할 것 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사회의 속성상 위로부터(top-down) 제도화되지 않은 주민생활은 다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 여부는 좀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체제유지가 최우선적 관심사이며 북한사회의 변화가 자신의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향후 변화요인으로는 체

제 내부로부터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환경의 변화 등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북한 주민의 자율성이 증가할 경우, 북한 주민의 변화요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실패한 북한이 성공적 경제 발전을 이룬 남한과 어떠한 경제협력 관계를 열어갈 것인가? 그리고 핵문제와 인권 문제 등 외부로부터 오는 정책변화의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북한 체제의 장래는 물론 주민의 생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일탈」, 정영철 고성호 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공사, 2005.
- 고영환, 『평양 25시』, 고려원, 1993.
-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2000.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 남대현, 『청춘송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년감』, 1987.
- 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5 (1949. 1-1950. 6)』, 1980.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992.
- _____, 『철학사전』, 1985.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995.
-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1.
- 연합신문, “북 강지영 KCR 위원 ‘북도 종교 자유 있다.’” 2007. 5. 9.
- 이영화, 『평양 비밀집회의 밤』, 동아출판사, 1994.
- 좋은 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토출판, 2000.
- 최주환, 『북조선입구 I』, 지식공작소, 2000.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 통일교육원, 『다가서는 남북, 준비하는 통일』, 2000.
- _____, 『북한이해』, 2003.
- _____, 『북한이해』, 2002.
- _____, 『북한 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1996.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 _____, 『2000 북한개요』, 1999.
- _____, 『1995 북한개요』, 1995.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참고 문헌

북한이해 2008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 1945-1960*, London Hurst & Company, 2002.

2008 | 북한이해

- 발 행 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 인 쇄 일 | 2008년 4월 25일
- 발 행 일 | 2008년 4월 30일
- 디 자 인 | 늘품플러스 / 02)2275-5326
- 편집·인쇄 | 양동문화사 / 02)2272-1767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